

2022년 정세전망과 한국 대선2

2022년

봄호

연남동에서	이재명 후보는 탁월한 행정가·정치인인가
특집	창궐하는 인민주의: 지속불가능한 경제정책과 반지식인주의 노동 없는 대선? 20대 대선이 페미니스트에게 던진 질문
노동운동사	사회주의 운동, 식민지 시대 노동자·민중의 각성을 이끌다
페미니즘읽기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풀지 못한 문제들: 사랑, 여성, 가족
책소개	‘민주주의 붕괴’가 보내는 경고의 신호 중국식 경제성장의 이면과 그 정치적 의미 욕망을 걷어내고 바라 본 한국고대사

계간 사회진보연대•2022년 봄호•통권 178호

2022년 정세전망과 한국 대선2

계간 사회진보연대 • 2022년 봄호 • 통권 178호

2022년 정세전망과 한국 대선

발행일 | 2022년 2월 21일

편집 | 임필수, 김성균, 김진영, 김진현, 조유리

표지 | 상호정

발행인 | 임필수

발행기관 | 사회진보연대

등록일 | 2019년 6월 4일

등록번호 | 용산, 바00067

주소 | 서울 마포구 동교로29길 14-1 거산빌딩 3층

전화 | 02-778-4001, 4002

팩스 | 02-778-4006

ISSN | 1599-2284

납권 | 1만 5천 원

정기구독 | 연 6만 원 [기업은행 208-155464-04-026 사회진보연대]

구독문의 |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http://www.pssp.org>

계간 사회진보연대 • 2022년 봄호 • 통권 178호

2022년 정세전망과 한국 대선2

연남동에서	이재명 후보는 탁월한 행정가·정치인인가	4
특집	창궐하는 인민주의: 지속불가능한 경제정책과 반지식인주의	23
	노동 없는 대선?	47
	20대 대선이 페미니스트에게 던진 질문	72
노동운동사	사회주의 운동, 식민지 시대 노동자·민중의 각성을 이끌다	93
페미니즘읽기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풀지 못한 문제들: 사랑, 여성, 가족	134
책소개	‘민주주의 붕괴’가 보내는 경고의 신호	159
	중국식 경제성장의 이면과 그 정치적 의미	174
	욕망을 걷어내고 바라본 한국 고대사	198

연남동에서

이재명 후보는 탁월한 행정가·정치인인가

2015~2016년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탄생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물망에 오른 것은 언제쯤일까. 뉴스를 찾아보니 한국갤럽이 2015년 4월 10일 발표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후보군에 올랐다. 갤럽은 매월 예비조사에서 여야별로 자유응답 4위까지 선정해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당시 선호도 1위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22%, 2위는 박원순 서울시장 12%, 3위는 안철수 의원 11%였다. 즉 야권이 1, 2, 3위를 모두 차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광역단체장도 아닌 기초단체장이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는 사실이 매우 이례적이었다. (바로 이 시점이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때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가 2015년 2월 13일에 시작되어 3월 26일 마감되었고, 단 하루만인 3월 27일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했다. 그 후 컨소시엄은 시행사로 '성남의 뜰'을 설립했고, 성남의 뜰에서 자산관리회사로 화천대유를 선정했다.)

어떻게 이재명 시장이 여론조사 대선후보 명단에 오를 수 있었나? 당시 언론을 보면, “이재명 시장이 최근 무상급식 중단으로 화제가 된 홍준표 지사와 정반대의 복지정책을 펴고 있어 뉴스메이커가 될 수 있었다.”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차상위 130%는 이미 국비로 무상급

식을 지원한다”면서, 전면 무상급식을 축소하는 대신 서민 자녀의 교육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 3월 23일 이재명 시장은 페이스 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홍준표 지사님, 밥과 공부는 선택 문제가 아닌 (자치단체장의) 능력 문제입니다.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

4월 3일자 《한겨레21》은 ‘요즘 뜨거운 남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승부수’라는 글을 실었다. 기사는 이재명 시장이 홍준표 지사와 논쟁을 넘어서, 보편복지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그것은 바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인데, 이에 대한 젊은 층의 호응과 지지가 크다고 전했다. 기사는 1월 15일 성남시가 발표한 ‘공공성 3종 세트’도 자세히 소개했다. 안전 분야의 성남시민순찰대, 의료 분야의 성남시립의료원·100만 시민주치의제도·무상공공산후조리원, 교육 분야의 무상급식·무상교복이다. 덧붙여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후 3년 6개월 뒤 “이제 다 갚았다”고 선언함으로써 재선에 성공했다면서, 그를 ‘논쟁과 주목을 즐기는 시장’, ‘전략가이자 승부사’라고 칭했다.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특별한 이슈가 없자 5월에 0%대로 내려갔지만, 6월에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다시 2%로 상승했다. 이때 이재명 시장은 6월 6일 성남시 거주자 메르스 양성반응 환자의 직장, 거주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재명 시장의 정보공개는 큰 논란을 낳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장이 자기 지역 시민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고, 어떤 의원은 “정치인이 감염병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을 옹호하는 여론도 상당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게 근거였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6월 19일 <2015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라는 행사에 참여해 “기본소득의 도입을 검토한 결과, 청년배당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아주경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통틀어 한국 최초로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성남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와 연계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 지지율은 7월에 3%, 8월에는 4%로 꾸준히 상승했다. 7월 31일 《프레시안》은 ‘이재명 시장이 뜨는 이유’라는 기사를 냈는데 부제가 ‘모험 즐기는 도전적 리더십’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7월 13일부터 1주일 동안 SNS에서 이재명 시장을 언급한 문서는 4만여 건으로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표, 안철수 위원장에 이어 4위를 차지했고, 특히 문 대표, 안 위원장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재명 시장에 관한 뉴스 언급량은 문재인 대표의 20%이므로, 뉴스관심도 대비 SNS 언급량은 압도적 1위인 셈이었다.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 해서 SNS 스타가 되었나. 그는 2014년 9월 “세월호 실소유자는 국정원이라 확신한다”고 썼다. ‘정의로운 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말만 말고 고발하시오”, “거 참 말 많네. 그냥 고발하라니까”라는 글을 연거푸 올렸다. 2015년 7월에는 국정원에서 휴대전화 해킹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매한 일이 드러난 후 국정원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자 “아무리 봐도 유서 같지 않네”라는 글을 올리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8월에는 북한이 연천군 인근의 대북확성기에 포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이재명 시장은 “북에서 먼저 포격? 연천군 주민들은 왜 못

들었을까”라는 글을 올리며 논란을 벌였다. 이재명 시장은 “국민의 합리적 의문과 의혹 제기를 괴담으로 몰아 입을 막는 것 또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10월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청년배당 사업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이재명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기초노령연금 약속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맞받아쳤다. 성남시 수준의 청년배당 사업이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순간이었다.

이런 식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은 3~5%대를 유지했다. 2015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속 정치인의 SNS를 한데 모은 ‘SNS 스크랩’ 사이트를 열었는데, 여기서 ‘희망스크랩’으로 불린 대선주자 6명으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이재명을 꼽았다. 2016년 4월 총선 선거운동 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심판과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면서 “우리에게는 문재인, 박원순, 손학규, 안희정, 김부겸, 이재명 등 기라성 같은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시장은 계속 이슈를 생산해냈다. 2016년 1월 성남 시의회가 ‘성남시 3대 복지사업’, 즉 청년배당(113억 원), 무상교복(25억 원), 공공산후조리원(56억 원) 경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지 않은 채 의결했다. 사회보장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운영방안을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 법제처는 협의가 복지부 장관의 합의, 동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성남시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성남시

가 거부했다. 경기도는 이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2년이 지나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된 후, 2018년 7월 경기도는 이 제소를 취하했는데, ‘셀프 취하’라는 평을 들었다.

이재명 시장은 2016년 6월에는 광화문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10일간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행정자치부가 법인지방소득세의 약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가난한 시군에 재분배하고, 시군에 조정되는 조정교부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더 많이 배분하기로 한 방침을 정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선봉에서 서 반발한 셈이었다.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꼭 짊어 공격하고 있다는 식으로 구도를 세웠다. 그는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체계적이고 집요한 공격이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총공세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성남시처럼 말 안 듣는 곳은 근본적으로 손을 보자는 거다”라고 말했다. 농성장에는 붙은 현수막은 “김대중 대통령이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키우고 박근혜 대통령이 죽이는 지방자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성남 외에 수원, 화성, 용인, 고양, 과천 6개 시 주민은 6월 11일 광화문에서 시민문화제를 열기도 했다. 단식농성이 영향이 있었는지, 이재명 시장의 지지도는 7.4%를 기록해, 야권에서 문재인, 안철수에 이어 3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6월 20일 《미디어 오늘》에 ‘더 많은 이재명이 필요하다’는 글을 실었다. “이재명은 지방자치 행정가로서, 정치인으로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고”, “청년 배당, 무상 산후조리, 무상교복 지원 등 가난하고 소외된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독심 있게 밀고 나갔다”고 평했다.

이재명 시장은 7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도 후보 물망에

올랐다. 당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2.7%로 1위를 차지해, 추미애 의원 10.5%, 송영길 의원 10.3%보다 앞섰다. 하지만 그는 시장으로 소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불출마를 선언하여, 《오마이뉴스》는 ‘이재명 더민주 불출마가 아쉬운 이유’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만약 그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12월 말까지 당 대표에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관측도 나왔다. (8월 대의원대회에서 추미애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되었다.)

9월에 들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가 불거지면서 철웅성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자 문재인, 김부겸, 안희정, 이재명 대선모드’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이재명 시장은 “2-6위가 연합하면 1위(문재인 전 대표)를 제칠 것 같다. 그게 이재명일 수도 있고...”라며 경선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렇지만, 9월 중순 《연합뉴스》는 ‘대선주자 지지율 4개월째 정체’라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등 선두권 3강 주자도 정체상태고, 이재명 시장도 2~4% 정도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결정적 반전의 계기가 찾아왔다. ‘최순실 의혹’이 연일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10월 중순에 이르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선 아래로 떨어졌다. 처음으로 20%대 국정수행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때 대통령 탄핵을 처음 언급한 인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10월 13일 그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면서 “이런 야만적 불법행위와 권력남용을 자행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대상이 아닌가요”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는 이재명 시장도 탄핵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10월 14일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현해 “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 제로, 거기다 역량을 소진할 순 없어요.” 그러다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 건을 보도하면서 비선실세 의혹이 폭발했다. 그러자 이재명 시장도 10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해야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야권에서도 최종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탄핵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해야,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10월 29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최로 광화문에서 1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때 이재명 시장은 연단에 올랐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즉각 해야해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은 11월 초에 10%를 돌파하게 된다. 두 자리 대의 지지율을 지닌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탁월한 지방자치 행정가이자 정치인인가

2015~2016년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 후보로, ‘정치적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재명 시장 본인의 SNS, 언론 플레이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 뉴스를 꼼꼼히 보면 몇몇 생소한 언론사가 이재명 시장을 띄우는 기사를 꾸준히 냈고, 《한겨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과 같은 ‘진보언론’에도 이재명 시장을 대선 후보군에 올리자는 오피니언이 계속 올라왔다. (위에서 언급한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의 표현을 쓰자면) 이재명 후보가 ‘탁월한 지방자치 행정가이자 정치인’이라는 게 그 근거였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할까.

첫째, 탁월한 지방자치 행정가라는 이미지는 이재명 시장 본인이 선언했던 모라토리엄을 3년 반 만에 극복했다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했

다. 그러나 정말로 모라토리엄이 불가피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차렉트 체크가 이뤄졌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전임 이대엽 시장(한나라당)이 판교특별회계에서 5200억 원을 갖다 썼는데, 돈을 빌려 준 국토해양부가 정산을 요구했지만 갚을 돈이 없어서 지불유예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강한 반론도 나왔다. LH공사나 국토부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적이 없다, 5400억 원을 일시 상환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는 350억 원 정도만 LH에 갚으면 됐다, 설사 일시상환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년 2000억 원의 초과이익이 나고 있었으므로 모라토리엄은 전혀 불필요했다 등등. 따라서 이런 반론에 따르면, 모라토리엄 선언은 전임 시장의 실패를 부각시키고,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전임 시장의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보편복지의 새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는 얼마나 타당할까. 공공산후조리원 이슈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의 수법’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해 민주당 경선평정에서 이낙연 후보는 “전라남도 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했다”고 주장했고,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지사가 된 후 전국 최초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했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제주도 서귀포시가 전국 최초고 2013년 3월에 개원했다고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계획을 처음 발표한 곳은 2011년 송파구였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가 말한 여주는 남경필 지사 시절에 착공한 것으로 경기도와 여주군이 예산을 분담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재명 지사의 말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의도된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시설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무상은 아니다. (당시 시점에 2주간 154~190만 원을 지불해야 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무상’ 조리원을 최초로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실현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역 간, 산모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미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이나 출산장려금을 확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성남 시 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시장이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한 실적은 없다.

그런데, 지난 해 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반대해서 싸우다, 싸우다 실패했다”,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 여주에 하나 짓고 포천에 짓고 있는 중”이라고 또다시 말했다. 이 역시 사실을 교묘히 왜곡한 것이다. 만약 성남시가 ‘무상’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만약 실패한 것이 ‘무상’ 조리원을 지칭한 것이라면, 경기도지사가 된 후에도 여전히 실패한 상태인데, (남정필 지사 시절 착공한) 여주 역시 ‘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산후조리원도 아닌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사회 복지정책에서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가, 당시 복지부와 이재명 시장 중 누구 입장이 타당했던가, 이런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아니다. 필자가 관심을 두는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전국 최초’라든가, “박근혜 대통령과 싸워 실패한 것을 도지사가 되어 성공했다”라든가,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천연덕스럽게 반복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무상 시리즈와 ‘반(反)박근혜’를 연결시키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2010년대 초반, 무상복지, 반MB, 야권연대

가 민주당의 선거승리 공식이 되었는데, 이재명 시장은 이를 계승해 성남시의 무상복지를 박근혜 정부가 가로막았다는 구도를 제시했다. 행정자치부가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자기를 꼭 찍어 탄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거부를 반(反)박근혜 투쟁으로 그려내고자 했다.

셋째, 청년배당을 통해 정부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했다는 주장은 얼마나 타당한가.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이 언제나 받을 수 있고(보편성), 그 사람의 활동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공되며(무조건성), 가족이나 회사가 아니라 나에게 지급된다(개별성)는 특징을 지닌다. (기본소득이 고용·복지 정책의 대안인가라는 문제도 이 글의 주제는 아니다. 사회진보연대가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자세히 다루었다.) 문제는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이 과연 기본소득 개념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상품권이 기본소득이냐는 문제도 있겠다.) 이재명 후보 식으로 말하면 다양한 종류의 현금성 복지에 모두 기본소득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노인 기본소득, 아동 기본소득 등등. 이재명 시장은 기본소득이 조세와 복지체계의 심대한 변화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금 복지를 ‘한국 최초 기본소득’으로 포장할 뿐이었다.

넷째, 이재명 시장의 메르스 의심환자 개인정보 공개는 정당했는가. 당시까지 정부 역시 주요 전파 경로가 완내 감염인지 지역사회 감염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모든 정보를 숨기기만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시장이 의심환자의 동선을 공개할 때, 전문가나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떤 노력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경솔하고 독단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최

근, 2022년 2월 18일, 이재명 후보는 광주 유세장에서 “밤 12까지 영업 해도 되는데, 혹시 (단속에) 걸리면 다 사면해주겠다”, “3월 9일에 선거 끝나면 3월 10일에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직 대통령이 아닌 당선자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발언 역시 대통령이라면 전문가나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의 발상을 잘 보여준다.

종합해보면 이재명 시장의 특징은 첫째로 발 빠른 모방전략과 네거티브다. 큰 틀에서 보면 각종 무상복지 시리즈는 이재명 시장이 처음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는 이를 재빠르게 모방하여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보이도록 언론 홍보에 큰 공을 들였다. 특히 이를 박근혜 정부와의 싸움처럼 보이도록 하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지자체의 각종 현금 복지 사업도 ‘기본소득’이라는 상표를 붙여 자기만의 것으로 바꾸고자 했다.

둘째, 발 빠른 모방전략과 네거티브에 능하다는 말은 곧 일관된 노선이나 정책이 없고, 정치공학적 고려에 따라, 즉 여론 상황을 뒤따라가면서 말을 계속 바꾼다는 뜻이다. 그는 박원순 시장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하다가 여론 상황이 바뀌자 광장에 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탄핵을 외쳤다. 가까운 사례를 보면, 코로나가 창궐한 후 그는 즐기치게 선별지원에 반대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만을 주창하다가, 윤석열 후보가 소상공인 50조 원 손실보상을 제시하자 별다른 설명도 없이 소상공인 ‘지원’을 들고 나왔다.

셋째, 그러면서도 그는 지도자의 능력, 지도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지도자의 결단, 모라토리엄을 빠르게 벗어난 지도자의 능력. 메르스 사태를 돌파해내는 과감한 결단과 능력.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는 철저한 계산에 따라 연출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정부 당국과 전문가와 협의는 완전히 불필요했다. 나아가 지도자의 능력, 의지를 강조하는 입장은 곧 ‘국가주의’와 연결된다. 지도자의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국가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1·5·5 공약(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세계 5대 경제강국)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학적 근거가 없다. 정치인이 의지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

넷째, 그는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함부로 언급할 수 없는 각종 ‘음모론’의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SNS 스타로 부상했다. 하지만 김어준 씨나 그를 따르는 일부 86세대가 심취한 음모론은 민주당 정치를 타락으로 이끄는 중대한 위협이다. 이재명 시장은 이런 음모론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포장하지만, 오히려 음모론이 합리적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김어준 씨는 줄리, 생태당 등, 수많은 사례에서 드러나듯 극악한 네거티브의 진원지가 되었고, 오히려 민주당 선거에 파괴적 영향을 끼쳤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여러 장점도 많은데 왜 김어준 씨의 생태당 이슈에 끌려다니다가 선거를 망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김어준 씨는 최근, 2월 18일에는 민주당 경선 마지막에 ‘신천지 10만 명이 이낙연을 찍었다’는 말로 또 다시 폭탄을 던졌다.

지금까지 2015~2016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 후보로 부상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탁월한 지방자치 행정가이자 정치가’라는 평가가 타당한가 따져보았다. 필자는 이재명 시장의 특징이 △발 빠른 모방과 네거티브, △일관된 노선과 정책이 없는 정치공학, 상황 추수, △지도자의 의지·능력에 대한 강조, 당국·전문가와 협의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 대한 무시, 경제학적 근거가 없는 국가주의적 믿음, △음모론적 선동이라고 꼽았다. 또한 이러한 그의 특질이 2022년 대선 후보로서도 분명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도 짚어내고자 했다. 필자는 이 모든 특징이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원리, 원칙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인민주의자’라는 규정과 정확히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일 잘하는 탁월한 행정가이자 정치인이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 * *

이번 특집은 지난 겨울호에 이어 ‘2022년 정세전망과 한국 대선’로 구성했다. 저번 특집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에 관한 글을 모았다. 첫 번째 글, 김진현의 ‘**창궐하는 인민주의: 지속불가능한 경제정책과 반지식인주의**’는 먼저 킬 세계경제연구소와 본대학 연구소의 분석을 소개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민주의가 창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1900년부터 2018년 사이 세계 주요 60개국, 1500명의 정치지도자를 분석한 결과, 인민주의 세력이 가장 강력한 시기는 2018년으로, 인민주의 정권이 들어선 곳이 25%에 달한다. 이 연구는 노무현 대통령을 우파 인민주의로 분류하는데, 그의 담론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핵심이 아니었고, 오히려 민족주의적 수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를 ‘역사 수정주의자’라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에 관해서는 신기욱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는데, 이 연구는 문 정부에 들어서 반자유주의적 행태가 인민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문 정부가 헌법과 민주주의에 적대적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새로운 파워엘리트로 자리 잡은 과거 민주화운동 세력이 민주주의의 후퇴에서 핵심 역할을 해서 충격적이라고 말한다. 또

한 저자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자크 비테가 어떤 점에서 라클라우와 무페의 '좌파 인민주의'를 비판했는가 설명한다. 첫째, 인민주의는 주류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지양하는 경제학 비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자본주의를 외치지만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대신 그저 부패했다고 비난할 뿐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혁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없고, 집권을 하더라도 막대한 재정지출로 생산의 토대를 무너뜨리거나, 쫓아냈던 경제관료를 복귀시켜 집권 이전으로 회귀한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반지식인주의는 과학적 토론과 논쟁을 억압하고, 전문가 사이에 합의된 과학적 진실을 정당한 비판 없이 무시하는 '반지식인주의'를 드러낸다. 저자는 현실 사례로 라틴 아메리카,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와 이탈리아 오성운동의 반백신운동을 든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대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 조세연구원이 지역화폐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자 연구원을 적폐로 낙인 찍고 엄중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권력으로 연구와 토론을 억압하려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는 기본대출 공약을 제시하며 현재 서민금융이 '족징, 인징, 황구침징, 백골징포'라 했는데, 현대 금융시스템에 대한 합당한 비판 대신 금융기관에 대한 증오만을 부추긴다. 그는 국가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며, 스스로 고통 받는 약자를 위한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말한다. 저자는 2022년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인민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결론을 맺는다.

노동위원회의 「노동 없는 대선?」은 대선후보의 고용·노동 분야 정책을 평가한다. 이재명 후보의 노동공약은 쟁점 중 빠진 게 거의 없고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는데, 많은 수의 노동계 전문가가 선거캠프에 참여

한 결과로 보인다. 심상정 후보는 가장 먼저 노동공약을 제시하고 열악한 노동현장을 방문하며 노동 이슈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1월에는 잠행에서 복귀하면서 “진보의 금기를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는데, 연공서열제 임금체제와 연금개혁이 그 핵심이 될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금기’를 크게 부각시키기보다는 주4일제와 같이 주로 정규직 노동자의 관심을 끌 만한 이슈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의 노동공약은 노동계에서 제기한 여러 쟁점을 담고 있고, 접근방식이 대체로 유사하다. 윤석열 후보는 거시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발전전략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를 강조한다. 또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제시하는데, 구체적 방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안철수 후보도 민간 일 자리를 강조하나 첨단기술 산업부문의 성장에 중점을 둔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제정책만으로 고용문제는 물론 ‘노동문제’라 불리는 쟁점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 현 정부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단시간 노동,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민간부문 비정규직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노동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직결되는 거시경제적 조건에 대해 무관심해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가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대규모 국채발행을 주장하고, 심상정 후보도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를 위해 증세와 적자재정을 찬성한다. 그런데 이를 강행하면, 국채가격 하락, 금리인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가계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는 1·5·5 시대(수출 1조 달러, 세계 5강, 국민소득 5만 달러) 공약을 제시하는데, 확장재정과 국가부채를 통해 단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을 실현하더라도, 곧 거시경제 침체와 외환위

기까지 올 수 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경우, 국민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등 취약 노동자의 처지가 자동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말로라도 ‘친노동’ 의지를 보여주는 후보 쪽이 낮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론적 근거가 없이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큰 부작용을 낳았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증명되었다. 이재명 후보와 한국노총이 맺은 정책협약에는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이 거부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약의 진정성도 신뢰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은 정부가 필요한 모든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기본소득을 지급해 소득격차를 메워줄 것이라 기대하기 전에,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공동의 임금단체 교섭과 투쟁을 통해 임금격차를 줄여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조합 내부의 혁신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대선이 ‘노동 없는 대선’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각 후보에게 있다기보다는, 노동자운동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김유미의 「20대 대선이 페미니스트에게 던진 질문」은 5년 사이에 여성 이슈를 둘러싼 풍경이 급변했다고 말한다. 2017년에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말처럼 여야 후보가 여성 유권자를 잡기 위해 분주했다면, 2022년에는 후보 대부분이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 부담스러워 한다. 심지어 가장 주목을 받는 이슈는 ‘여성가족부 폐지’다. 저자는 ‘이대남’(20대 남자)이 문재인 정부 시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집단이기 때문에 여야 후보가 주목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국민의힘은 가장 적극적으로 이대남 소구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윤석열 후보는 기존 여성가족부 정책이나 페미니즘 운동에 선을 긋되 여성과 남성의 이해를 절

충하고자 했다. “세대 간, 젠더 간 갈등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성범죄 처벌과 무고죄 처벌을 모두 강화하겠다고, 싱글맘처럼 싱글파파도 지원했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이수정 교수나 신지예 위원장을 영입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봉합하며 새로운 선본을 구성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이란 짧은 공약을 내걸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해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청년 유권자의 요구가 이준석 대표를 매개로 윤석열 캠프에 반영되었고, 1월을 기점으로 2030년 세대의 윤 후보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이대남 소구 전략이 효과성이 사후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안티 페미니즘 분위기에 편승하는 윤 캠프의 행보는 위험하다. 과연 오늘 여성의 현실이 ‘개인적 수준의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성 청년의 존재를 지우는 정치는 사회적 논의를 더욱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며 청년 세대의 갈등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이재명 후보도 지난해 11월 초 “이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주셔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이란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대남의 관심을 끌어볼까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기존 지지층을 잃을 위험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한 듯, 1월 초부터 여성정책을 발표하며 20대 여성을 공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여성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몇 가지 핵심적 이유가 있다. 첫째,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여성정치가 몰락했기 때문이다. 주요 정치인이 권력형 성범죄자가 되었고, 윤미향 의원에게 지기된 비리 의혹, 남인순 의원의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은 민주당은 물론 그와 협력적 관계를 맺어온 여성운동 전반을 위태

롭게 했다. 둘째, 이재명 후보 본인의 과거 행적이 걸림돌이 되는데, 예를 들어 변호사 시절 조카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 명명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크게 일었다. 셋째, 민주당이 상대 후보 배우자에 대한 여성혐오성 공격을 활용하거나 방치하고 있고, 여성운동 출신 정치인마저 ‘선택적 침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이 여성 인사 몇몇을 영입하여 그럴듯한 여성정책을 발표한다고 무너진 신뢰가 회복될 것 같지 않다. 페미니즘에 대한 현재 인식은 문 정부와 민주당, 여성운동의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 페미니즘 운동이 어려움에 부딪친 이유는 한 축으로는 민주당과 연계해 온 여성운동 전략의 과산인데, 여성가족부로 상징되는 전략의 목표, 내용,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 논의를 피할 수 없다. 다른 한 축은 2010년대 중반의 페미니즘 열풍이 급진주의 페미니즘으로 귀결된 현실인데, 이러한 전략은 피해자로서 여성의 위치를 강조하고 실천적으로 남성과의 분리주의로 연결되었다. 분리주의적 페미니스트는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보다 여성우선주의를 강하게 주장했고, 젠더 갈등을 가속화했다. 종합해보면, 현재 청년세대에게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이란 성별로 나뉘어 자기 몫의 과일을 챙기려 싸우는 ‘제로섬 게임’처럼 여겨진다.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은 2022년 대선을 거치며 우회할 수 없는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오늘날의 구조적 성차별을 무엇이라 설명하고 설득력 있는 해법을 제시할 것이냐는 문제부터, 페미니즘 운동이 ‘내 파이 되찾기’를 넘어 사회를 바꾸는 운동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기획연재, ‘소설과 함께 보는 노동자운동의 역사’는 식민지 시대를 다루는 세 번째 글로 김성균의 「사회주의 운동, 식민지 시대 노동자민중의 각성을 이끈다」를 신는다. 염상섭의 「표본실의 창개구리」, 심훈의

「동방의 애인」, 「불사조」를 통해 식민지 시대 사회주의 운동의 태동을 살펴본다. ‘페미니즘 읽기’로는 김유미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풀지 못한 문제들: 사랑, 여성, 가족」을 담았다. 지난 겨울호에 메리 게이브리얼의 『사랑과 자본』을 소개하는 글이 실렸는데, 그에 이어,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담게 되었다.

이번 호 책소개는 세 편이다. 상호정의 「「민주주의 붕괴」가 보내는 경고의 신호」는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를 다룬다. 조유리의 「중국식 경제성장의 이면과 그 정치적 의미」는 홍호평의 『차이나 붐: 왜 중국은 세계를 지배할 수 없는가』를 소개한다. 이진호의 「욕망을 걷어내고 바라 본 한국고대사」는 젊은 역사학자 모임에서 낸 『욕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 왜곡과 날조로 뒤엉킨 사이버역사학의 욕망을 파헤치다』를 다룬다. 앞으로도 회원모임에서 함께 읽었던 책이나, 읽기를 권유하는 책을 꾸준히 소개하고자 한다.

2022년 2월 21일

편집장 임필수

창궐하는 인민주의: 지속불가능한 경제정책과 반지식인주의 마르크스주의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김진현(정책교육국장)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정치학 교수인 야스차 몽크는 저서 『위험한 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면서, 인민주의자(populist)들이 세계 곳곳에서 집권하는 현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¹

그에 의하면 자유와 민주주의는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해야만 각자가 존속할 수 있다. 먼저 민주주의가 있어야 부유층과 권력자들이 저소득층의 권리를 짓밟을 수 없다. 또 자유가 존중되어야 사회적 영향력이 적은 소수집단의 권리가 보호되고 언론이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 이어진다.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문제가 생긴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체제에 비판적인 철학자를 처형하고, 정치적 연설부터 악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검열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현대에서는 인

1 야스차 몽크, 『위험한 민주주의』, 함규진 옮김, 와이즈베리, 2018.

민주주의가 강도는 약하지만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 민주주의 없는 자유는 자본가와 기술관료들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로 이어지는데, 신자유주의의 폐해 중 하나로 지적되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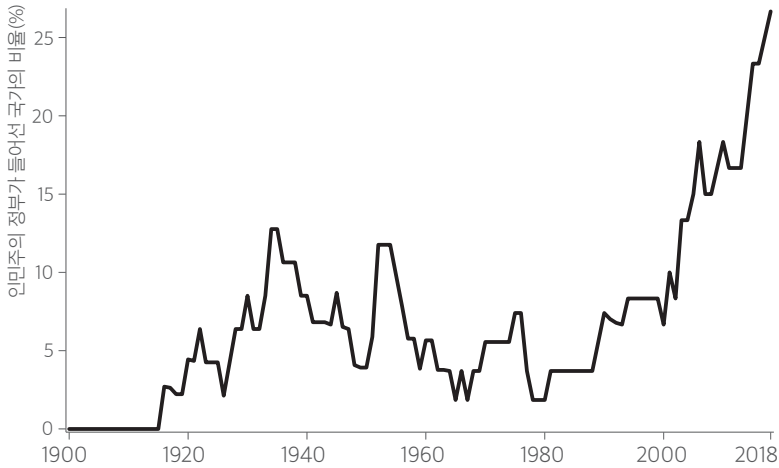
따라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어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대 이후에 오늘날과 같이 인민주의가 폭발하는 시대가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인민주의자들이 ‘엘리트’들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중을 선동하는 것이다. 그걸 상징하는 핵심 사건이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이라고 몽크는 이야기한다. 미국은 1829년부터 1837년까지 집권했던 앤드류 잭슨 이후 트럼프 등장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인민주의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적이 없다.

1. 인민주의의 세계적 창궐과

한국에서 인민주의자 대통령의 등장

인민주의의 세계적 창궐은 통계로도 증명되는데, 독일의 쾰 세계경제연구소와 본대학 연구소는 1900~2018년 사이 존재했던 세계 주요 60개국 1500여명의 정치지도자를 분석한 결과, 인민주의 세력이 가장 강력한 시기는 2018년이라고 결론 내렸다. 표본 국가 중 인민주의 정권이 들어선 곳의 비율은 2000년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15%를 넘은 적이 없었으나, 2018년에는 25%에 달한다.²

2 Manuel Funke, Moritz Schularick, and Christoph Trebesch, “Populist leaders and the economy”, No. 036. ECONtribute Discussion Paper, 2020.



표본 국가 중 인민주의자 집권 비율

킬 세계경제연구소는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95%를 차지하는 주요 60개국의 1500여 명의 지도자를 분석해 해당 연도에 인민주의자가 집권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프로 나타냈다. 1930년대 대불황 시기에 한 번 고점을 기록한 비율은 2000년대부터 급증해 2018년에 최고점을 기록한다. 통계치가 보여주듯, 2010년대가 인민주의가 역사상 가장 강성한 시기라는 사실에 이견을 제기하는 학자는 없다. (그래프 출처: Manuel Funke, Moritz Schularick, and Christoph Trebesch, “Populist leaders and the economy”, No. 036. ECONtribute Discussion Paper, 2020.)

몽크 교수는 인민주의자들의 등장이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국민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가가 정권을 잡는 일이고, 둘째는 그렇게 당선된 지도자가 ‘국민의 뜻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제도는 뭐가 됐든지 폐지하는 일이다. 이는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즉 한 당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는 일을 막고, 여러 집단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인민주의자들은 이를 무시하는데, 국민의 뜻은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소수집단을 배려하는 일은 부패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독립적인 기관이나 개인의 권리가 민중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할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민주의자였던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 문헌을 통해 국내외 학계에서 확립된 사실이다. 미국 정치학자 무데 교수와 칠레 정치학자 칼트바서 교수가 공저한 인민주의 개론서에도 “아웃사이더” 인민주의자의 예시로 언급될 정도다. 다만 그는 인민주의적 수사를 동원하는 정치가적 인민주의에 그쳤고, 실제 정책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 대표적인 게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었다.

앞서 언급한 킬 세계경제연구소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서술하면서 노무현을 우파 인민주의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자신은 개혁을 거부하는 기득권의 편이 아니라 대중의 편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호응을 끌어냈다. 대중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했으며, 단순하고 설득력 있는 담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인민주의자이자 역사 수정주의자’로 분류되는데, 민족주의적 수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노무현은 ‘민족정체성의 상징’들을 매우 강조했으며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수사에 크게 기대었다. 그는 또한 강한 반미 정서를 활용했으며, 일본과의 분쟁을 부추겼으며,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는 전략을 이용하기도 했다. 연구진들은 경제적 불평등은 그의 담론에서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파 인민주의자로 분류했다고 이야기한다.

2. 집권 86세대의 주류화와 본격적인 인민주의의 대두

그렇다면 노무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이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어

떨까? 아직은 연구 자체가 많지 않으나,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인민주의를 비판하는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인 사회학자 신기욱 교수는 2020년 《민주주의 저널》(*Journal of Democracy*)에 발표한 「남한 민주주의의 부패」라는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비판한다.³ 참고로 《민주주의 저널》은 독재자를 감별하는 정치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한 도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인 레비츠키 교수가 편집장으로 있는 학술지다.⁴ 신 교수는 한국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고 있으며, 민주주의적 규범이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 교수는 한국 정부의 반자유주의적 행태들이 인민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헌법과 민주주의에 적대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새로운 파워 엘리트로 자리잡은 과거 민주화 운동 세력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에서 핵심 역할을 해서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이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하면서 증오와 원한의 정치를 구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그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그가 지적하는 건 “적폐 청산”의 정치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정책이 바뀌거나 정책 결정자가 교체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기만 했던 관료들까지 모두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했다.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했던 외교부 관

3 Shin Gi-Wook, “South Korea's Democratic Decay,” *Journal of Democracy* 31,3 (2020): 100-114.

4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박세연 옮김, 어크로스, 2018.

료들, 201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개성공단을 폐쇄했던 통일부 관료들, 2015년 국정 역사교과서를 복귀시켰던 교육부 관료들이 대표적인 수사 대상이었다. 심지어 실무를 하던 공무원들까지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 수사는 전문성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평가 기준이었고, 공직자 윤리는 파괴되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지적하는 점은 시민사회가 정치화되었다는 점이다. 소위 386세대라 불리는 운동권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는데, 다수가 참여연대 출신이기도 하다. 이들은 자신들이 권력자가 된 후에도 “권력에 맞서 싸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중요 요소인 관용과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남한의 정치화된 시민사회는 정부의 권력을 제어하지 않고 있고, 스스로도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성으로 나타나는데, 심지어 이는 외국에까지 손을 뻗었다. 워싱턴에 위치한 싱크탱크 중에서 유일하게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는 한국 정부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끊겨 2018년에 문을 닫았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연구소의 소장과 부소장이 보수적이라는 이유로 해고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소가 이를 거부하자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신 교수는 또한 소위 ‘문파’라고 불리는 지지층들의 광신주의와 과격한 행동도 비판한다. 그들의 의견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 인터넷에 유포한다든지, 그들의 생각에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견해를 내비친 국회의원, 지식인들, 언론인들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집단으로 보낸다든가 사이버테러를 자행하는 행위다. 이 때문에 한국 지식인들은 자기검열을 하거나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

다는 것이다.

또, 그는 인민주의가 대두하면서 정치적 논리와 감정적 대응이 모든 것을 장악했으며, 전문가들의 견해는 무시되었고 이성적 토론은 실종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다고 지적한다. 많은 경제학자가 점진적 인상을 할 것을 권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 경제학자들이 “소수 특권계층”의 대변자라며 무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광신적 애국주의적 인민주의(Chauvinistic populism) 역시 한국에서 등장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순신 장군, 동학농민운동, 국채보상운동 등을 빈번히 언급하면서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일본과의 마찰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한일갈등이 2020년 총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서술한 민주당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신 교수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일, 조국 사태를 둘러싼 이중 잣대의 문제 등도 많은 지면을 할애해 비판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진보연대가 꾸준히 비판해온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시 다루지 않는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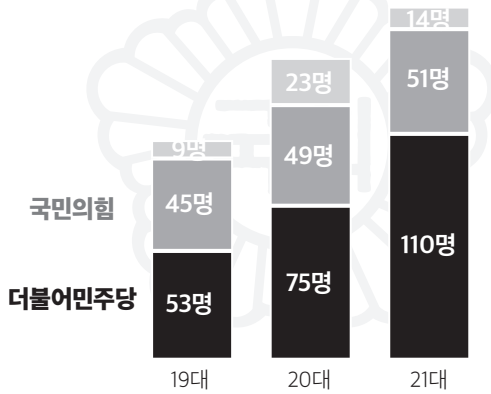
5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라.
임필수, 「검찰개혁인가, 수사기관의 과대팽창인가?」, 《계간 사회진보연대》, 2019년 겨울호.
임필수, 「민주당은 기어코 비례위성정당을 강행하려는가」,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0년 봄호.
사회진보연대, 「조국 논란과 개혁 세력 지식인들의 타락」, 《사회운동포커스》, 2019년 10월 10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인민주의자였으나 정책에서는 신자유주의로 일관했는데, 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정책 자체도 인민주의적으로 변화했을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론적 근거가 취약하고 현실성이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여러 번 국정 기조로 등장한 적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2017년에 처음으로 국정 과제가 되었다.

그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0년 봄호에 실린 「'집권 86세대'의 포퓰리즘」을 통해 사회진보연대는 '집권 86세대'에 주목한 바 있다. 86세대란 1960년대에 태어나서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운동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일컫는다. 특히 1987년에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학번들이 주류를 형성한다. 이 글에서는 2007~2009년 금융위기라는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상징하는 정세적 사건에도 주목하지만, 주체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제도권 정치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된 86세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86세대들이 주축이 되어 웅렬한 인물인 만큼, 이들이 정권 핵심부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언급되는 이들은 대부분 86세대로, '집권 86세대'의 주축이다. 최측근으로 분류되었던 '3철' 중 두 명이 86세대였고, 선거운동 참모조직이었던 '광홍창팀'도 13명 중 11명이 86세대다. 광홍창팀 중 10명은 청와대로 들어갔다. 국회로 눈을 돌려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86세대 국회의원은 19대(2012~2016)에서 107명이었지만, 20대에서 147명, 21대에서 175명으로 늘었다. 대부분 증가분은 민주당 86세대 국회의원 수 증가에 의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19대 45명, 20대 49명, 21대 51명으로 많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19대 53명, 20

국회 주류로 자리 잡은 86세대



86세대는 19대 국회에서 전체의 1/3 가량을 차지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과반수를 차지한다. 이는 모두 민주당 소속 86세대 의원들의 증가 때문인데, 21대에 이르면 이들은 전체 국회의원 중 1/3 이상을 차지한다. 86세대가 국회를 장악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상황이다. (그림 출처: 매일경제)

대 75명, 21대 11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고, 반일·반미 감정을 선동하는 발언이 정권 핵심부에서 돌출하는 이유는 모두 집권 86세대가 공유하는 정서와 맞닿아 있다.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86세대들은 대부분 민족주의적 통일운동의 경험을 공유한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일제시기부터 이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라 진단하고, 진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외세(미국)의 개입을 분쇄하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을 꼽았다. 이들과 다르게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그룹도 있었으나, 소수였고 주류가 되지 못했다.

통일운동 세력은 수적으로는 주류였으나, 현실 인식에 오류가 있었고 경제적 분석 없이 민족주의 정서를 이용해 운동을 했기 때문에 1990년대 들어서면서 대중으로부터 외면받고 쇠퇴했다. 그러나 86세대

들 중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지도부에 있었던 이들은 학생운동 경험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인맥과 경력을 활용해 민주당 핵심 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이제 조국 통일 대신 '반보수', '반기독권'이라는 인민주의적 개념을 활용해 지지자들을 결집시킨다. 동시에 여전히 학생운동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적 분석은 부재하고, 민족주의적 정서가 핵심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소득주도성장과 반일 민족주의로 귀결된 것이다.

3. 마르크스주의자의 인민주의 비판:

경제학 비판의 부재와 반지식인주의

그렇다면 한국에도 인민주의가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이 남아있는 유럽 국가에서는 인민주의에 맞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 세력이 미약한 한국에서는 인민주의가 계속해서 위세를 떨칠 가능성이 크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회운동이나 좌파 세력이 인민주의를 제어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인민주의가 수사와 정책을 기존 사회운동의 요구로부터 흡수하기 때문이다.

인민주의자들은 정치 엘리트의 권력 독점을 비판하고 인민의 권력을 주장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의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고 사회주의 운동 역시 쇠퇴하면서, 일부 좌파 지식인들이 인민주의를 정치위기의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인민주의로 전환하는 일이 발생한다. 인민주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자는 것인데, 이들에게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라클라우와 무페 같은

학자들이다. 그러나 라클라우와 무페의 입장은 마르크스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 이를 비판한 사람이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자크 비데다.

이제부터 자크 비데가 2019년 저술한 「현재 남부 유럽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좌파 인민주의」를 통해 마르크스주의자가 인민주의를 어떻게 비판했는지 살펴보자.⁶ 그는 여러 쟁점을 제기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그의 주장을 재구성해 보겠다. 경제학 비판의 부재와 반지식인주의다.

비데는 무페가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사회의 역사적 경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마르크스주의자가 사회구조를 이야기할 때, 경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주체의 측면에서 정치도 중요하겠지만, 경제적 구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한에서만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하지만 무페는 정치의 출발점이 정치라고 간주한다. 인민주의자로서 그에게는 주류경제학을 체계적으로 지양하는 경제학 비판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자본주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대신 단순히 부패했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적 생산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인민주의 세력이 엘리트들 대신 집권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과는 대체로 두 가지로 많이 나타난다. 생산에 대한 고민 없이 막대한 재정 지출을 통해 생산의 토대를 무너뜨리거나, 쫓아냈던 경제관료를 복귀시켜 다시 집권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바로 반지식인주의다. 반지식인주의는 과학

6 Jacques Bidet, "Marxism and Left Populism in Southern Europe Today," *International Critical Thought* 9.3 (2019): 365-375.

적 토론과 논쟁을 억압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부합하는 지식인만 옹호하며, 전문가 사이에 합의된 과학적 사실을 정당한 비판 없이 무시하는 흐름을 뜻한다. 인민주의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논쟁 없이 모든 반기득권 세력의 요구와 관점을 수용한다. 그런데 보통 특정한 사회의 지배적인 구조적 모순이 어떤 것인지, 어떤 요구가 먼저 실행되어야 하는지는 이론과 관점에 따라 결론이 천차만별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토론을 해보면 내부에 심각한 모순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반기득권 전선이 무너지기 쉬우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의 인민주의적 수사가 토론과 논쟁을 대체한다. 따라서 인민주의 정권의 정책은 과학적 비판에 의해 견제받지 않는다.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재정 지출은 화폐 발행이나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비데는 노동자계급이 소위 ‘엘리트’라고 인민주의자의 공격을 받는, ‘능력·자격을 갖춘 자’와 동맹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본가와 동일시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자본가들과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잉여가치 추구가 지상목표이지만, 이들은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다. 물론 단순히 ‘능력·자격을 갖춘 자’와 동맹만 형성하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에게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데의 입장을 인민주의 비판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자면, 노동자들이 지식인들과 동맹을 맺고 인민주의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변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노동자들은 지식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적 차이를 감축하고 육체노동과 지식노동의 분리를 극복함으로써 자본주의 또는 자유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들이 지식인들을 무

시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교류와 비판적 논쟁을 통해 넘어서고, 스스로가 지식인이 되어야 변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명료하다. 인민주의의 반지식인주의적 경향은 자유주의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변혁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쟁점, 경제학 비판의 부재와 반지식인주의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현실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4. 지속불가능한 경제정책을 통한 사회정책

인민주의자는 정권을 잡고 나면, 지지층의 요구를 ‘인민의 뜻’으로 해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장치를 극대화하여 활용한다. 알튀세르와 브뤼노프에 의하면, 자본주의적 국가 장치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진다. 첫째로 경제적 기능인데, 화폐와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이들 두 가지 특수한 상품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내에서 재생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인데, 가족과 학교를 통해 노동자들은 노동규율에 복종하고 민족의 일원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게 된다. 셋째는 억압적 기능으로 군대와 경찰을 통해 영토 내에서 폭력을 독점한다.

여기서 인민주의자가 핵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경제적 기능이다. 본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화폐의 재생산을 위해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각각 화폐정책과 재정정책을 구사하고,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서 사회행정기관이 사회정책을 구사한다. 인민주의자가 등장하는 시기는 경제위기 직후이거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사

회정책의 확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모든 종류의 사회정책에는 재정 지출이라는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사회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일단 증세가 필요하다. 또 어떤 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증세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민주의 정권에게는 경제학도, 경제학 비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정책의 비용은 무시하고 효과만 과대포장한 다음, 증세가 허용하는 범위를 심각하게 넘어서는 사회정책을 실행한다. 부족한 비용은 중앙은행을 이용해 화폐를 발행해 충당하거나, 국채를 발행해 다음 세대에게 떠넘긴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곳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다. 이를 전형적으로 정리한 것이 라틴 아메리카 경제 전문가인 세바스티안 에드워즈 교수가 1990년대에 정립한 모델이다.⁷ 이 모델은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는 생활수준 저하로 인한 대중의 불만을 등에 업고 집권한 인민주의 정부가 공공부문 지출과 화폐 팽창의 한계를 없애버린다. 그들은 재정 적자의 위험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화폐량을 증가시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핵심 근거가 바로 가동률 상승으로 인한 경제 성장 효과다. 이는 현대화폐이론(MMT)의 주장과 매우 유사하다.

2단계에는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기 부양과 실질임금 상승, 실업률

7 Sebastian Edwards, "On Latin American populism, and its echoes around the world,"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3.4 (2019): 76-99.

저하가 발생한다. 대량의 화폐를 공급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총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재고는 소진된다. 또한 외화 보유고를 수입 기업에게 공급해 수입 물가를 낮춘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시에는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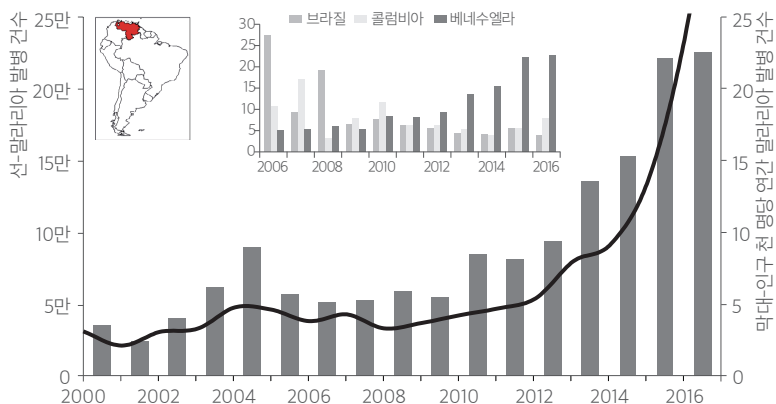
3단계에는 외화 보유고가 부족해지고 자본 도피가 발생한다. 외화 암시장이 생기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진다. 교통, 공공서비스, 음식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재정 적자도 지속해서 악화한다.

4단계는 물자 부족이 심각해지고 심각한 자본 도피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는다. 가격 통제 정책이 엄격해지고, 이를 어긴 소매업자들은 감옥에 갇힌다. 정부는 뒤늦게 보조금을 삭감하고 통화 가치절하를 시도하나,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 외채 부도의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하며, 실질임금은 빠르게 하락한다.

5단계에는 이 재앙을 수습하는 단계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주류경제학적 정책을 시행하고 국제통화기금이 개입한다. 실질임금은 인민주의 정부 집권 이전보다 훨씬 더 후퇴한 상태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차베스 집권 이후의 베네수엘라다. 차베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회정책을 대폭 확대하며 복지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석유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었다. 그가 실시한 사회정책은 모두 국유화한 석유 기업에서 비용을 조달했다. 생산 부문에서는 소생산자 협동조합과 지역 화폐를 결합한 모델을 대안으로 추구했다. 이 프로젝트는 '스페인 정복 이전의 사회주의'라는 신비화된 전자본주의적 과거로의 회귀를 목표로 했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집권 이후 몇 년간은 이 경제 모델이 유



베네수엘라 말라리아 유행

베네수엘라는 2010년대 들어 경제위기로 인해 식량난에 시달리고 보건의료 인프라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집도 없이 야의 생활을 하는 인구가 늘고, 모기약, 모기장, 말라리아 진단키트, 치료제 등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말라리아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인구 천 명당 말라리아 발병 건수가 201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16년에 이르면 2000년대 평균치의 4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추세와도 정반대인데, 2006~2016년 기간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감소한 반면, 베네수엘라는 크게 증가했다. UN 난민위원회는 2014~2018년 사이 15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이 다른 국가로 탈출했다고 추정한다. 이에 대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대응은 사실 은폐였다. 1938년 이후로 베네수엘라 보건부는 주간, 월간 역학 보고서를 발간해 감염병 상태를 꾸준히 보고해왔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4년 11월, 보고서 발간을 중단했고, 세계보건기구(WHO)에 각종 질병의 사망률과 유행률을 보고하는 베네수엘라 질병분류본부를 63년 만에 폐쇄했다. (내용 및 그래프 출처: Maria E. Grillet, et al., “Venezuela’s humanitarian crisis, resurgence of vector-borne diseases, and implications for spillover in the region”, *The Lancet Infectious Diseases* 19,5 (2019): e149-e161.)

지될 수 있었는데,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진 석유 가격의 상승세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을 기점으로 석유 가격은 하락세로 반전했고, 사회정책을 후퇴시킬 수 없었던 차베스 정부는 화폐 발행을 통한 재정 적자 충당이라는 늪으로 빠져들었다.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였던 재정 적자 규모는 2017년 31.8%까지 증가했다. 2018년에 이르면 전년 대비 화폐 발행량 증가율이 5000%에 이르고 인플레이션은

13만 퍼센트에 도달한다. 화폐가치 하락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1999년과 비교했을 때, 2013년 베네수엘라의 실질임금은 21% 하락했다.

물론 경제학 비판의 부재는 이런 전형적인 사례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인민주의 지도자가 실제 사회정책에 큰 의지가 없었던 경우, 재무부 관료들의 말을 듣고 공약을 모두 무효화시키고 여기에 반발하는 대중을 탄압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5. 반지식인주의와 반백신운동

반지식인주의는 인민주의 정치가와 지지자에게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엘리트에 대한 혐오가 인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반백신운동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반백신운동의 확산은 보건의료 위기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그런데 많은 국가에서 반백신운동은 인민주의와 함께 성장한다.

런던 퀸스메리 대학 케네디 교수가 2019년에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백신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많은 국가일수록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인민주의 정당의 득표율이 높았다.⁸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상관계수가 0.7222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최

8 Jonathan Kennedy, "Populist politics and vaccine hesitancy in Western Europe: an analysis of national-level data",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9,3 (2019): 512-516.

대값은 1), 이 중에서도 이탈리아는 눈에 띈다. 이탈리아에서 백신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의 약 18%였고, 인민주의 정당의 득표율은 40%를 넘었다. 이제 현재 이탈리아 집권당인 오성운동과 반백신운동의 사례를 통해 반지식인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자.⁹

최근 반백신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98년, 앤드류 웨이크필드라는 의사가 《란셋》이라는 유명 학술지에 MMR(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다. 이 논문은 연구자가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후원자에 반백신 재판을 진행 중인 변호사 한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웨이크필드가 새로운 홍역 백신 제작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연구진들이 실시한 추가 연구에서 MMR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아, 이 논문은 2010년 공식 철회되었다. 그러나 웨이크필드의 연구는 세계 곳곳에서 반백신운동의 과학적 근거로 쓰이고 있다.

이탈리아는 1930년대부터 4가지 백신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왔지만, 유럽에서 백신접종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였다. 위반 시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았고 지역 정부가 보건 정책에서 높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리미니(Rimini)시 법원이 공식적으로 2010년 철회된 웨이크필드의 논문을 근거로 MMR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공식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일이 있었다. 2년 후 밀라노 법원에서 같

9 이탈리아 사례는 다음 두 글을 참조하여 작성했다.

Natascha Rietdijk, "Radicalizing Populism and the Making of an Echo Chamber: The Case of the Italian Anti-Vaccination Movement," *Krisis* 41.1 (2021): 114-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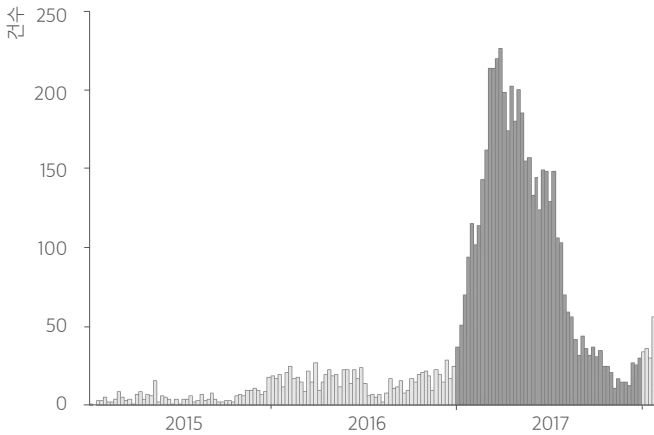
Jamie Mackay, "How Italy's 'digital populists' used the anti-vaccine agenda to propel themselves into power", *Political Critique*, March 8, 2019.

은 일이 벌어졌다. 이 판결들은 반백신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2010년대 들어 접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반백신 정서는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논란의 대상이 아니었다. 의무화된 백신이 4종류뿐이었고, 회피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오성운동의 창립자인 그릴로(Beppe Grillo)는 원래 코미디언이었는데, 1998년부터 백신의 효과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를 해왔다. 오성운동 초기에 그릴로의 블로그는 선전과 조직의 허브였다. 이곳에는 웨이크필드의 논문을 포함해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백신이 죽일 수 있다.”, “자폐증 유행”)이 많이 올라왔다.

2013년 오성운동은 25%의 득표율을 얻으며 의회로 처음 진출했다. 오성운동 정치인들은 백신이 위험하며, 제약회사의 음모가 숨어있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쳤다. 2015년에는 12명의 오성운동 의원들이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백신이 백혈병, 중독, 염증, 면역 억제, 유전 가능한 유전자 변이, 암, 자폐증, 알러지와 연관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의회 선거 후보자였던 오성운동의 페디치니(Piernicola Pedicini)는 2015년 “백신접종은 적을수록 좋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오성운동을 포함한 반백신운동의 열풍 속에 2013년에는 90%였던 홍역 백신 접종률이 2015년에 이르면 85%까지 하락했다. 홍역은 자연 면역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95%의 인구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백신 접종률 하락의 영향으로 2017년 1~8월 기간에만 홍역 감염자가 4400여 건 발생했으며, 이는 평년의 세 배가 넘는 수치였고 이 중 88%는 미접종자였다. 두 명이 심각한 부작용인 뇌염을 앓았고, 세 명의 소아가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이탈리아 주간 홍역 발병 건수 (2015~2018)

이탈리아는 2015년 홍역 백신 접종률이 85%까지 하락했고, 2017년에 홍역 유행을 겪었다. 이탈리아에서 홍역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255건, 861건만 발생했지만, 2017년에는 총 5098건이 발생했고 네 명이 사망했다. (그래프 출처: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Measles and rubella surveillance - 2017, Stockholm: ECDC; 2018.)

2017년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이탈리아 민주당(PD)은 여섯 개의 추가 백신을 포함해 10개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로렌진 시행령(Lorenzin decree)을 선포했는데, 이는 반백신운동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2018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성운동 정치인들은 시행령을 강력히 비난하고 자신들이 집권하면 이 시행령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움브리아주 주지사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오성운동의 리버라티(Andrea Liberati)는 이 시행령에는 대형 제약사들의 수익 창출이 숨어있다고 이야기했다.

오성운동과 연정에 참여했었던 북부동맹(Lega)은 2018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반백신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오성운동의 성공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들의 주장은 약간 달랐는데, 백신을 강

제하는 시행령이 “스탈린주의적”이며, 선택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나중에는 오성운동과 같이 백신무용론을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 집권에 성공하고 나서는 입장을 바꿨다. 처음에는 로렌진 시행령의 일부를 철회했으나, 나중에는 다시 복귀시켰다. 그러나 이들이 부추긴 반백신운동은 규모와 강도 면에서 모두 크게 성장했다.

최근 오성운동은 집권 전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대규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12세 이상 인구의 80%가 넘는 인구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반대 운동도 강력하다. 2021년 5월에는 반백신운동가 두 명이 백신 센터에 화염병을 던졌다. 2021년 10월 9일에 백신 패스에 반대하며 발생한 폭력시위로 30명이 넘는 경찰관이 부상을 입고 이탈리아 극우정당 새로운 힘(Forza Nuova)의 리더가 수십 명의 시위대와 함께 체포되었다. 시위대는 노동조합, 극우 깡패, 소셜미디어를 통해 집결한 반백신운동가들로 구성되었다. 시위대는 병원을 습격하기도 하고, 의회 문을 부수고 진입하려고 시도하는가 하면, 백신 접종에 우호적이었던 이탈리아노총(CGIL) 본부를 파괴하기도 했다.

6. 한국 사회는 인민주의의 늪에 빠질 것인가

2022년 대선은 향후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인민주의의 창궐에 맞서 싸우는 게 시급한 과제지만, 아직 한국의 자유주의 세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사회운동 역시 인민주의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마르크스주의가 해야 할 일은 경제학 비판 없는 경제정책과 반지식인주의의 위험성

과 모순을 폭로하면서, 반인민주의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인민주의자는 경제학과 경제학 비판에 모두 무관심하다. 특히 생산의 영역에 관심이 없고 잉여가치를 소비하는 데만 몰두한다. 인민주의 세력이 집권 이후 잘못된 경제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사회적 생산을 위한 물질 토대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생존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다. 과도한 화폐 발행은 화폐 가치와 실질임금을 떨어뜨리고, 무책임한 재정 적자는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려 자본 축적이 멈추게 된다.

생산한 노동생산물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소모된 생산수단을 보전하고 확대재산을 위해 축적하는 일은 자본가들이 주로 하는 일이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역설한 일이기도 하다. 인민주의자처럼 ‘국민의 이름으로’ 생산한 가치 이상으로 소비하는 일은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 현재 투표권이 있는 국민을 위한 정책의 비용을, 지금 투표권이 없는 미래의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반지식인주의 역시 마르크스주의자로서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 지식인들과 과학적 이론을 교류하지 않는 노동자는 변혁의 주체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주의적 지식인이라 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이론은 비판하고 논쟁해서 지양하는 것이지 무시하고 억압해서 안 된다. 마르크스주의는 고전과 경제학과 케인스주의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발전해왔다. 만약 마르크스가 고전과 경제학을 무시하고 무조건 반대하려고만 했다면 『자본』은 탄생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야스차 뭉크는 자유를 억압하는 극단적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인민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옹

호하는 그의 주장은 사회주의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지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주의적 소유권의 변혁을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같이 인민주의 정권이 탄압하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와 같은 편에 설 수 있다. 사회주의에도 자유는 필요하고, 노동자가 지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유는 오히려 자유주의보다 더 나아간 것이기 때문이다.

반지식인주의 비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려되는 것은 역시 민주당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여러 개의 역사왜곡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들이 모두 통과되면, 지금 주류인 민족주의적 역사해석과 다른 해석을 제시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보수적 역사해석이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마르크스주의적 역사해석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코로나 19 대응 당시 백신 구매를 서두르라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적이 있었으며, 2021년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 이후 확진자 급증세에 대응하여 긴급조치를 발동하라는 의료전문가의 주장을 묵살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의 정치화이자 반지식인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대선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인식도 우려스러운데, 권력으로 연구와 토론을 억압하려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개적으로 연구원을 적폐로 낙인찍고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다.

경제학 비판의 부재와 무책임한 재정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도 이재명 후보는 위험하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저리로 천만 원을 빌려

주겠다는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대 금융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합당한 비판 대신, 오늘날의 서민금융이 “죽징, 인징, 황구침징, 백골징포”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조선 후기 군역이 문란해져 양민을 광범위하게 수탈했던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군역을 회피하고 도망간 사람의 군역을 이웃 양민에게 부과하거나, 군역의 나이가 되지 않은 어린이나 죽은 사람에게까지 군역을 부과하던 것을 뜻한다. 이는 사실관계에도 어긋나고, 대안적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을 금융기관에 대한 증오로 대체한다. 한편으로는 국가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며, 스스로 고통받는 약자를 위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예산 기능을 청와대로 가져오겠다고 선언했는데, 견제받지 않고 재정 지출을 마음껏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분간은 인민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86세대를 매개로 지지층을 규합한 민주당의 세력이 단번에 사그라질 것 같지 않고, 민주당 외에도 인민주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민주의 세력은 민중의 불만과 사회운동의 요구를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어떤 세력에 반대하고, 어떤 주장에 찬성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은 정세다. 이 글에서 제기한 두 가지 주요 쟁점이 판단의 준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

노동 없는 대선?

대선후보 노동정책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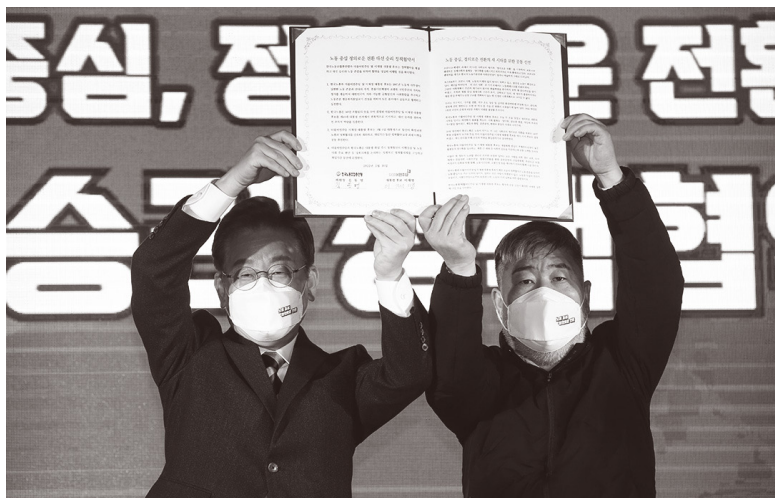
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회

이번 대선은 ‘노동 없는 대선’으로 불린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 이른바 ‘노동 문제’가 이슈가 되었던 데 비하면 이번에는 그다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때때로 윤석열 후보의 ‘주 120시간 노동’, ‘아프리카 손발 노동’ 같은 실언들이 부각되는 정도다. 그렇다고 각 후보가 노동 문제에 대한 정책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의 노동 정책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왜 이번 대선은 ‘노동 없는 대선’이 되었는지를 돌아본다.

1. 대선 후보들의 노동 공약

한국노총은 1월 말 ‘한국노총 대선후보 정책검증 및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게 정책질의를 보내고, 후보들에게 받은 답변을 전문가들이 검토했다. 평가결과는 이렇게 요약된다.



지난 2월 10일 한국노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지금은 대선 승리실천단을 구성해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사진출처 : 《매일노동뉴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한국노총 대선요구와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였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한국노총 정책요구 대부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대선후보 정책검증 및 평가 결과”, 2022년 1월 27일 보도자료.)

한국노총은 이후 대의원 투표(2월 7-8일)를 통해 이재명 후보 지지를 결정했고, 투표종료 후 2월 8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과 이재명 후보는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대선 승리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불평등끝장넷” 주최의 “노동·복지 분야 불평등·양극화 해소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2월 9일)에서 부위원장의 토론문 형식으로 각 후보들의 노동정책을 평가했다. 윤석열 후보 측이 이 토론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토론문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

한 구체적인 평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한국노총에 제출한 것과 다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가장 먼저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이미 1호 공약으로 “『신노동법』으로 ‘노동이 당연한 나라’를 여는 대통령”을 제시했다.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제정하여, 노동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주 4일제 도입, 비정규직 평등수당, 성평등임금공시제와 최고 임금법,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 원청 책임 강화 등 산재 예방과 상병수당 도입, 원하청 공동교섭과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보장제로 30만 개 이상 청년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공약을 제시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10대 공약에서도 노동기본권 보장과 일자리 공약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별도로 발표한 노동공약으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상사·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과 적정임금 제도, 산재 예방과 보상강화, 상병수당 확대, 노동회의소 설립,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실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에 대한 답변에서는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을 제시했다. 그 외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전국 확대,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 등을 청년 일자리 공약으로 제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약에는 ‘후보 말바꾸기’ 논란이 있었던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것으로 담았다. ‘돌봄국가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부각한 것도 특징이다. 한국노총과 체결한 정책협약서에는 그간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이 제기한 정책 요구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협약서에는 그간 민주당이 국회 입법과정에 난색을 표했던 정책들도 대거 포함했는데, 과연 후보 캠프가 당 내

대선후보 4인 10대 공약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1호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5·5·5 신성장전략으로 미래먹거리와 청년일자리 창출
2호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의 일할 권리와 기본권 보장	자주·실용·평화책임외 교전락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
3호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청년기회국가 건설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성차별·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미래사회 보장	공적연금 통합으로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수호
4호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기후위기·차별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	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하고 150조 원 손실보상
5호	돌봄국가책임제와 안전사회 실현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불공정 해소·경제개혁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내집마련
6호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국민 건강권 및 전 국민 돌봄 보장	부모찬스 수시 폐지, 학제개편으로 창의적 미래교육
7호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맞춤교육·문화 다양성·표현의 자유 보장	강성 귀족노조 혁파, 공정 시장경제 확립
8호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공동체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
9호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실행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특권과 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책임총리-책임장관제로 제왕적 청와대정부 혁신
10호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 안보 실현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평화와 협력, 새로운 한반도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추진, 스마트 농어촌으로 식량주권 수호

협이는 충분히 거쳤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후보는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변화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확대, 민간주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면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10대 공약에서도 경제활성화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조에 대해서는 한 군데에서 언급하는데, 청년 공약의 일환으로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차단”을 이야기했다. 노사관계와 관련된 정책은 거의 없으나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을 제시한다. 다만 한국노총을 방문한 직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히고, 이후 국민의힘이 입법에 협조한 바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2월 3일에 진행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에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찬성 입장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민주노총 핵심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비난하며, 한국노총의 정책질의를 답변을 거부했다. 또 “강성 귀족노조 혁파하겠다, 당선되면 강성 귀족 노조의 때법과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약에도 같은 표현이 실렸다. TV토론에서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찬성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관련법의 시행을 유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조직노동의 표심을 고려하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것이다. 고용, 일자리 측면에서는 ‘5개 분야의 세계 초격차 기술’을 바탕으로 G5 경제강국 성

장 전략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주로 첨단 기술 부문의 성장 전략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한다는 접근이다.

2. 범보수 대 범진보?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제시한 공약이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없는 아이디어성 공약이거나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검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 공약의 세부 정책 측면에서는 겹치는 것도 많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기 보다는 각 후보의 강조점, 방향성을 비교해보려 한다.

이재명 후보의 노동공약은 다루어야 할 노동문제 중 빠진 쟁점이 별로 없고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아무래도 5년간 정책을 직접 운영해본 집권 여당이기도 하거니와, 진보정당보다도 더 많은 노동계(노동자운동과 학계) 전문가들이 선거캠프에 합류한 만큼, 이제까지 고용·노동 정책에서 대안으로 논의되던 것들을 종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외에는 양대노총 정책요구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노사관계 측면은 전반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 공약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쿠팡 물류센터 등 열악한 노동현장을 방문하면서 노동과 관련한 내용을 부각하는 접근을 보였다. 그러나 선거 캠페인에서는 주 4일제 공약을 가장 강조하며, 주로 정규직 조직노동자의 관심을 끌만한 쟁점을 부각했다. 이미 발표했던 공약에 비정규직, 중소기업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처우개선, 노동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았음을 고려한다면 다소 의외의 모습이었다. 그러던 1월 중순, 심상정 후보는 일시적으로 잠행한 이후 복귀하면서 “진보의 금기를 공론화하겠다”라며 여러 쟁점에 대해 발언할 것을 시사했다. 조성주 종합상황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러한 ‘금기’로 연공서열제 임금체계와 연금개혁을 지목했다. 기존의 민주노총 요구안이나, 정규직(장기근속) 조합원,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한 조직노동 주류의 입장과는 상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TV 토론에서 쟁점이 된 연금개혁 문제 외에는 후보가 공언했던 ‘금기’를 공론화하는 행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재명과 심상정 후보의 노동공약은 노동계에서 논의되어오거나 노동자운동이 제기한 여러 쟁점들을 담고 있다. 그런데 두 후보의 노동공약은 강조점이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접근 방식에서 대체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심상정 후보는 노동시장 정책에서 더욱 급진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고, 노사관계 제도 개선에서는 원하청 공동교섭이나 단체협약 효력확장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정책의 구체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정의,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실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왔다는 점에서도 민주당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은 전체적으로 순서나 소재목까지도 이재명 후보와 같은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반면 소위 ‘범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강조점이 다르다. 윤석열 후보는 거시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정책이다. 그런데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방안(공공부문인지 여부 등)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고용과 연계된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근로장려세제(ETC) 기준 완화 등 근로빈곤층 대책 몇 가지를 제외하면 주로 전 국민 대상의 복지 정책을 제시한다. 다만 복지 정책 중에서는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는 방향은 윤석열 후보와 유사하나, 주로 첨단 기술 산업 부문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안철수 후보는 산업 정책은 있으나 거시적인 일자리 정책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복지 정책에서는 윤석열 후보보다도 노동 연계 복지 정책이 없으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부각한 것이 특징적이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이러한 접근은 현재의 고용 문제,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활성화와 함께, 산업 전환기에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데 근거하는 것이다. 이는 고용과 임금을 비롯한 “노동문제” 해결의 전제라는 점에서는 타당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거시경제 성장 혹은 산업 정책만으로 고용문제는 물론 “노동문제”라 불리는 쟁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는 것도 물론이다. 이는 보수 후보들의 큰 한계라 할 수 있다.

현 정부 집권 기간의 고용 상황 악화는, 좋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 들고 단시간 노동,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민간 부문 비정규직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신산업 분야 육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만, 이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성격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 만들어지는 신산업 부문의 일자리는 매우 불균등하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은 고임금의 개발자로 구성된 소수의 정규직만 채용할 뿐, 압도적인 다수는 저임금의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를 사용한다. 큰 수익을 내는 신산업 부문에서 만들어지는 고용이라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야한다.

물론 플랫폼 노동 관련 언론 질의에 답변하면서, 두 후보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나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을 제시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업종별 조직을 통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이해 대변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정책에 포함한 것과 같은 불안정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원청에 대한 교섭 보장 등의 제도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와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심지어 ‘일자리 보장제’까지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공약은 내용은 희망적 이지만 ‘실현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지금 좋은 일자리의 부족 상황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두 후보가 제시하는 복지공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의 한계를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대부분 민간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은 거시경제 상황에 달려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정부의 명령으로 결정되는 요

소가 아니다. 현재 일자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에서 고용이 확대되고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공부문 일자리 질의 개선이 ‘낙수효과’를 불러오지도 못 한다는 점은 문제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드러났다. 문제인 정부도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바 있고, 실제로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집권 기간 고용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은 문제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3. 문제인 정부 노동 정책의 실패라는 조건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 공약은 지난 대선에서 문제인 후보가 제시한 정책 공약 기조와 상당히 유사하다.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모든 후보가 언급했던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번 대선이 “노동 없는 대선”이라 불리게 된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문제인 후보가 약속했던 여러 정책이 모두 실패하거나 추진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선 후보가 아무리 화려한 약속을 새로이 제시한다고 해도 대중이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제인 정부의 노동공약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문제인 후보는 비정규직 규모를 감축하기 위해 사용 사유 제한과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원하청 공동사용자 책임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중 집권 5년간 제대로 집행된 것은 거의 없다. 공공부문에서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민간부문의 일

자리 질 개선으로 확장되지 못했다. 노사관계에서도 초기업 교섭이나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정책적 노력도 없었다. 정부가 직접 챙길 수 있는 공공부문에서도 단체교섭 체계조차 거의 발전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재명, 심상정 후보의 ‘친노동’ 공약과 유사했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들은 왜 이행되지 않았는가, 혹은 못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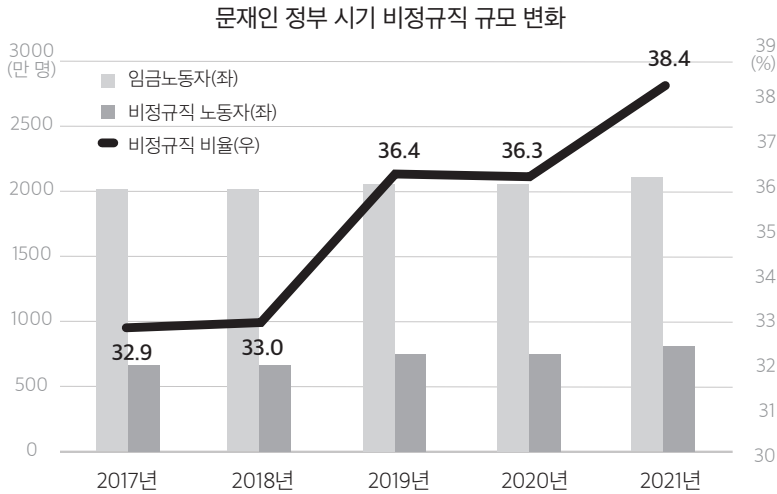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개혁 정책으로는, 대통령 취임 직후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을 들 수 있다(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재법 개정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들 의제는 애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고 김용균 사망 등을 거치면서 노동자운동의 대응을 통해 새롭게 과제로 부각된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들 정책은 2018~2019년을 지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거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중도반단되거나 왜곡되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 취업준비생들로부터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고, 전환 당사자로부터는 전환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노동조합 조직화와 투쟁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이 상승하기도 했다.)

일자리 정책은 민간부문에서는 별달리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탄력근로제를 크게 확대하는 개악이 병행되었는데,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IT 개발 등 업종에서 반발이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비숙련 부문의 고용을 줄인다는 문제 제기에 직면하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다가 노동계의 반발을 불렀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보수정권’보다 나올 게 없는 수준

으로 마무리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역점을 두었던 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 대화가 어긋난 것도 이 때부터였다. 뒤이어 2019년에는 주 52시간제의 보완대책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행하면서 경사노위는 사실상 파산했다. 이들 노동개혁 정책 대부분이 현실에서 실패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정책 실패는 노동계의 반발로 인한 노정관계의 악화와 상호작용했다. 노동조합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부와 갈등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포기에도 대해서도 불만이 쌓였다. 다른 노동개혁 공약이 대부분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불신이 누적된 결과,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2019년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것은 물론, 2020년에는 민주노총 스스로 제안했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도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표방하면서도 노동조합의 협조조차 얻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정부가 2018~19년을 지나면서 노동개혁 정책을 더는 추진하기 곤란한 조건에 처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2017~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의 반발이 확대되고, 이후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진단이 힘을 얻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주 52시간 제한에 대해서도 취업준비생과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반발이 커졌다. 특히 거시경제 상황의 악화가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이론에 따라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2019년부터는 거꾸로 경기침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에서 고용 상황은 더



문재인 정부 시기 비정규직 비율은 매년 증가했다. 2021년에는 비정규직이 800만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고 통계기준도 변경되었다는 핑계를 대지만, 2021년에는 취업자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대폭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자료 출처: 통계청)

욱 악화되었다. 노동계, 경제학계에서는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느냐로 논쟁했지만, 이미 경기침체가 시작된 상황에서 고용상황의 악화는 당연한 일이었다. 일자리의 질도 악화되어, 노동법의 규제 밖에 있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크게 늘어났다. 비정규직 비율도 2019년부터 상당히 커졌다.

통계청이 2021년 12월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는 2020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실질소득) 기준으로 0.331로 나타나 전년도보다 0.00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적이전 소득의 영향이 커서,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20년 0.405로 전년보다 오히려 0.001 올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던 해다. 수년

간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은 개선이 없거나 악화되었으나 정부 재정의 역할이 커지면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보장, 복지의 확대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 부채의 급격한 누적을 불러온 것으로 비판받는 2020~2021년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방식을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을 통해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응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더 심각하게 반복할 수밖에 없다.

2018년 하반기부터 이미 소득주도성장론의 파산은 분명해졌고,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과 일자리 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이 전격 교체되었다. 연말에는 장하성 정책실장도 교체됐다. 문재인 정부도 더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언급하길 꺼리게 된다. 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으로 관심이 전환된 가운데, 노동개혁 정책들은 관심에서 더욱 멀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은 소득주도성장론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는데, 노동개혁 정책과 소득주도성장론 양자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 집권 2년 차부터 드러나고 만 것이다.

물론 누군가는 노동개혁 정책을 포기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 부족 혹은 정국 주도력의 약화를 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진행된 2020년 총선 결과 180석의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민주당 지도부도 관료 출신이 아니라 “운동권” 출신으로 노동자운동과 교

류가 많던 586 의원들이었다. 하지만 이미 경제정책이 실패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노동정책을 펼치기 곤란한 상황이 된 것이다. 마침 부동산 폭등과 조국사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에 완전히 관심을 잃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존중”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은 대부분 실패하게 된다. 거시경제 정책이 실패하거나 악화되는 가운데,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비판받을 만한 노동정책이 독자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차기 정부 시기의 다른 노동개혁 정책공약도 마찬가지로일 수밖에 없다.

4. 실현 가능성 없는 노동 공약들

한편, 노동자운동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제대로 완수할 것을 주문하는 입장이 여전히 주류다. 한국노총은 노동이사제, 정년연장 등 조직노동의 이해를 중시하는 정책 질의를 통해 앞서 살펴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민주노총도 문재인 정부 후반, 노동·경제 정책들의 실패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별다른 근거도 평가도 없이 유사한 정책을 끝까지 밀고 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민주노총 2022년 대선 요구안). 모든 것이 정부의 “의지” 문제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주장했던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수 시도되었음에도 모두 실패한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진지한 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노조운동은 거시경제 정책과 그 효과가 노동정책을 실현하는 전제

가 된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최근 대선 쟁점을 예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 등 확장재정 정책을 위해 대규모 국채발행을 주장한다(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2022년 1차 추경을 35조~50조 원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도 전 국민 ‘일자리보장제’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와 함께 적자재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를 강행하면 국채가격 하락(금리인상)이 일어난다(이미 2월 초부터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급상승 중이다. 이후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금리인상·양적긴축이 본격화되면 금리 상승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오히려 가계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이 더 확대되면 손실보상비를 이자 부담 증가가 상쇄하거나 심지어 초과할 수 있다고 비판된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대출이자율을 통제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대출심사(연장 포함)가 더욱 엄격해져 파산, 따라서 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의지’만으로는 거시경제를 다룰 수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등 ‘범진보’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노조운동도 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범진보’ 후보들의 노동공약에서도 실현가능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심상정 후보는 실업자를 최소화하거나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충분히 보장하는 사회보장 확충이나, 일자리를 신속히 찾을 수 있게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더 나아간다. 수사(修辭)적인 표현으로 보이는 하지만 완전고용을 위해서는 ‘자연실업률’ 개념도 폐기해야한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이다(물론 이는 경제[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노동자

운동과 사회운동에 유행하는 ‘국가 일자리 보장제’의 아이디어를 일정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의 노동 우호적인 노동정책 공약도 실현가능성이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들 후보의 경제정책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의 주요 주제는 아니라 상술하기는 어렵지만, 안타깝게도 희망적이지는 않다.

이재명 후보가 주창한 1·5·5(수출 1조 달러, 세계 5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 공약은, 희망차기는 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연 8%대 GDP 성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상적 선언에 불과하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기본소득 등을 위한 확장재정과 국가 부채 확대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잠재성장율을 크게 웃도는 성장을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곧 거시경제 침체, 심지어 외환 위기가 지 닥칠 수 있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에너지 전환 등 투자 확대를 제시하면서도, 2월 3일 TV토론에서는 탈성장론에 가까운 입장으로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다. 여러 산업·사회 정책 추진의 조건이 되는 거시경제 작동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낸 것이었다. 심상정 후보는 2월 11일에 진행된 2차 TV토론에서는 주 4일제 도입을 주장하며 윤석열 후보에게 관련한 질문을 던졌는데, 윤 후보는 “주 4일제보다는 당연히 주 3일제가 더 좋지요, 하지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현실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냐의 문제”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심상정 후보가 주 4일제를 주장하면서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 정책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진보연대, 「심상정 1호 공약, 희망사향의 나열로 민주당과 다를 수 있다, 《사회운동포커스》, 2021년 9월 9일을 참고.)

한편, 원의 정당인 진보당 김재연 후보, 노동당의 이백운 후보도 경제 성장은 가진 자들의 성장일 뿐이라며 성장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 다. 이백운 후보는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감(생산량)을 유지하되 임금과 일자리를 나누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임금삭감 없는 주 30시간제”도 병행해서 공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투입을 감소시키고 설비 가동률을 낮추어 산업 생산 자체를 축소하자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GDP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런 역성장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적자재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주장 외에도 적자 재정, 국채발행에 기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산업의 국유화와 이를 통한 국가 책임 일자리 보장도 공약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탄소 감축, 노동시간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외환위기, 경제위기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어떤 정세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체제 전환을 위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할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범사회적 합의를 노동자 계급이 주도할 역량을 갖기는커녕, 노동자운동이나 진보정당들이 자기 주장의 직접적인 경제적 결과에도 무관심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대선에서 대중적 설득력을 갖고 국민적 지지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제시한 정치적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노동 공약만 보아서는 정책적으로 훌륭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자신들의 정책을 현실에서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대안이 없다. 심지어 그에 역행한다. 2월 3일 1차 TV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성장 지향 정책을

포기하라고 주문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성별 갈등의 원인이라고 할 청년층 고용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논쟁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야 자신이 제시하는 정책이 희망사항대로 실제로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믿을 테니까 그렇게 답변했겠지만, 심상정 후보는 사회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경제를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적) 선의와 (경제학적) 무지·무시의 결합이거나, 혹은 무지·무시와 악의의 결합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모두 실패라는 점에서는 같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정책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먼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거시경제 성장의 전망 자체가 밝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을 제대로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경제가 처한 구조적 모순은 세계 자본주의 분업구조와, 재벌 중심 한국경제 구조의 결합, 저출산·고령화 인구 변천이 결합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잠재성장을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1년 11월 OECD가 발표한 재정 전망 보고서는 한국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030년부터 0.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OECD가 집계한 38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대로 된 거시경제 정책이 없는 후보들보다야 나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조건에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제시하는 방식의,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투자와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결국 거시경제 성장과 연계된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들 후보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실사 국민경제가 성장한다고 해도 노동자,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

직, 특수고용(플랫폼) 등 취약 노동자들의 처지가 자동적으로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쿠팡과 같은 '신성장 산업' 기업이 아무리 성장해서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을 흡수한다고 한들, 열악한 노동조건과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은 자동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일자리의 질이 더욱 낮아질 뿐이다. 각 후보 진영은 경쟁적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다수의 청년층 일자리는 이 부문에서 주로 창출된다. 노동조건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산업부문·고용형태 간 격차 축소, 더 나아가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서는 상황을 전혀 개선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현재 대선 상황은, 실현 불가능한 달콤한 노동정책을 제시하거나, 노동 문제를 해결할 정책수단에 대체로 무관심한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그래도 말로라도 친노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쪽이 나으니 실현가능성은 무시하자는 주장도 있다. 기왕 실현이 안 되더라도 듣기라도 좋은 말이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적, 이론적 근거 없이 추진한 정책은 부작용을 더 크게 낳는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통해 이미 보아왔다. 임금 격차 해소의 여러 방안 중에도 (소득주도성장론에 따라)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만 채택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을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고용 지표도 악화시켰다. 결국 불어 닥친 여론의 역풍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율도 역대 정부에 비해 높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산업범위를 개악하기까지 했다.

5. 노동자운동의 요구와 대선 노동정책 공약

각 후보의 노동 정책에 대해, 양대노총은 대체로 심상정,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앞서 언급한 한국노총의 발표도, 사실상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 위한 수순으로 이해되었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다소 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한국노총 내부의 세력구도에 더해 대의원들이 “당선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선대본 직능총괄본부)은 한국노총에 “특정 대선후보 지지를 위한 요식행위”라며 “깊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후보 단일화 시도가 실패한 후 기존 방침에 따라 복수의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한다(현재 정의당 심상정, 진보당 김재연, 노동당 이백윤). 민주노총의 대선 정책요구안은 지난 수년간 요구했던 노동정책, 사회정책을 가장 급진화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전면에 제시하는 변화는 있으나, 주 4일제 도입과 최저임금 대폭인상, 획기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너지 전환, 보건의료, 기간산업 국영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와 같은 내용이 차별점으로 부각된다) 등 이미 문제인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다시 강조하는 내용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노동조합 현장 간부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호의적인 경우가 상당하고, 민주노총 방침을 거슬러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신승철, 김영훈 등 전직 민주노총 위원장들이 이재명 선거운동 캠프에 합류하기도 했다. 일부 단위 노조와 후보 진영의 정책 협의가 간접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 정책 외에도 공공의료 확대나 KTX-SRT 통합과 같이, 노조가 주장하는 이슈를

선거 공약에 포함하기도 한다. 민주노총의 진보정당 후보 지지 방침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차선’ 혹은 ‘차악’으로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의 정책 요구와 각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 비교를 통해 지지를 결정할 경우, 또 당선 가능성까지 고려할 경우 이재명 후보가 가장 선호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서 거시경제 상황과 유리된 노동정책들은 아무리 ‘친노동’ 수사나 ‘선의’에 기반해 있어도 현실에서 작동할 수 없다. 그것이 문제인 정부 노동정책 5년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특히 노동 정책은 경제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도 다른 경제적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대안 없이 “노동 존중” 혹은 “노동 친화”라는 구호로 비슷한 정책들을 제시한다면, 이는 표를 얻기 위한 것 외에 어떤 내용도 없이 비어있는, 공약(空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대선 공약만으로 후보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노동 공약만 아니라, 앞서 평가한 것과 같이 그 정책들이 놓인 맥락이나 전체 정책 공약, 해당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운동은 대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후보들이 제시하는 노동정책 공약의 유불리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이 거부하거나 소극적이었던 항목이었음에도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에는 당당히 포함시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이해관계자 집단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또 집권 이후에는 그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성남 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부각된 것이 조폭 연루설과 대장동 의혹,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私用)과 불법 의전 문제다. 공공 정책 왜곡, 그리고 공공 조직과 재정을 탈취한 사익 추구였다. 자칫 노조운동이 이재명 후보 진영에 대한 정치적 지지의 교환을 통해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될 경우, 이재명식의 부적절한 이익 추구에 동참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물론 범보수 진영의 후보들 역시 노동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고, 각종 노동규제를 약화시키려 할 것이므로 그들의 집권하면 노조운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노조운동은 주요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 경쟁에서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누가 당선되든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공약도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아무리 달콤한 노동공약을 제시한다고 한들 한국 경제의 토대 자체를 파괴할 우려가 큰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다. 한국 경제의 토대 붕괴로 인한 피해가 전 사회적으로 심각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자운동이 노동공약만을 보면서 이런 후보를 지지한다면 노동자운동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회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기본소득 정책으로 반복하려는 이재명 후보는 같은 실패를 더 큰 규모로 반복할 것이다. 진보정당들도 진보적 정책방향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수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만 한다. 보수정당들의 허황된 공약(空約) 남발을 비판해야 할 진보정당들마저 비슷한 태도로 입장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요구, 이를 위해 심각한 노동자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현실적인 '노동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운동은 자신의 힘으로 초기업 교섭·투쟁을 통해 임금 격차를 줄이고, 기업별 고임금보다는 적절한 처우를 받는 고용을 늘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파괴적인 일자리 경쟁을 막아야 한다. 정부가 필요한 일자리를 모두 만들고 기본소득도 지급해서 소득 격차를 메워줄 것을 기대하기 전에,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공동의 임금·단체 교섭과 자본에 대한 투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국회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필요하겠지만, 노조 내부의 혁신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제성장 자체를 상대화하는 진보정당 후보들은 차치하고라도, 경제성장 방안을 제시하는 각 후보들의 경제 정책의 실현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중 이재명 후보는 가장 허황된 경제 성장 공약을 남발한다. 실제로 추진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무리하게 공약을 강행 실현하려 할 경우 거꾸로 심각한 경제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 분명한 최악의 입장이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난 3년간 확장정책의 부작용으로 각국에서 경제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대선 직후부터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재정과 무역수지의 악화, 국가부채와 환율 관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화려한 노동공약을 포함해 많은 대선 공약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이 개선되거나 격차가 해소되어 평등한 사회가 앞당겨지기는 더 어렵다. 고용과 임금의 개선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역량도 확충해야 한다. 경제위기 때마다 나오는 “함께 살자”라는 구호를 정말 실현하

려면 노동자운동이 스스로 무엇부터 혁신할지 시급히 고민할 때다.

문재인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조직 규모는 양대 노총이 모두 확대되었다. 각각 100만을 넘어, 총 노조 조합원 숫자는 250만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노조운동이 적어도 “노동문제”에 대해서라도 사회적 쟁점을 선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노총은 급진적 요구로 총파업까지 진행했는데도, 대선에서 쟁점을 부각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운동과 연대하며 보편적인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여겨져 온 민주노총마저 ‘귀족노조’ 공세 속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여론의 무관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여론의 무관심이 정권과 보수 언론의 탄압 때문이라고만 할 수도 없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민주노총 비방과 탄압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으며, 언론지형도 변화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일부 운동 의제는 사회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다. 결국 지금 대선을 앞두고 여론이 무관심한 것은, 노동자운동이 주요 후보들보다 “노동문제”에 대해 더 설득력 있는 해법을 국민에게 제대로 제시해왔는가의 문제일 수 있다. 지난 5년의 성적표가 현재 노조운동에 대한 대중적 지지 여부와 대선 후보 혹은 차기 정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이 이른바 “노동 없는 대선”이 된 것은 대선 후보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실제로는 노동자운동에 대한 평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요구와 투쟁을 반복할 경우,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우려가 크다. ●

20대 대선이 페미니스트에게 던진 질문

민주당식 여성 정치의 파산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김유미(페미니즘팀장)

1. 5년 사이 급변한 대선의 풍경

선거 시기 여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호출되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2017년과 2022년 대선의 풍경은 유난히 상반된다. 2017년에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제인 후보의 발언이 상징하듯 여야 후보들이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했다. 반면, 2022년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부담스러워 한다. 심지어 가장 주목받는 여성 분야의 정책은 ‘여성가족부 폐지’다. 이는 지난 5년 사이 페미니즘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지형이 급변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2010년대 중반에 청년 여성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열풍이라 할 만한 흐름이 형성되었다면, 지금은 청년 남성들의 안티 페미니즘이 심상치 않은 기류로 포착된다.

지난 1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예찬 청년본부장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출연하여 여성가족부 존폐

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 공약을 올리고, 이에 응답하듯 심상정 후보가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강화’를 올린 날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다.

자신만만한 태도로 토론에 임한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한번 깔끔하게 박살을 내놓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격한 표현까지 쓰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다. 그의 주장을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성인지교육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상정하여 남성혐오를 조장한다. 다른 한편,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위한다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비겁한 스탠스를 취했다. 결국,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매우 높아 부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류호정 의원은 여성 비정규직 비율, 코로나19 시기 여성 취업자 감소치 등, 한국 사회 여러 통계를 보면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의 운영에 실책이 있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부처 폐지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성차별 해소 등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여성가족부가 여당 인사들의 성비위(性非違)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부처의 역할이 모호하기 때문에 타 부처와의 조율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결정적 차이는 여성가족부가 성인지 교육 등으로 성폭력 문제에 접근하는 ‘내용’에 대한 평가에서 발생한다. 장 본부장은 그 내용이 잘못된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며 “사실상 남성혐오”라고 평가했다. 진행자가 이에 관한 의견을 묻자, 류호정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혐오와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관련 토론은 더 진행되지

못했다.

두 청년 정치인의 토론은 이번 대선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을 만했다. 민주당 정부의 무능과 위선을 지적하며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주도하는 국민의힘, 여성의 현실을 근거로 들어 여성가족부를 방어하는 정의당,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재 또는 침묵이라는 면에서 그렇다.

당일 토론 말미에 지적되었듯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비겁하다. 이재명 후보는 ‘여성안심 평등사회’란 슬로건하에 각종 여성 정책을 발표해 왔지만, 여성가족부 존치와 성소수자 인권 문제처럼 실제 논쟁이 되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여성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자칫 잘못하면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집단과 비우호적인 집단 모두의 표를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테다.

분명한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의 페미니즘이란 더불어민주당과 페미니즘 운동의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를 동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년 남성들의 안티페미니즘을 어떻게 보고 대응할 것인지도 이러한 평가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20대 대선과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를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려 한다. 먼저 20대 대선에서 여성 문제가 왜 이대남(‘20대 남자의 졸업말’) 득표 전략에 종속되었는지 돌아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선거 전략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다음으로 현재 청년 남성들에게서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안티페미니즘의 내용과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왜 이토록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2. 민주당 비판 세력으로 부상한 이대남

1) 이대남은 어떻게 대선의 주인공이 되었나

이번 대선의 여성 이슈는 가치 판단이나 정책 이전에 선거공학적인 표 계산에 가장 크게 종속되어 있다. 1, 2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가 2030 유권자 표심이 당락을 결정하리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다른 세대에 비해 2030 세대의 투표 성향은 기존 정치구도로 포섭되지 않는 경향을 보여, 대선 직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주목받는 것은 단연 이대남의 표심이다.

선거운동이 ‘이대남 표심 잡기’ 경쟁이 된 배경에는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2030 여성 유권자에게 비호감 이미지가 강해 지지율 확대를 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대남이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 정부 지지율 하락세가 가장 뚜렷했던 집단이라는 점이다. 2021년 47 보궐선거는 이대남의 ‘민주당으로부터의 이탈’을 눈으로 확인하는 계기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지지율은 72.5%에 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지지율은 22.2%에 불과했다. 22.2%는 모든 세대와 성별을 통틀어 가장 낮은 민주당 지지율이었다.

이대남 정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지만, 중론은 이들이 조국 사태, 부동산 정책 실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86세대 민주당 정치인들이 보인 위선과 내로남불에 분노하고 ‘공정’이라는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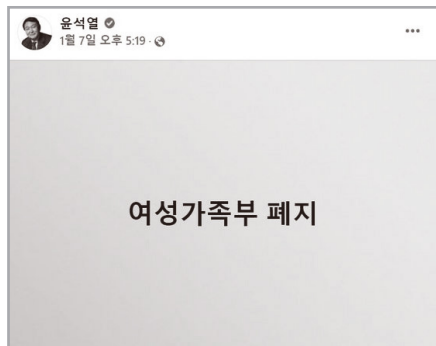
든,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때와 같은 압도적 득표를 반복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탈하는 표를 붙잡아 오기 위해 이대남에 대한 호소가 중요해졌다. 양당이 앞다투어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입을 모아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약속하는 현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청년 세대 내에서 성평등에 관한 현실 인식 차이가 확연하다는 사실이다. 2021년 3월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항목에 청년 여성은 74.6%가 동의를 표했지만, 청년 남성의 동의는 18.6%에 불과했다. 반면 청년 남성의 절반 이상인 51.7%는 ‘우리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했으며, 청년 여성 중에 이에 동의하는 비율은 7.7%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2021) 이렇게 상반되는 현실 인식 속에서, 여성 정책을 집중하는 일은 곧 이대남의 지지를 잃어버리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20대 대선에서 여성 정책은 여성의 현실에서 출발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지 못하고, 여야의 손익 계산에 전적으로 내맡겨져 버렸다. (사회진보연대,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여야의 분주한 손익 계산서」 2022.01.22.)

2) 국민의힘의 이대남 소구 전략이 갖는 위험성

현재 이대남 소구 전략의 가장 적극적인 행위자는 국민의힘이다. 이러한 선거 전략이 본격화한 것은 1월 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의 ‘전격 화해’ 시점이다. 12월 21일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며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 대표가 주장해 온 세대포위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월 초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짧은 공약을 올리며 이대남에게 호소하는 선거 전략을 본격화했다. (사진 출처: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포워론은 대선 승리를 위해 6070과 2030을 결집하자는 것인데, 사실상 국민의힘이 2030 남성들의 표심을 주되게 공략해야 한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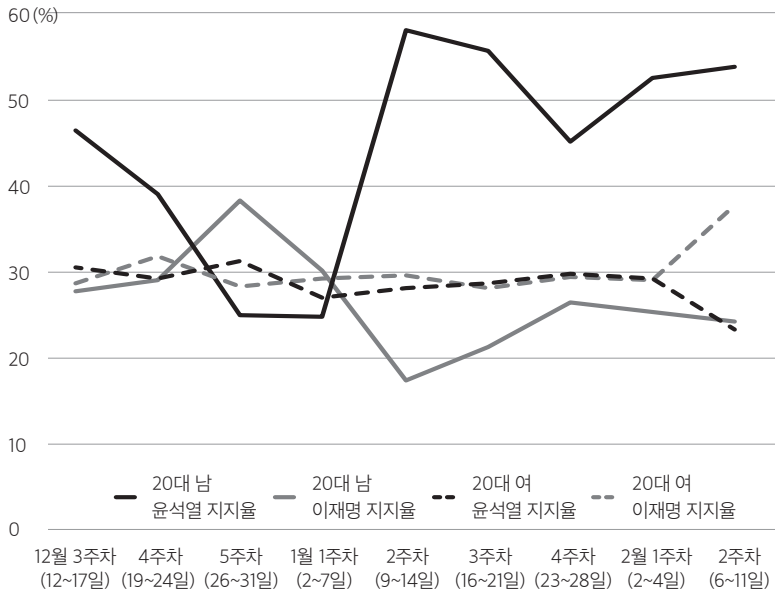
작년 말까지 윤석열 후보의 태도는 여성가족부나 페미니즘 운동의 기존 방식은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선을 긋되, 여성과 남성 청년의 이해를 절충하는 것에 가까웠다. “세대 간, 젠더 간 갈등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작년 8월의 발언은 이를 반영한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다”며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출범 후에는 성범죄 처벌과 무고죄 처벌을 둘 다 강화하겠다고거나, 싱글맘과 마찬가지로 싱글파파도 지원하겠다고거나 하는 ‘기계적 평등’ 방식의 청년정책을 내세웠다. 11월 19일에 이수정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12월 20일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킹 신지에 대표를 새시대준비위원회에 영입한 것은 여성과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인사로 평가되었다.

1월 초 상황은 급변했다. 1월 3일 신지에 새시대준비위 수석부위원

장은 국민의힘 당내 반발을 암시하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1월 5일 기존 선대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선대본부를 출범시킨 윤석열 후보는 며칠 동안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등의 짧은 메시지를 올리며 이목을 끌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 하태경 의원을 선대본부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게임 관련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2월 4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에 관한 질문에 “더 이상 구조적인 성 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선대위의 전략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민주당 비판세력으로 부상한 이대남의 관심사와 요구에 확실히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의 절충적인 전략이 청년세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호소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대남의 이탈을 부른다는 상황판단에 근거했을 것이다.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일부 청년 남성 유권자들은 안티페미니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마치 게임하듯 대선판을 흔들었다. 이들의 요구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에게로 모였다가, 지금은 이준석 대표를 매개로 윤석열 선대본부에 반영되고 있다. 1월을 기점으로 2030 세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자 이대남 소구 전략은 정당성을 획득했다.

이대남의 표심을 잡으려 안티페미니즘 분위기에 편승하는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행보는 위험하다. 우선 이러한 행위는 임금과 고용, 성폭력 등 한국 사회 여성의 현실을 가리키는 수많은 지표에 눈감고 해결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이 코로나19 2년 동안 돌봄 부담으로 여성들의 고통이 증폭된 시점에 치러진다는 사실은 특히 역설적이다. 오



여야 대선후보의 20대 지지율 추이

1월 초를 기점으로 20대 남성의 윤석열 지지율이 급등했다. 같은 기간 20대 여성의 경우 여야 모두 특별한 변동 없이 30% 수준에 머물렀다. (자료 출처: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여론조사)

늘날 여성의 현실을 정말 개인적인 수준의 차별이나 폭력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윤석열 후보는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선거 전략이 성평등을 둘러싼 청년 세대의 현실 인식이 확연히 갈리는 상황에서 한쪽 편의 손을 들어주는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다. 여성 청년의 존재를 지우는 정치는 앞으로 여성의 권리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더욱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 당장의 표에 눈이 멀어 청년 세대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

3)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정책이 외면 받는 이유

2030 세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표 계산은 복잡하다. 앞서 살펴봤듯이 민주당으로서는 20대 남성이 돌아선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경선 막바지인 11월 10일, 이재명 후보가 “이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주셔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홍카단이 이재명 후보님께 드리는 편지)을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처한 딜레마는 이대남에 대한 적극적 구애가 기존 민주당 지지층의 표를 깎아먹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잃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이대남 눈치를, 한편으로는 기존 지지층 눈치를 살펴야 했다.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대남 소구 전략을 본격화했던 1월 초부터 맞대응 전략을 택했다. 국민의힘의 전략을 ‘퇴행적 정치’라 비판하며, 여성 정책을 연달아 발표한 것이다. 자궁경부암백신 무료 접종,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국민의힘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점하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으로 분류되던 20대 여성을 공략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대남을 위한 정책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 강화와 청년세대 전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전략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20대 여성의 민주당 지지율은 30%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이다. 민주당의 여성 정책이 20대 여성을 포함하여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집단의 마음을 울리지 못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 자신의 과오다.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가 거론되도록 한 주요 요인은 다름 아닌 민주당식 여성 정치의 몰락이다. 문재인 정권 시기에 페미니즘은 민주당 ‘내로남불’의 대표 사례로 전락하고 말았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연달아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민주당은 반성과 성찰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당헌을 개정해 보궐선거 출마를 강행했다. 윤미향 의원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 남인순 의원의 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 등은 민주당과 협력적 관계를 맺어온 여성운동 전반의 정당성도 위태롭게 만들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포지션을 취하지만, 그것마저 사익 추구의 수단일 뿐이라는 평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걸림돌은 후보 본인이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행적이 여성 인권 존중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화는 여럿이지만, 그 중에서도 대선 경쟁 시점에 논란이 되었던 일은 여성 대상 살인사건 변호와 그에 대한 사과다. 작년 11월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에 조카의 살인사건을 변호했던 일을 사과했다. 여성 대상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 일이 세간에 오르내렸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2006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김 모 씨가 헤어진 연인과 그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한 일이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후보는 이 사건을 말아 피의자의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사과의 글에서 명백한 교제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 명명하여 심각성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 이재명 후보가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대장동 의혹의 당사자이면서 ‘초과이익환수법’을 만들겠

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기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마지막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유례없는 네거티브전을 펼치는 민주당이 상대 후보 배우자에 대한 여성혐오성 공격을 활용 또는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관해 남편에게 반말을 한다는 것, 출산과 육아의 경험이 없다는 것, 성형과 관련한 외모 평가 등이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현역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김건희 씨가 과거 ‘줄리’라는 이름으로 성매매에 종사했다는 비공식적인 의혹을 방치하는 일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의 네거티브전은 86세대 정치인의 여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여성운동 출신 정치인의 선택적 침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넘어서는 것인지가 제시되지 않은 채, 여성을 위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에서 진정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여성 인사 몇몇을 영입하여 그럴듯한 여성정책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3. 20대 남자의 ‘안티페미니즘’은 무엇인가

1) 차별과 혐오라는 규정은 적절한가?

2021년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국면을 거치며 이대남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 정치의 행위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들의 입장을 무엇이라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질문은 대선이 끝난 후에도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일각에서는 이대남이 언론이나 정치인이 만

든 프레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신지에 씨는 ‘이대남 신드롬은 기획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기고글(2월 16일 《중앙일보》 게재)에서 “하나로 묶을 수 없는 다양한 개인을 이대남이라고 묶어 부르는 썸”이기 때문에 현재 호출되는 이대남이란 “가상 집단”이며, 이대남 신드롬을 “분열로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집단의 정치적 공작”이라 평가했다. 그로부터 며칠 전인 2월 9일에 20대 남성들의 모임인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은 “우리는 이대남이 아닙니다”라며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역시 청년 남성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또 다른 접근법은 이대남의 요구와 그에 호응하는 정치를 ‘차별과 혐오’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혐오 정치의 방조자들’이라는 제목의 2월 10일 자 《한국일보》 칼럼은 국민의힘 선거 전략을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극우 포퓰리즘”이라 비판했다. 2월 12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여성 단체들의 제안으로 열린 집회인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를 부수자’도 유사한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대남에 관한 논의를 ‘정치 공작’ 또는 ‘차별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진행된 여러 연구조사는 페미니즘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이 다른 세대의 인식과 차이가 있으며, 청년세대 안에서도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2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은 ‘페미니즘은 남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인식한다. 이대남이 가상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순간, 이러한 현실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또한 20대 남성이 성평등에 강한 동의를 표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안티페미니즘이 명시적인 성차별, 여성

혐오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차별과 혐오 세력이라는 손쉬운 딱지 붙이기는 사회적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2) 『20대 남자』를 통해 본 이대남의 안티페미니즘

2019년경부터 20대 남자 현상 또는 젠더 갈등을 해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조사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단행본으로 출간된 천관율·정한울의 『20대 남자: ‘남성 마이너리티’ 자의식의 탄생』을 참고하여, 20대 남성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몇 가지로 추려보고자 한다. 이 책에 소개된 여론조사는 2019년 《시사IN》 기획 기사를 위해 진행된 것이다. 정식 학술연구는 아니지만 208개라는 적지 않은 문항을 통해 ‘20대 남자’ 현상의 의미를 성실하게 추적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에서 20대 남성들이 보인 응답 성향은 이후 정부기관 등에서 진행한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므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특징은 남성 차별에 대한 인식이다. 20대 남자의 68.7%가 ‘남성 차별 심각하다고’ 인식한다. 다른 집단에서는 남성 차별에 관한 질문에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데 20대 남자에게서만 이러한 인식이 강하게 확인되는 것이다. 어떤 영역에서 남성 차별을 느끼는 것일까? 이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피해를 적극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다른 세대 여론과 달리, ‘취업, 승진 등에 여성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여성의 취업이나 승진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이 남성에 대한 차별 또는 불공정이라는 주장과 연결될 수 있다. 남성에게 불공정한 영역으로는 연애와 결혼 문화, 그리고 법



작년 12월 12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여성단체들이 '여성혐오 대선 규탄' 집회를 열자 맞은편에서 신남성연대가 '남성혐오 중단하라', '페미니즘 규탄한다'라는 손피켓을 들고 맞불 집회를 열었다. (사진 출처: 국민일보)

집행을 꼽았다. '연애와 데이트 문화가 여성에게 더 유리하다'는 응답이 77.5%, '결혼 문화가 여성에게 더 유리하다'도 66.3%에 달했다. 또한 초·중고 교육제도, 대학 입시제도, 재산과 소득 분배 등의 영역에서 '법 집행이 남성에게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20대 남자에서 53.6%로 다른 세대 남자보다 두 배 높았다.

두 번째 특징은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감이다. '페미니즘은 남녀의 동등한 지위와 기회 부여를 이루려는 운동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2.3%에 달했다. 반면 '페미니즘은 남녀평등보다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78.9%가 동의를 표했다. 같은 질문에서 30대 이상 남자의 응답(57.1%)보다 20%포인트 이상 높다. 해당 조사는 페미니즘에 관해 여섯 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여섯 개 모두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한 집단이 20대 남

성의 25.9%에 달했다. 연구는 잠정적으로 이 25.9%를 ‘반페미니즘 정체성 집단’이라 가정하고 여러 사회 현상에 대한 이 집단의 응답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에 따르면 이 집단의 페미니즘 반대 입장을 ‘덧어놓고 여성혐오’라고 볼 수는 없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 지원과 보상 정책’에 동의하는 비율이 64%에 달하고 ‘부모 세대에서 여성 차별은 심각했다’는 명제에는 79.2%가 동의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집단에서 ‘취업 시 여성 할당 정책’에 반대 응답이 100%였던 것과는 큰 차이이다.

셋째, 세간의 추측과 달리 정치적 보수화, 경쟁에 대한 선호 등이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20대 남성은 시장 개방에 대한 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태도,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등, 정치 성향을 보여주는 여러 질문에서 정치적 보수화의 징후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또한, 공정이나 경쟁에 대한 가치판단을 확인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 성향도 다른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0대 남자』는 20대 남성의 ‘남성 마이너리티 자의식’이 우리 시대 새로운 현상이라 분석한다. 그리고 이들이 갖는 폭발적인 분노의 핵은 “젠더와 권력이 만나는” 지점에 있으며, “남자와 여자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권력이 여자 편을 든다”는 인식이라 결론 내리고 있다. 이들에게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은 게임의 법칙을 왜곡하는 불공정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3) 기회의 평등이 곧 성평등이라는 인식

페미니즘이 존재한 이래 반발은 언제나 있었다. 이대남의 안티페

미니즘 담론은 분명 2010년대 중반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열풍에 대한 ‘백래시(반격)’로서의 성격이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종종 사회에 광범위한 여성혐오와 결합하여 나타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안티페미니즘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흐름이라거나, 구시대적인 여성혐오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다.

『20대 남자』의 저자 중 한 사람인 《시사IN》 천관율 기자는 “당혹스러운 것은, 이들의 반응이 ‘정의로운 분노’라는 정의의 감각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외부 공격이 가해질수록 더 세진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결 구도를 만들어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안티페미니즘 담론은 내용과 조직을 갖춰 ‘대응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발전해나가고 있어, 더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김선훈, 「안티 페미니즘 운동의 정당성 획득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9) 이를 무시 또는 비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며 페미니즘 운동의 정당성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

20대 남성 다수는 페미니즘에 반대하지만 성평등에는 동의를 표한다.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입장은 성평등을 ‘기회의 평등’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제도적·문화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면화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가치가 부정당하는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남성만 군 복무를 하는 것이나 취업이나 고위직 선발에 여성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성평등에 대한 20대 남성의 이해 방식은 전통적인 여성 혐오라기보다는 19세기적인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머물러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정치·경제·교육 등의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여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보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페미니즘은 사라져야 할 낡은 이념이다. 즉, 오늘날 안티페미니즘의 핵심적인 내용은 “페미니즘이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인식”으로서 ‘포스트페미니즘’이다. (정인경,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페미니즘연구》, 2016) 현실에 성차별이나 성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런 행위를 한 개인을 규제 또는 처벌할 문제로 인식된다.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20대 남성의 현실인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다른 한편, 이들은 연애를 포함한 사적 영역에서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접근법에 반발하고 있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기회의 평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 문제를 제기하며 20세기 중반에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의 운동을 19세기 말 자유주의 페미니스트의 운동과 구분하며 ‘2세대 페미니즘’이라 명명했다. 여성의 성적 권리, 재생산의 권리에 대한 주장은 2세대 페미니즘의 중요한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천은 남성을 가해자로, 여성을 피해자로 상정하며, 남성에 대한 철저한 분리주의로 귀결되었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는 ‘여성 피해자화’의 거울상처럼 ‘남성 피해자화’라는 양상을 띤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차별적 문화의 피해자라는 주장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대응이 객관성을 무시하여 억울한 남성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운동은 그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다양한 경향이 구분되지 않고 동시에 진행된 면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안티페미

니즘 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무엇보다 오늘날 안티페미니즘 담론과 실천은 ‘개인의 능력, 선택, 성취의 옹호’, ‘피해의 호소’, ‘폭력적·차별적 언행의 고발과 처벌’ 등 페미니즘 운동의 전략을 모방하고 있다. 페미니즘 운동이 무엇을, 왜,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4. 페미니즘 운동이 답해야 하는 질문들

1) 페미니즘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유

2022년 대선에서 여성의 현실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실종된 것을 이대남과 일부 정치인, 언론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안티페미니즘 담론은 한편으로 지난 5년 동안 페미니즘 운동 전략의 실패에 대한 반작용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악의적 선동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페미니즘 운동의 한계를 성찰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진보연대, 「이대남」 논란: 어떤 페미니즘이 필요한가?, 《사회운동포커스》, 2021.05.11.)

현 시점에 페미니즘 운동이 어려움에 부딪친 이유를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첫째, 민주당과 연계해 온 여성운동 전략의 파산 선고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주류화 전략’을 채택한 한국 여성운동은 주로 민주당을 통해 정치권에 진출하고 여성 정책을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문재인 정권 시기를 거치며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여성운동 출신 정치인들이 진영 논리에 잠식되어 집권 여당의 잘못을 덮기에 급급하거나, 여성운동 이력을 사익 추구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2000년도 김대중 정권하에서 여성부가 출범하고 20여 년이 흘렀다. ‘폐지냐 아니냐’로 논의가 촉발되기는 했지만, 여성가족부로 상징되는 전략의 목표, 내용,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 논의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둘째, 2010년대 중반에 시작된 ‘페미니즘 열풍’의 급진주의 페미니즘으로의 귀결이다. 페미니즘 열풍에 동참한 청년세대 여성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과 성폭력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성폭력이 남성의 폭력성에서 기인한다고 전제하고, 처벌의 공포를 통해 남성들의 행동을 규제하려 시도한다. 이러한 전략은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위치를 강조하고, 실천적으로 남성과의 분리주의와 연결되며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을 가속했다. 한편 분리주의적인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승인하기보다 ‘여성 우선주의’를 강하게 주장했는데,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난민 수용 반대, 트랜스젠더 여대 입학 반대를 주장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 5년 동안 페미니즘 운동은 그 보편성과 정당성에 크게 손상을 입었다. 기존 정치세력과 운동세력이 대안적인 흐름을 만들지 못하는 틈을 타고 안티페미니즘이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2) 페미니즘 운동의 과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당”이라 말하며 주요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페미니즘과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 현재 정의당이 취하는 ‘페미니즘 방어’ 전략은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

만, 한계적이기도 하다. 페미니즘 운동이 처한 위기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기회와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거나, 문제적 행위자를 고발하는 실천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내용은 ‘페미니즘의 역사적 시효가 만료했다’고 주장하는 안티페미니스트로서 이대남이 공유하는 현실 인식이기도 하다. 청년세대에게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이란 성별로 나뉘어 자기 몫의 파이를 챙기려 싸우는 ‘제로섬 게임’처럼 여겨진다.

안티페미니즘 담론에 대항하기 위해, 페미니즘 운동은 기회의 평등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설득해야 한다. 19세기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의 기대와 달리, 성적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 ‘동등 기회’는 2등 시민으로서 여성의 지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세계 각국에서 법제도적 평등이 달성된 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좁혀지지 않고 남아 있는 성별 격차는 이를 증명한다. 여성 문제의 해결이 요원한 이유는 ‘중성적 개인의 권리’만으로 성과 재생산 영역에서 여성이 겪는 문제들을 해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사회는 여성의 성적 권리는 성폭력의 문제로만, 여성의 재생산 권리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문제로만 다룬다. 페미니즘은 여전히 평등과 차이라는 오랜 딜레마 속을 배회하고 있다. 성적 차이에 의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새로운 사회의 원리가 필요하다.

한편, 공적 영역에서 기회의 평등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 가족 제도를 통한 사회의 재생산이라는 조건은 건드리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이성과 개인성이라는 공적 영역의 평가 기준, 돌봄과 이타성이라는 사적 영역의 평가 기준을 둘 다 달성해

야 하는 모순적 지위에 처했다. 저성장과 경제위기라는 조건 속에 이러한 이중 요구를 만족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결국, 점점 더 많은 청년 여성들이 비혼과 비출산을 택하는 등, 가족제도가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로부터 개인적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연애·결혼을 포함하여 성적인 관계에서 여성과 남성 청년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는 것 역시 이러한 조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도덕적 호소를 넘어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라는 현 정세와, 세계체계 속에서 한국 사회가 놓인 특수성 속에서 여성의 현실을 분석하고 운동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022년 대선을 거치며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운동은 우회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마주하고 있다. 오늘날의 구조적 성차별을 무엇이라 설명하고 설득력 있는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 할당제로 대표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는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유의미한 접근법이 될 수 있는가?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성폭력을 감축하고 여성과 남성의 관계맺음을 변화시키고 있나? 페미니즘 운동이 ‘내 파이 되찾기’를 넘어 사회를 바꾸는 운동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공격이 거셀수록 페미니즘 자체를 방어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는 두려움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전략의 쇠퇴가 분명해지는 지금이야말로 페미니즘 운동의 필요성을 새롭게 설득하고 전략을 재구성할 시기다. ●

사회주의 운동, 식민지 시대 노동자·민중의 각성을 이끈다

김성균(정책교육국장)

지난 호까지 식민지 시대 노동자 농민의 열악한 삶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번 호는 그런 삶 속에서도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실천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소설을 통해 살펴보려 한다. 안타깝게도 걸출한 성공을 그리는 작품은 매우 드물다. 시대가 그만큼 엄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전망이나마 그려보려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은 식민지 시대를 살아간 민중의 삶을 꼭 맞게 표현하고 있다.

식민지 시대 노동자운동은 사회주의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3·1운동은 목표했던 독립을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사회주의의 확산이라는 거대한 성과를 남겼다. 특히 1920년대는 같은 책이어도 사회주의가 있어야 팔린다거나, 뭘 좀 배웠다고 말하고 다니려면 사회주의를 알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사회주의가 확산했던 시기였다.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3·1운동을 전후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구속되고, 건설한 조직이 파괴되는 상황 속에도 식민지 시대가 끝날 때까지 활동을 이어갔다. 이는 1945년 해방 직후인 8월 24일, 조선공산당이 재건되어 해방공간의 운동을 주도한 것

으로 결실을 보았다. 공장관리운동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 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결성된 것도 식민지 시대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식민지 시대 노동자운동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뉘볼 수 있다. 우선 3·1운동을 전후하여 사회주의가 확산하고 (사회주의) 지식인과 선진적 노동자들이 주도하여 노동단체 설립, 나아가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추진하던 192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다. 이 시기 운동은 조선공산당 건설로 결실을 보았다. 다음은 일본이 사회주의 운동을 주된 목표로 삼아 탄압을 시작한 1920년대 후반부터 해방까지의 시기다. 일본의 탄압으로 사회주의 세력의 노동자운동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사회주의 세력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데,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대중을 조직하는 노선으로의 전환이 그것이었다. 이번 글에서는 첫 번째 시기의 운동을 살펴보도록 한다.

한일병합 이후, 자강운동과 근대소설의 출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조선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자강운동의 흐름이 지식인을 중심으로 생겨난다. 자강운동은 민족의식 고취, 실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운동이 중심이었는데, 자강운동을 추구한 지식인층이 집결해 조직한 비밀결사체가 바로 신민회였다. 신민회는 1907년에 결성되어 1911년 105인 사건으로 해산하기 전까지 국권회복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그런데 신민회 내부에서도 총독부 설치 이후의 긴박한 조선 상황을 반영한 강경한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무장투쟁론이 그것이다, 당시 자강운동은 온건한 운동으로 받아

들어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강경파로 불리기도 했다. 신민회가 해체된 이후 내부에 존재하던 두 흐름은 분화된다. 온건파(실력양성론)의 대표인 안창호는 미국으로 건너가 흥사단을 조직했고, 강경파(무장투쟁론)의 대표인 이동녕, 이회영 등은 만주로 건너가 무장투쟁을 준비했다. 마찬가지로 강경파였던 이동휘는 동아시아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건설하고 민족 독립과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한다.

한편 한일병합 후 자강운동의 중요한 수단은 언론이었다. 언론을 통한 정치사상 선전을 통해 점진적인 민족의 계몽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근대소설이 정립되기 시작했다. 민족계몽이라는 정치사상을 선전하기 위한 서사형식으로서 소설이 정립되었던 것이다. 즉 근대소설은 무지한 민중을 깨우쳐 민족의 앞날을 헤쳐가는 지식인의 사명이라는 외적 계몽과, 인간이성에 기반한 개인적 주체의 자각이라는 내적 계몽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다.¹

식민지 지식인의 실망,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실력양성론과 무장투쟁론이 분화된 이후 국내외에서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끊임없이 존재했다. 이 운동은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3·1운동이다. 그러나 운동의 목표였던 독립은 결국 단시일 내에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염상섭의 두 번째 창작집 『견우화』의 ‘자서’(自序)에서 밝힌 작가의 말에 따르면,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정신적 원인을 가진 자가, 공상과

1 송지연, 「1910년대 계몽의 기획」, 《구보학보》, 2008.

오뇌(뇌우쳐 한탄하고 번뇌함)가 극하여 육(체)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광한 후에 비로소 몽환의 세계에서 자기의 미숙한 이상의 일부를 토함을” 그런 작품이다.²³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나의 권태로움을 그려내면서 지식인의 실망을 표현하고, 그 끝에서 ‘나’가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것으로 끝맺는 작품이다.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화자인 ‘나와 친구들이 김창역을 만나는 이야기다. 다른 한 부분은 김

2 김병구, 「1920년대 초기 염상섭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연구」, 《우리문학연구》 35, 2012.

3 작가 염상섭은 189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대한제국 중추원 의관이었고 아버지는 가평 군수였다. 1907년 관립사범보통학교에 입학했고, 이토 히로부미 입정(入京)행사에 동원되는 것에 항의하여 자퇴하고 보성소학교로 전학을 간다. 1911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대학에 입학한다. 1학기만 마치고 병으로 자퇴를 한 뒤, 1919년 3·1운동에 자극되어 오사카 덴노지 공원에서 거사를 도모하다가 피검된다. 출옥 후 요코하마 북음인쇄소 작공으로 일하다가 《동아일보》 기자로 임명되어 기자 활동을 시작한다. 1921년 「표본실의 청개구리」로 본격적으로 문학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만세전」, 「삼대」, 「무화과」 등의 작품을 남긴다. 이후 1937년 초에 소설을 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만주국 기관지인 《만선일보》의 편집국장이 된다. 그 후 1939년 《만선일보》를 그만두고 일본의 대동항 건설주식회사 홍보담당관이 된다. 염상섭의 이와 같은 행보는 친일 경력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해방 후 《경향신문》의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사퇴한 후 성균관대에 출강하면서 창작에 전념한다. 이 시기 「취우」, 「젊은 세대」, 「대를 물려서」 등의 작품을 발표한다. 1963년 암으로 자택에서 사망한다.

염상섭은 리얼리즘 소설의 대가이자 한국 현대 소설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작가로 평가받는다. 그의 출세작인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현대소설의 진정한 주춧돌을 놓은 작품이라 평가받는다. 염상섭의 정치이념은 자유주의였고 해방정국에서는 남북의 주류였던 양극을 기각한다는 의미에서 중도파였다. 동시에 그는 좌파의 ‘심파다이저’(sympathizer, 동조자)이자 동반자였다. (윤소영, 『한국사회성격 논쟁 세미나 I』, 공감, 2020.) 좌파에 동조했지만 1920년대 중반, 프로문학(프롤레타리아 문학) 작가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논쟁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카프) 내부에서 벌어진 내용·형식 논쟁의 전조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즉 염상섭은 프로문학의 의의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보편성과 예술미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해방 후에는 『효풍』을 통해 단선·단정을 비판하면서 한국전쟁을 예상하기도 했는데, 리얼리즘의 대가로서 그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윤소영, 같은 책.)

「표본실의 청개구리」의 작가 염상섭의 모습이다. 이마에 혹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 것이 유명했는지 그를 그린 삽화에는 혹이 그려진 경우가 많다. 가족들은 치료를 권했으나 본인은 병원에 갈 필요없다며 번번이 거절했다고 한다. 혹이 생명에 지장을 주는 병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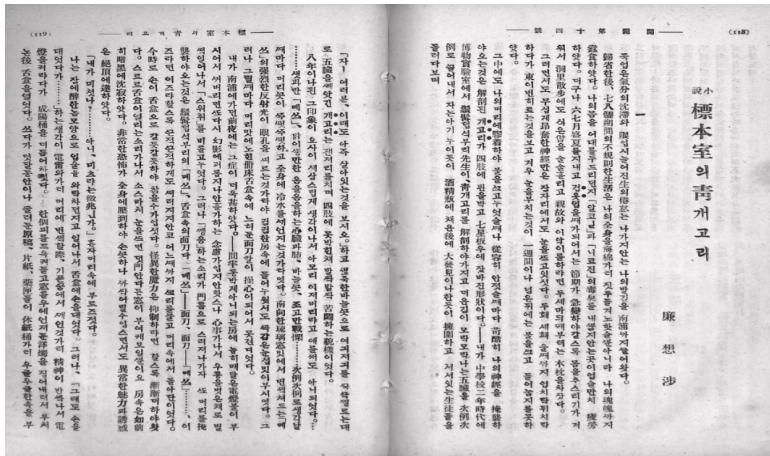


창역의 개인사로, 불의의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집안이 무너지고, 그 자신도 점차 정신을 놓아가는 와중에 3층 집을 짓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본 글에서는 화자인 ‘나’에 초점을 맞춰서 소설을 따라가 본다. ‘나’는 어떤 이유로 생의 권태를 느낀다.

무거운 기분의 침체와 한없이 늘어진 생의 권태는 나가지 않는 나의 발길을 남포까지 끌어 왔다.

귀성한 후 칠팔 개삭간의(개월간의) 불규칙한 생활은 나의 전신을 해면같이 짓누르려 놓았을 뿐 아니라 나의 혼백까지 두식하였다.(좀이 슬었다.) 나의 몸의 어디를 두드리든지 알코올과 니코틴의 독취를 내뿜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피로하였다.

이 작품 속에 3·1운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소설 집필 시기가 3·1운동의 직후라는 점, 작가가 1919년 3월 19일, 오사카 덴노지 공원에서 거사하기로 했으나 미수에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연재된 《개벽》 14호. (사진 출처: 현담문고 홈페이지)

그쳐 검거된 적이 있었다는 점, 끝으로 작가가 “3·1운동 당시에는 이미 독립됐다는 소문부터 만세 부르면 독립된다는 소문까지 각종 루머가 뒤섞여 흘러 다녔으며, 1919년 4월까지도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오히려 소수에 불과했다”고 인식했을 정도로 운동의 전망을 낙관했다는 점 등을 미루어보면 이 작품이 3·1운동 이후 작가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무섭게 앙분한 신경만은 잠자리에도 눈을 뜨고 있었다. 두 해, 세 해 올 때까지 옆치락뒤치락거리다가 동이 번히 트는 것을 보고 겨우 눈을 붙이는 것이 일주일간이나 넘은 뒤에는 불을 끄고 드러눕지를 못하였다.

그 중에도 나의 머리에 교착하여 불을 끄고 누웠을 때나 조용히 앉았을 때마다 가혹히 나의 신경을 엄습해 오는 것은, 해부된 개구리가 사지에 핀을 박고 칠성판 위에 자빠진 형상이다.

내가 중학교 2년 시대에 박물 실험실에서 수염 텃석부리 선생이
청개구리를 해부하여 가지고 더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장을 차례
차례로 끌어내서 자는 아기 누이듯이 주정병에 채운 후에 웅위하고
서서 있는 생도들을 돌아다보며 대발견이나 한 듯이,

“자 여러분, 이래도 아직 살아 있는 것을 보시오.”

하고 뽀죽한 바늘 끝으로 여기저기를 콕콕 찌르는 대로 오장을
빼앗긴 개구리는 진저리를 치며 사지에 못 박힌 채 벌떡벌떡 고민하
는 모양이었다.

소설 속 ‘나’가 강박적으로 떠올리는 모습은 해부된 개구리가 사지
에 핀을 박고 있는 모습이다. 이것저것 빼앗긴 채 살아있기는 하나 아
무 것도 하지 못하는 개구리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
어 술과 담배만 하고 있는 ‘나’는 비슷한 처지다. 다만 소설 속에서 왜
답답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 3·1운동의 실패
후 일본의 감시 속에서 활동이 제약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권태를 느끼는 와중에 친구인 H에 이끌려 남포로 여
행을 떠나게 된다. 남포에서 또 다른 친구인 Y와 A를 만나 남포의 광
인(狂人) 김창억을 만난다. 김창억은 불의의 사건으로 4개월간 투옥되
는데, 그 사이 아내가 도망간 것을 알고 점차 정신을 놓기 시작한다. 이
후 유곽 근처에 3원 50전을 들여 3층 집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분
부대로 동서양 모두가 친목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동서친목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자임한다.

“아까 말씀한 것같이 성경이 가르치신 바 불의 심판이 끝나지 않
았습니까. 구주 대전(세계대전)의 그 참혹한 포연 탄우가 즉 불의 심

판이외다그래. 그러나 이번 전쟁이 왜 일어났나요…: 이 세상은 물질 만능, 금전 만능의 시대라 인의예지도 없고, 오륜도 없고, 애도 없는 것은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욕에 더럽혀진 까닭이 아님니까…: 부자, 형제가 서로 반목 질시하고 부부가 불화하며 이웃과 이웃이, 한 마을과 마을이…: 그리하여 한 나라와 나라가 서로 다투는 것은 결국 물욕에 사람의 마음이 가리웠기 때문이 아니오니까.”

김창억은 세계대전이 금전만능의 시대라 사람의 마음이 더럽혀진 까닭이라고 연설한다. 이제는 세계대전도 끝났으니 동서가 친목할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며 세계 평화와 인류애에 대해 강변한다. 사뭇 진지한 그의 연설 내용과 달리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은 그가 광인으로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한다.

“선생님 그러면 금강산에는 언제 들어가실 텐가요?”

A가 놀렸다.

“한 전 다아 돌아다닌 후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응….”

그는 눈을 뚝그렇게 뜨고 A를 바라보았다.

“아, 선생님 망령이 나셨나보구먼…: 금강산에 들어가시면 군수나 하나 시켜 주신다더니…”

일동은 박장대소를 하였다.

“응! 가기 전에 시켜 주지!”

그의 하는 말에는 조금도 농담이 없었다. 유창하게 연설 구조로

열변을 토할 때는 의심할 여지없는 어떠한 신념을 가진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금강산에 옥좌는 벌써 되었나요?”

Y는 웃으며 말하였다.

“예, 이 집이 낙성되던 날 벌써 꾸며 놓았답니다.”

하고 여러 사람의 웃음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성 중에 김씨가 제일 좋은 성이외다, 옥은 곤강에서 나지만도 금은 여수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너는 김가니 산고수려한 금강산에 들어가서 옥좌에 올라앉아 세계의 평화를 누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금강산에 들어가 옥좌에 앉아 세계의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말하는 김창억이다. 김(金)자에 대해서도 사람 인(人)에 구슬 옥(玉)이니 사람구슬 금으로 잃어야 하며 사람구슬을 위해서는 구슬 2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씨 여성은 어찌 된 것이냐는 친구들의 조롱에 자기 부인은 안(安)가 라면서 “여편네가 관을 썼다”고 웃는다. 이 밖에도 김창억은 말이 되지 않는 여러 이야기를 한다. 이를 들으며 ‘나’의 친구들은 김창억을 조롱하지만, ‘나’는 그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라 생각한다.

동서 친목회 회장… 세계 평화론자… 기이한 운명의 순난자… 몽현(夢現)의 세계에서 상상과 환영의 감주(甘酒)에 취한 성신의 총아 오욕육구(다섯 가지 욕심과 버려야 할 여섯 가지), 칠난팔고(불교에서 말하는 일곱 가지 난이변과 여덟 가지 고통)에서 해탈하고 부세의 제연(덧없는 세상의 모든 인연)을 저버린 불타의 성도(석가모니의 제자)와, 조소에 더러

운 입술로 우리는 작별의 인사를 바꾸고 울타리 밖으로 나왔다.

(…)

“3원 50전으로 삼층집을 짓고 유유자적하는 실신자를 아니오, 아니오, 자유민을 이 눈앞에 놓고 볼제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소. 현대의 모든 병적 다크사이드를 기름 가마에 몰아 놓고 전축하여(쌓아올려) 최후에 가마 밑에 잡아붙은 오뇌의 환약이 바지직바지직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욕구를 홀로 구현한 승리자 같기도 하여 보입시다…: 나는 암만 하여도 남의 일같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김창역을 만나고 난 뒤, ‘나’는 친구인 P에게 편지를 쓴다. ‘나’는 김창역의 모습을 남의 일 같이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나’는 나의 신념대로 살 수 없는 현실에 실망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반대로 김창역은 신념대로 살고 있으나 정신은 놓아버렸다. ‘나’는 정신을 유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혹은 미치지 않으면 신념을 지킬 수 없다는, 선택할 수 없는 양자택일 속에서 고뇌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창역에 대해 남의 일 같이 생각할 수 없음은 ‘나’도 김창역처럼 미쳐버릴 수 있다는 동질감을 느낀 것이었다.

그러던 중 ‘나’는 Y에게 김창역이 3층 집을 불태우고 홀연히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는다. ‘나’는 그 장소를 찾아간다.

사람 하나가 간신히 통행할 만한 길 오른편 언덕에 거무스름하게 썩어서 문정문정하는(물러서 조금만 건드려도 끊어지는) 짙으로 에워싼 한 칸 집이 있고, 그 아래에는 비스듬하게 짓다가 둔 헛간 같은 것이 있다. 나는 늘 보았건만 그것이 본체가 무엇인지 아직껏 물어

도 보지 않았다. 그러나 삼층 양옥의 실화(失火) 사건의 통지를 받고는 새삼스럽게 눈여겨 보았다. 나는 두세 걸음 지나가다가 다시 돌쳐서서(돌아서서) 언덕으로 내려와서 사면팔방을 명석으로 꼭 틀어막은 괴물 앞에 섰다.

나는 무슨 무서운 물건이나 만지듯이 입구에 드리운 명석 조각을 가만히 쳐들고 킁킁한 속을 들여다보았다. 광선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속에서는 쌀쌀한 바람이 휙 끼칠 뿐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공연히 마음이 선평하여 손에 쥐었던 거적문을 놓으려다가 다시-자세히 검사를 하여 보았다. 그러나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기둥 두 개를 나란히 늘어 놓은 위에 나무 관 같은 것을 놓고 그 위에는 언젠지 대동강 변에서 본 봉황성 대가리 같은 단청한(옛날 집의 벽, 기둥 등에 여러 빛갈로 무늬를 그린) 목판짜이 얹혀 있었다. 나는 보지 못할 것을 본 것같이 꺼림하여 마른침을 탁 뱉고 돌아서 동독위로 올라왔다.

저녁 밥상을 받고 앉아서 주인더러 등 너머의 일간두옥(한 칸짜리 작은 집)은 무엇이나고 물으니까,

“그것이 이 촌에서 천당에 올라가는 정거장이라우.”

하고 웃으며 동리에서 조직한 상계(장례를 위한 계)의 소유라고 설명하였다. 이 촌에서 난 사람은 누구나 조만간 그 곳을 거쳐야만 한다는 묵계가 있다는 그의 말에는 무슨 엄숙한 의미가 있는 것같이 들리었다. 나는 밥을 씹으며 저를 손에 든 채로 그 내력을 설명하는 젊은 주인의 생기 있는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앉았었다. 그 순간에 나는 인생의 전 국면을 평면적으로 부감한(높은 곳에서 내려다 본) 것 같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동시에 무거운 공포가 머리를 누르

는 것 같았다.

그 날 밤에 나는 아무것도 할 용기가 없어서 몇몇 청년이 몰려와서 떠드는 속에 가만히 드러누웠었다. 어쩐지 공연히 울고 싶었다. 별로 김창역을 측은히 생각하여 그의 운명을 추측하여 보거나 삼층 집 소화한 후의 행동을 알려는 호기심은 없었으나 지금쯤은 어디로 돌아다니나 하는 생각이 나는 동시에 작년 가을에 대동강 가에서 잠깐 본 장발객의 하얀 신경질적 얼굴이 머리에 떠올랐다.

과연 그가 그 후에 어디로 간 것은 아무도 몰랐다. 더구나 뱀보라도 더 두려워하고 꺼리는 평양에 나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몽상 외였다. 그러나 그는 결국 평양에 왔다. 그의 후취(두 번째 아내)의 본가가 있는 곳이다.

…… 일 년 열 두 달 열어 보는 일이 없이 꼭 닫은 보통 문밖에 보급자리 같은 짚더미 속에서 우물우물하기도 하고 혹은 그 앞 보통 강가로 돌아다니는 걸인은 오직 대동강 가의 장발객과 형제거나 다만 걸인으로 알 뿐이요, 동리에서도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개벽》, 1921.8.

다시 찾아간 김창역의 집은 마치 괴물처럼 새롭게 보인다. 그러면 인생의 전 국면을 평면적으로 부감한 것 같은 깨달음을 얻는다. ‘나’는 집이 불타버린 뒤 그것의 실체를 다시 인식했듯, 김창역을 자유인이라 인식했던 것도 실제로는 허망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이는 자유인이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은, 그저 미쳐버린 사람인 장발객을 떠올리는 것으로 표현된다. 작가는 김창역의 말로를 설명하면서 소설을 마무리

한다. 김창익은 그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걸인이 되었을 뿐이다.

「표본실의 청개구리」에서 ‘나’는 실천의 어떤 가능성도 차단되어 있는 현실과 자신의 이상향의 괴리 속에서 고통받는 인물이다. ‘나’의 고통은 곧 작가의 고통이기도 했다. 작가는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발표하기 전에 집필한 「저수(樗樹, 가죽나무) 하(下)에서」라는 에세이에서도 그런 정신적 고통을 표현한 바 있다. 그런데 작품 속에는 ‘나’가 무언가를 지향하며 달려가고픈 생각을 표현한 내용이 한 구절 등장한다. 잠시 작품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하여간 이 방을 면하여야 하겠다.”

지긋지긋한 듯이 방 안을 휘익 둘러본 뒤에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디든지 여행을 하려는 생각은 벌써 수삭(개월) 전부터 계획이었지만 여름에 한 번 놀러 가 본 신흥사에도 간다는 말뿐이요, 이때껏 실현은 못 되었다.

“어디든지 가야겠다. 세계의 끝까지, 무한에, 영원히, 발끝 자라는 데까지, 무인도! 시베리아의 황량한 벌판! 몸에서 기름이 부지직 부지직 타는 남양! 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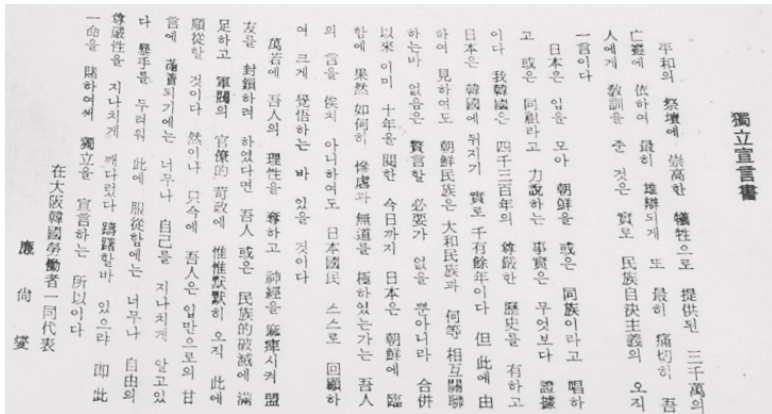
나는 그림 엽서에서 본 울창한 산림, 야자수 밑에 앉은 나체의 만인을 생각하고 통쾌한 듯이 어깨를 으쓱하여 보았다. 단 일 분의 정거도 아니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힘 있는 군센 숨을 헐떡헐떡 쉬는 폴스피드의 기차로 영원히 달리고 싶다… 만일 타면 현기가 나리라. 염려만 없었으면 비행기! 비행기! 하며 혼자 좋아하였을지도 모랐었다.

‘나’는 그 수단을 찾지 못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어떤 지향점마저 상실한 것은 아니다. 현실을 뚫고 자신의 지향을 추구해 나가기를 원한다. 이 역시 작가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리라. 염상섭은 허망함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이 작품을 쓰던 전후 시기부터 자신의 지향점으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그것은 무엇이었나?

염상섭은 3·1운동 당시에도 오사카에서 ‘재(在)오사카한국노동자대표’라는 명의로 독립선언을 준비했다. 이 사건을 준비할 당시 함께 했던 두 인물이 아나키즘적 경향이 있던 황석우와 사회주의로 기울고 있던 변희용이었다. 또 염상섭은 독립선언을 준비하다가 발각되어 피검되었다가 출옥한 후 요코하마 복음인쇄소에서 노동자로 일하기도 했다. 이미 노동운동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던 염상섭은 「표본실의 청개구리」 등 그의 초기 3부작을 집필하던 전후의 시기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된다. 여기서 넓은 의미란 본격적으로 프로문학(프로레타리아 문학)을 지향한 작가들의 사상과는 거리가 있지만, 염상섭 역시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지지했다는 의미다.⁴ 이후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삼대』, 『무화과』 등의 작품에서는 ‘심파사이저’(sympathizer, 동조자)가 등장하는데, ‘동반자 없는 사회주의자’는 존재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 없는 동반자’는 그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의 사상은 사회주의를 전제하는 것이었다.⁵

4 염상섭은 무산문학이 시대적 정황 속에서 자연스레 태동한다면 용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후에는 더 나아가 “진정한 프로레타리아 문학은 완전히 해방된 프로레타리아, 갱생된 프로레타리아가 잃었던 자기의지를 되찾고 자유롭게 흐르는 위대한 생명을 예찬하기 위하여 건전한 정신과 사상에서 성장하는 문학이어야 할 것”이라고 그 건전한 지향의 방향을 적시하고 있다. 김경수, 「염상섭과 프로문학」, 《문학사와 비평》 9, 2002.

5 이종호, 「염상섭의 자리, 프로문학 밖, 대항제국주의 안-두개의 사회주의 혹은 ‘문학과 혁명’



염상섭이 작성한 독립선언문이다. 명의를 '재(在)대관(오사카)한국노동자일동대표 염상섭'으로 되어 있다. 그는 오사카 공장지대의 합숙소를 돌면서 한인 노동자들에게 격문과 빨간 형짚을 나누어 주며 덴노지 공원에서 있을 집회의 참가를 독려했다. (사진 출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이와 같이 지식인들은 3·1운동을 통해 독립을 달성하지 못해 크게 실망했지만 운동의 실패 이후 곧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지식인이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전 사회적으로 사회주의가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3·1운동의 진정한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즉 1920년대부터 활발히 벌어지는 사회주의 운동을 지도적 위치에서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활동가가 3·1운동을 경험하면서 작성했다. 게다가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등 전 민중적 차원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자 하는 집단적 조직과 운동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가 확산하면서 특히 노동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노동을 통해 성공할 수 있

의 사선(斜線), 《상허학보》 38, 2013.

다는 근대적 인식의 단초가 형성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런 인식이 신문 지면에 실리고 전 사회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은 3·1운동 이후 사회주의가 확산하면서부터였다. 노동에 대한 인식변화에서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 노동과 자본의 대립과 계급투쟁에 관한 이론 등에 대한 논의도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내용은 주로 진보적 지식층의 운동에 의한 것이었다. 1920년대 노동운동은 사회주의를 수용한 지식인층이 주도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사회주의 지식인들의 활동, 심훈의 『동방의 애인』

초기 사회주의 운동을 펼쳐나가던 지식인과 그들이 설립한 단체들은 한국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런 단체들이 없었다면 한국 사회주의 운동은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식민지 시대 사회주의 단체들은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파벌이라는 통념이 존재한다. 이런 부정적 인식의 근원은 바로 일본의 고등경찰이었다. 식민지의 질서를 위협하는 자를 부도덕한 존재로 간주하는 것은 일본 경찰의 수법이 었다. 부정적 의미 부여는 냉전 시기 미국과 남한 정치학자에 의해 재생산되어 통념으로 자리 잡았다. 사실 이런 인식은 북한에서도 발견된다. 북한의 집권세력이 초기 사회주의 전통과 단절된, 그들만의 정체성을 형성하려 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최근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여러 단체의 대립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과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대립은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르

쿠츠크파의 경우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혁명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되는 것으로, 거칠게 말하자면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족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봤다. 상해파의 경우는 민족해방을 최소강령으로 제시하면서, 노동자·농민이 주체가 된 민족해방이 이뤄진 후에 사회주의 혁명으로 혁명을 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두 계파의 분리는 조선 민중의 진정한 해방을 지향하는 데 있어 어떤 노선이 더 옳을 것인가라는 정치사상적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단순한 파벌 싸움만은 아니었다. 여러 사회주의 단체 간의 이견은 대체로 이와 같은 노선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처음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동휘였다. 이동휘는 신민회 출신 인사로 신민회 내부의 급진파(무장투쟁론)였다. 그는 무장투쟁을 위해 만주로 갔다가 다시 러시아의 극동지역(바이칼 호~태평양에 이르는 러시아 영토)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곳에서 1918년,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창당한다. 한인사회당은 한국 민족해방운동과 러시아 혁명운동 간의 국제적 연계를 목표로 하였다. 즉 러시아 노동계급과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압박받는 한국의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인사회당의 활동은 길지 못했다. 제국주의 열강이 개입한 시베리아 내전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소비에트 정부가 붕괴되고 이 지역의 사회주의 운동이 불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인사회당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도부는 가까스로 탈출해 근거지를 연해주로 옮겨 당을 재정비한다. 이곳에서 내부 논의 끝에 상해임시정부에 당 간부들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동휘와 김립 등이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한다. 이동휘는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에, 김립은 국무원 비서장



1920년 상해에 도착한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 환영회의 사진이다. 가운데 화환을 목에 걸고 있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왼쪽이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 오른쪽이 임시정부 노동국 총판(국장) 안창호다. (사진 출처: 위키백과)

에 취임한다.

일본의 검열로 완성되지 못한 심훈의 『동방의 애인』은 사회주의자의 사랑과 투쟁을 다룬 소설이다.⁶ 소설에는 박진, 김동렬, 강세정, 배영

6 작가 심훈은 1901년 경기도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대섭이다. 1919년 서울 경성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에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투옥된다. 출소 후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이회영, 신채호 등을 만난다. 1923년 프로문학운동을 표방한 연군사에 가담했고 카프가 결성될 때 발기인으로 참가했으나 그 이듬해 탈퇴한다. 이후 영화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영화배우로 활동하기도 했다. 1930년 첫 장편소설 『동방의 애인』을 발표한다. 이후 『불사조』, 『영원의 미스』, 『적녀성』을 발표하고 농촌계몽소설 『상록수』를 발표한다. 『상록수』의 단행본 출간과 영화화를 위해 애쓰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1936년 사망한다. 일반적으로 심훈은 저항시 「그날이 오면」과 농촌계몽소설 『상록수』로 유명하다. 그런데 그

숙, X씨가 등장한다. 박진과 김동렬은 논자에 따라 해석이 다르나 박헌영을 모델로 하고 있고, 강세정은 주세죽을 모델로 하고 있다. X씨는 박진과 김동렬의 사회주의 활동을 지도하는 인물인데, 논자에 따라 그를 이동휘를 모델로 한 인물로 해석하기도 한다.

작가의 말

남녀간에 맺어지는 연애의 결과는 조그만 보금자리를 얹어 놓는데 지나지 못하고, 아버지와 자녀간의 사랑은 핏줄을 이어 나아가는 한낱 정시로 간계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더 크고 깊고 변함이 없는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민족과 같은 계급에 처한 남녀노소가 사랑에 겨워 껴안고 몸부림칠 만한 새로운 공통된 애인을 발견치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는 1920년 중국으로 건너간 전후의 시기부터 사회주의를 지향했다. 카프 초기 맹원이었던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또한 사회주의 운동의 지도자인 박헌영과 경성고등보통학교 동창으로 둘은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해서는 1차 공산당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1927년 출소한 박헌영을 보고 지은 시 「박군의 얼굴」이 유명하다. 시에는 세 명의 박군이 등장하는데, 각각 박열, 박순병, 박헌영이다. 박순병 역시 2차 공산당 사건으로 피검되어 고문을 받다 숨진 사회주의 활동가다.

이런 맥락에서 『상록수』 역시 단순한 농촌계몽소설이 아니라 일본의 검열을 피하고 그 안에서 허용 가능한 사회주의 서사의 변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하상일, 「심훈의 생애와 시세계의 변천」, 《동북아 문화연구》 49, 2016.) 국권과 국호, 국토를 나타내는 단어를 배제하는 검열 속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향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심훈의 시 「무사시노(武藏野, 일본의 지명)에서의 2연 첫 두 행은 “두 사람의 시선은 아득히/고국의 한울을 더듬으며”였지만, ‘고국’이라는 두 글자를 검열관이 삭제하자 심훈은 ‘국(國)’을 ‘향(郷)’으로 바꿔놓고 있다. (한만수, 「1930년대 ‘향토’의 발견과 검열우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0, 2006.) 검열된 국토의 대리 보충물로서 향토로서의 우회 전략으로 당대 사회의 모순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동방의 애인』 작가 심훈과 『동방의 애인』 연재 예고가 실린 《조선일보》 1930년 10월 26일 기사. (작가 사진 출처: 위키백과)

나는 그것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초조하게도 기다려지던 그는 우리와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 속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에게 그의 정체를 보여드려야만 하는 의무와 감격을 아울러 느낀 것입니다.

작가의 말에서 “공통된 애인”이란 바로 사회주의를 표상하는 것이다. 소설 속 동렬은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은 듣기만 해도 속이 상합니다. 가공적 민족주의! 환멸거리지요. 우리는 다른 길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세정에게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다른 길 역시 사회주의 혁명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동렬이와 박진(본이름이 아니다)이는 고향은 다름망정 서울 어느 사립 중학교에서 사년 동안이나 같은 반에서 공부하던 동창생으로

막역한 사이였다. 동렬이는 박진의 불덩이같은 정열과 모험이 있는 것을 사랑하였고, 박진이는 무슨 일이든지 의지적이며 침착하여 함부로 덤비지 아니하는, 자기와 반대되는 성격을 동렬에게서 발견하고 너무 과격한 자기의 성질을 조화시키려는 생각이 그와 친근해진 원인의 하나였다. 그들은 흡사 동성연애나 하는 사람처럼 예산 없는 학비나마 내 것 네 것없이 나누어 쓰고 이불 한 채를 둘이 덮고 한겨울을 난 일도 있었다.

그러다가 졸업하게 된 해가 바로 기미년! 당시의 의학생이요 그들이 형님이라 부르던 이경재는 자기 집 골방에서 xx공보의 원고를 쓰고, 동렬이는 등사판질을 하는 한편 진이는 밤을 타서 배달부 노릇을 하다가 그만 한 끈에 묶여서 경찰서를 거쳐 처음으로 감옥에 입학하였다. (...) 처음 타 보는 자동차 속에는 여학생 한 사람이 포박을 당한 채 먼저 타고 있었다. (...) 그는 xx학당의 학생으로 시위운동에 앞장을 서서 지휘하던 여자였는데, 한 끈에 묶이고 한 자동차로 같은 감옥문으로 출입한 것이 인연이 되어 나중에 동렬이와 결혼까지 한 지금의 세정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박진, 동렬, 세정은 3·1운동에서 참여하다가 잡혀 투옥된 적이 있는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1년이 넘는 형기를 마치고 나왔으나 그 고초는 그들로 하여금 도리어 참을성을 길러주고 의기를 돈우기에 귀중한 체험이 되었다.

실제 모델인 박헌영도 3·1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평생에 걸쳐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존중했다.⁷ 3·1운동 당시 그는 격문을 쓰고 그

7 박헌영의 활동과 삶에 대한 내용은 안재성, 『박헌영 평전』, 실천문학사, 2009를 참고했다.



(왼쪽부터) 상해에 머물던 시절 박헌영과 김단야, 주세죽. (사진 출처: 《한겨레21》)

것을 등사하는 역할을 했다. 다만 박헌영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또 그 3·1운동을 계기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그는 3·1운동이 자신을 공산주의자 진영으로 이끌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소설 속 박진과 동렬은 끓는 그 의지를 가지고 젊은 투사들이 모이는 상해로 건너간다. 그들은 상해에 어떤 연고도 없었으나 그들의 행색을 보아하니(허름한 옷가지의 조선인) 운동을 하러 왔을 것이라 짐작한 한 윤식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데려가 X씨를 소개시켜준다. X씨는 그들에게 “서북간도에서 마적에 붙잡혀갔던 이야기” “시베리아에서 전쟁하던 추억담” 이야기를 해준다.

한편 실제 박헌영도 1919년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우여곡절 끝에 독립운동을 위해 상해로 간다. 이곳에서 김단야를 비롯한 여러 공산주의자들과 교류한다. 이 무렵 상해에는 두 개의 공산당이 존재했는데, 하나는 이동휘가 만든 상해파 고려공산당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이었다. 박헌영, 김단야 등 젊은 공산주의자들은 둘 중 하나에 가입해야 했는데, 이동휘는 능력을 확인한 후에 가입시켜

야 한다며 가입조건을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했다. 이에 박헌영은 큰 제한이 없던 이르쿠츠크파에 가입한다.

가입한 뒤 젊은 공산주의자들은 고려공산청년단 상해회를 조직한다. 박헌영은 비서직을 수행하면서 기관지 편집, 이론서 번역 및 출판, 지회결성 등 분주한 활동을 벌인다. 1921년에는 각 지역 고려공산청년단의 대표가 북경에 집결해 고려공청 중앙총국을 결성한다. 박헌영은 중앙위원에 선출된 동시에 최고책임자인 책임비서가 되었다.

그런데 박헌영이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아닌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에 가입한 사실은 소설의 X씨가 이동회를 모텔로 했다는 해석과 온전히 부합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기형은 “작가인 심훈이 박헌영의 행적을 서사의 골격으로 삼으면서도 혁명운동의 방향은 이동회의 민족적 사회주의 노선을 지지했다”고 해석한다.⁸

다시 소설로 돌아가서, 그렇게 X씨와 교류하며 상해에 자리를 잡아 가던 중에 동렬은 세정에게 편지를 부친다. 세정은 편지를 받자마자 한 걸음에 상해로 건너온다. 동렬은 반갑지만 고민된다.

상해까지 뛰어나와 이다지 고생을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연애는 인생에게는 큰일인 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고 있을 겨를도 없거니와 큰 일을 경륜하는 사람으로
는 무엇보다도 여자가 금물이니 가장 큰 장애물이다. 도를 닦는 중
과 같이 제물을 간직하더라도 그 한 몸뚱이조차 의지할 곳이 바이없
는 조선놈의 신세가 아닌가. 세정이가 오고 진이마저 그 여자와 관계

8 한기형, 「서사의 로컬리티, 소설된 동아시아-심훈의 중국체험과 『동방의 애인』」, 《대동문화연구》 63, 2008.

가 깊어 간다면 우리 두 동지는 상해까지 연애를 하려고 원정을 나온 셈이다. 무슨 면목으로 다른 동지들을 대하겠는가? 변명할 도리조차 없다.

아아, 큰 일을 위하여는 이 육신을 산 제물로 바치려고 맹세한 우리로서 해외에 나와 첫 번으로 착수한 사업이 연애란 말이나?

아니다. 안 된다! 우리는 여자와 관계를 맺을 자격이 없다. (...) “세정이는 이 ‘하아트’를 이해할 이성의 동지다. 그 밖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세정이 도착하여 반가운 동렬이었다. 동렬과 박진, 세정은 함께 야학에 다니며 중국말을 공부한다. 그곳에서 영숙이를 만난다. 영숙이는 서울 기독교 장로의 무남독녀로 아버지를 따라 상해에 왔다가 아버지는 임시정부의 명을 받고 미국으로 갔고, 영숙은 홀로 남아 음악학교 봄 학기 입학할 준비하고 있다. 친분을 쌓은 세정이는 영숙이네 숙소로 짐을 옮겨 함께 살게 된다. 함께 살며 세정은 책을 읽고(로자 룩셈부르크의 전기) 영숙이는 털실로 자켓을 짜면서 지낸다. 동렬과 세정, 박진과 영숙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감정이 얹혀간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그동안 동렬이와 진이는 X씨의 집을 출입하면서 시국에 대한 토론도 하고 장래에 취할 방책에 대한 논의도 했다. 그러면서 두 청년은 평소 해외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일시에 흥분되었던 기분에 들떠서 중구난방으로 날뛰는 뿐이고, 좀 더 깊은 근본문제를 등한시했던 것을 깨닫는다.

X씨를 중심으로 동렬이와 진이와 그리고 그들의 동지들은 지난 날의 모든 관념과 ‘삼천리 강토’니 ‘이천만 동포’니 하는 민족에 대한

전통적 애착심까지도 버리고 새로운 문제를 내걸었다. 그 문제 밑에서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듯 하여 몇 달을 두고 토론하였다.

“왜 우리는 이다지도 굶주리고 헐벗었느냐?”

하는 것이 그 문제의 큰 제목이었다. 전 세계의 무산대중이 짓밟히는 계급이 모두 이 문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치 못하고는 결정적 답안이 풀려나올 수가 없다 하였다. 따라서 이대로만 지내면 조선의 장래는 더욱 암담할 뿐이라 하였다.

“왜 XX를 받느냐?”

하는 문제는 “왜 굶주리느냐?”하는 문제와 비교하면 실로 문젯거리도 되지 않을 만한 제삼 제사의 지엽 문제요, 근본 문제가 해결됨을 따라서 자연히 소멸될 부칙(附則)과 같은 조목이라 하였다.

이처럼 무산대중에 주목하면서 무산대중이 짓밟히는 계급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지 않는 한 조선의 장래는 암담할 뿐이라고 인식한다. 이 굶주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식민지의 문제도 자연히 소멸될 것이라 여겼다. 이후부터 동렬이, 진이와 세정이는 X씨가 지도하고 책임지고 있는 ○○당 ××부에 입당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동포’니 ‘형제자매’니 하는 말을 집어치우고 피차 동지라고만 불렀다. 그 뒤부터 X씨는 동렬이와 진이를 신임해 당의 중요한 일까지 맡겼다. 진이는 영숙이까지 동지가 되지 못한 것이 못내 섭섭하여 그녀를 우리 그룹에 넣고야 말리라는 야심을 가지게 되었다.

시간이 또다시 흐르고 박진은 X씨의 소개로 ○○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는 진이의 성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중국 학생들의 사상경

향이 급격히 변해가는 때”인만큼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 속으로 파고들어 훗날을 도모하라는 계획도 고려한 것이었다.

한편 동렬이는 세정과 함께 사랑을 속삭이는 광경을 X씨에게 들키고 만다. 동렬이는 무릎을 꿇고 X씨에게 용서를 빈다. 그러나 오히려 X씨는 둘의 사랑을 응원하고 둘의 결혼 예식을 약속한다.

실제 박헌영도 상해 시절에 첫 아내인 주세죽을 만났다. 함흥 출신으로 박헌영보다 두 살이 많았던 주세죽은 고향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3·1운동에 참가해 한 달간 수감된 전력이 있었다. 석방 후 병원에서 근무하다 1921년에 상해로 건너와 허정숙의 소개로 박헌영을 만난다. 박헌영과 주세죽은 곧 연인 사이가 되고, 박헌영은 주세죽을 고려공청 사무실로 출근시킨다. 그녀의 주요 업무는 혁명운동에 관한 모든 기사와 자료를 모으고 세계 약소민족의 분포와 생산력, 생활상태 등에 관한 도표를 그리는 것이었다.⁹ (소설 속 세정이라도 동렬이가 지시하여 “스크랩북에 무산계급운동에 관한 기사를 오려 붙이기도 하고 세계 약소민족의 분포와 생활상태며 지역을 따라 생산과 소비되는 비교표를 꾸”뒀다.) 이 당시 생활은 무척 가난했는데, 이 때 도움을 준 것이 여운형이었다. 훗날 박헌영 부부의 결혼식을 열어주고 주례를 서준 이도 여운형이었다.

소설로 돌아가, 동렬과 세정이 결혼을 하고 박진과 영숙도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게 된다. 그리고 3년 뒤, 동렬과 세정은 여전히 상해에서 당의 업무를 수행한다.

동렬이는 세정과와 여전히 상해를 지키고 X씨와 연락하여 뒷일을 보살피고 한 편으로는 어학을 계속하여 공부하였다. 그 동안에

9 안재성, 위의 책.

새로이 출판되는 책을 뜯어 볼 만큼이나 늘었다. 그가 거처하는 방에는 맑스의 『자본론』을 위시하여 책이 들이쌓이고 신문잡지로 벽을 바르다시피 하였다. 그와 동시에 동렬이가 X씨의 대신으로 책임을 지고 지휘하는 당의 일은 그 세력이 내지(조선)에 까지 뻗치고, 그 곳의 청년당원만 하여도 오륙십명이나 되었다. 그들의 노력은 그동안 여러 파로 분열이 되어 서로 싸우는 중에도 그중의 대표적 존재로서 국제당의 인정을 받았다.

실제 박헌영의 고려공청은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코민테른에 의해 파벌로 간주되어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공청의 요청에 따라 공식적으로 승인받았다.

그해 칠월 상순 어느 날, 동렬이와 그 밖에 두 동지(소설에 등장하지 않은 사람)는 모스크바를 향하여 비밀히 떠났다. 십여일 후에 그곳에서 열리는 국제당 청년대회에 참여할 조선인 대표로 뽑혔던 것이다. (...) 오랫동안 동경하였던 모스크바 중앙 정거장에 도착하였다. 여러 날 같은 기차 속에서 기거를 하면서도 서로 모르고 있었던 다른 나라의 대표들도 십여명이나 함께 내렸다. 국제당 동양부에서는 환영의 기를 들고 나와서 그들을 맞았다. (...) 마중나온 사람 중에는 조선 사람도 한 사람 끼어 있었다. (...) 그 이튿날 제일 먼저 안내를 받은 곳은 레닌의 무덤이었다. (...) 안내자는 경건한 태도로 고인의 간단한 이력과 생사의 몇 가지 일화를 들려주었다. (...) (크렘린) 궁전의 광장을 나서려니 열두 시나 되었는데 공중에서 난데없는 노래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궁성의 높은 시계탑 위에서 종을 치는 대신에 기계장치로 인터네셔널이 울려나오는 것이었다. 일행은 그 맞은 편

에 있는 국영상점을 위시하여 노동국농민 박물관 등을 참관하였다.
 (...) 오후에는 속칭 공산대학이라는 K.Y.T.B 대학으로 갔다. 기숙사가
 지 돌아 나오려니까 안내하던 일본말 강사인 조선사람이 “우리 동포
 도 오십여 명이나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 대회는 사흘 후 크레믈린 궁전 안에서 열렸다. (...) 그들은 (...) 그
 나라 그 지방의 정세를 보고하고 장래의 방침과 전술에 관한 토론을
 하느라고 사흘이나 보냈다. (...) 그리하여 일주일 후에 대회는 끝났
 다. 또 그리하여 십여 일 후에 동렬의 일행은 짧은 시일이거나 많은
 실제의 견문을 얻고 상해로 돌아왔다. (미완)

《조선일보》 1930.10.21.~12.10.

동렬은 ‘국제당 청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다가 상
 해로 돌아온다. 소설은 여기서 미완으로 끝맺는다. 소설과 달리 박헌영
 이 소설의 ‘국제당 청년대회’에 해당하는 극동민족대회에 참가했던 것은
 아니었다. 박헌영은 고려공청 중앙총국 책임비서 자격으로 대표자를 선
 정·파견했을 뿐이었다.¹⁰

다만 박헌영도 러시아에 방문했던 적은 있다. 박헌영은 1925년 1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투옥되었고 1927년 출소한다. 이후 심신을 회복
 하던 박헌영, 주세죽 부부는 1928년 비밀리에 러시아로 망명한다. 망명
 중에 박헌영은 국제레닌학교에 입학한다. 국제레닌학교는 코민테른이
 운영하던 최고 간부 교육기관으로 입학이 매우 까다로웠으나 국제공청
 의 강력한 추천으로 입학하게 된다. 1929년 입학 후 1931년까지 박헌영
 은 경제학, 정치학 등에 대한 공부와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토론

10 임경석, “1920년대 연애소설인 듯, 연애소설 아닌”, 《한겨레21》 제1278호, 2019.

으로 시간을 보냈다.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한 활동도 함께 했다. 그는 1932년 상해로 돌아오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

1920년대 노동자운동의 또 다른 주역인 선진노동자, 심훈의 『불사조』

1920년대 중반에 이르면 조선 내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다. 사회주의 활동가들은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지하활동을 하는 동시에, 사상단체라는 합법 간판을 내걸고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하고 선전했다. 이는 일본의 이른바 ‘문화 통치’ 기간을 배경으로 했다. 즉 일본이 사상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허용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개적으로 탄압할 수도 없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코민테른 역시 조선 내 활동에 개입했는데, 코민테른 산하 조선담당국인 코르뷰로(고려국)와 오르그뷰로(조작국)가 그 임무를 담당했다.

이 시기 운동을 주도한 계층은 지식인과 선진노동자 계층이었다. 선진노동자 계층에서 중요한 구성원 중 하나는 인쇄공이었다. 인쇄공은 업무의 특성상 글을 접할 수밖에 없었기에 사회주의 사상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화요회 활동가들과 함께 결성한 인쇄직공조합은 조선공산당의 핵심 구성부분이 되기도 했다.

심훈의 장편소설 『불사조』에는 선진적 노동자인 홍룡과 덕순이 등장한다. (안타깝게도 이 작품 역시 일본의 검열로 완성되지는 못하였다.) 홍룡은 인쇄공, 덕순은 고무공장 여공이다. 홍룡은 경찰에 검거되지만 자백하지 않고 끝내 버텨내는 인물이다. 덕순은 노동단체의 명부를 경찰에



◀ 소설 『불사조』의 연재 예고가 실린 1931년 8월 15일 《조선일보》 기사.

빼앗길 뻔한 상황에서 입으로 명부를 삼켜 극적으로 단체를 지켜내는 인물이다. 『불사조』는 김계훈과 독일 여성 주리아, 한국 여성 정희의 서사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홍룡과 덕순의 이야기가 가미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번 호에서는 홍룡의 행적을 위주로 살펴보려 한다.

우선 소설의 주 서사인 김계훈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한다. 김계훈은 조선이 낳은 바이올린 천재로 독일로 유학을 간다. 그런데 그는 독일 유학 도중, 정희와 이미 혼인하여 아이까지 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뛰어난 반주자였던 주리아와 결혼한다. 그러나 계훈은 결혼 전부터 주리아를 짝사랑하던 청년을 내치지 못하는 주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주리아가 그와 바람이 날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의심은 주변 친구들의 이간질도 한몫 했다. 계훈은 자신의 과오가 있는 만큼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 찝찝한 일이었으나, 주리아가 다른 남자와 바람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결국 계훈은 (주리아가 보고 싶어 하기도 했기에) 조선으로의 귀국을 서두른다. 귀국하기 얼마 전, 계훈은 집안에 연통하여 정희를 집에서 내쫓고 자신의 과오를 숨기려 한다. 그러나 이

를 영원히 숨길 수는 없었고, 결국 주리아에게 모든 사실을 들키고 만다. 주리아는 조선에 머무르던 스투핀이라는 독일 남자와 떠나가고, 분을 참지 못한 계훈은 이 둘을 쫓아가 총으로 쏘 죽이려 한다. 계훈과 이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혼란 속에서 뜻하지 않게 계훈은 자신의 왼팔을 총으로 쏘고 만다. 이 부상으로 결국 바이올린을 켤 수 없는 몸이 된다. 었친 데 덮쳐 부유했던 집안도 일본 브로커의 사기로 잘못된 땅 투기에 휘말려 파산에 이른다. 이러한 계훈의 서사가 주되게 펼쳐지는 속에서 홍룡과 덕순이 등장한다.

홍룡이는 한 달에 이십 원 남짓한 돈에 목을 매달고 인쇄소에 다니는 이름 없는 직공이다. 그러나 조합에 들어가서는 중요분자요 열렬한 투사였다. 어머니의 숙을 해운 것이라고는 동맹파업에 앞장을 서다가 서너 번이나 유치장 신세를 진 것 밖에 없었다.

홍룡은 인쇄소에 다니다 조합에 가입해 열렬히 활동하는 선진적 노동자다. 이미 동맹파업으로 유치장 신세를 졌던 적이 있는 홍룡이는 경찰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음악회날 밤에 검속된 홍룡이는 다짜고짜로 유치장에다 집어넣고 덜커덩 잠가 버렸다. 유치장 출입이 한 두 번이 아니니까 새삼스레 겁이 날 것도 없고 음악회에서 ‘야지’(야유, 조롱)를 하다가 잡혀온 것쯤으로는 하루 밤만 재우면 내보내려니 하고 마음이 놓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강연회나 음악회에서 소리를 지르고 야유를 하는 것은 예사로 있는 일인데 하필 나 하나만 노리고 있다가 집어낸 까닭이 알 수 없었다.

계훈의 음악회 날, 홍룡은 기분이 좋지 않다며 앙코르 무대를 거절하는 계훈을 향해 큰 소리로 야유를 한다. 실상 음악회장에 있던 모두가 계훈에게 야유를 보냈으나 경찰은 홍룡을 찍어서 검거한다.

계훈이를 공갈한 범인을 장충단에서 놓쳐버린 지 한 달이 넘도록 진범을 잡기는커녕 아무 단서도 얻지 못했다. 유일한 증거는 협박장 두 통밖에는 없다. (...) 그러다 음악회에 계훈이도 출연을 한다니까 혹시나 그런 장소에서 무슨 끄트머리를 훑아볼까 하고 구석구석 눈치 빠른 부하를 배치해놓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판에 홍룡이가 걸려들었던 것이다. 계훈이와 무슨 까닭이 붙은 사람이 아니면 그다지 극성스럽게 야지를 할 리가 없으리라고 추측한 것이었다.

계훈은 정희와 관련한 일을 주리아에게 폭로하겠다는 익명의 협박편지를 받았다. 계훈은 아버지인 김장관에게 이 일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고, 김장관은 경찰에 협박범을 잡아줄 것을 요청한다. 협박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범인을 홍룡으로 지목하여 구속한 것이었다.

“지금도 김장관댁 행랑에 살지?”

“네!”

홍룡이는 외면을 한 채 가볍게 머리를 끄덕였다.

“인쇄직공동맹에 관계하고 있지?”

“네!”

“소임은? 위원인가?”

“아니요. 그저 동맹원으로 있어요.”

“날마다 출근을 하다시피하고 제일 열심히 일을 본다는데 그 흔한 집행위원 하나 못 얻었어?”

삼정이(정찰)는 한 마디 빈정거리고 나서는

“원체 그런 단체란 홍룡이 같은 명예심 없는 투사가 실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슬그머니 추켜올린다. 홍룡이는 묻는 말에 뿌리만 따서 대답을 하다가 속으로는 “네가 누구를”하고 삼정이를 흘깃 쳐다봤다.

(…)

홍룡이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앉았다. 삼정이는 제가 떠돌고 싶은 대로 떠들게 내버려 두고 조리 있게 묻는 말만 골라서 ‘예스나 ‘노’ 두 가지로만 대답을 할 작정이다. “말이 말 같지 않은가? 왜 대답을 못해. 사람이면 남의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지.”

“난 그 집에 은혜 진 일도 신세를 갚을 일도 없는 걸요.”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훈계를 하는 데는 홍룡이도 비위가 틀려서 군소리하듯 대꾸를 하였다.

“뭐야? 신세진 일이 없으면 네 어미 애비는 누가 먹여 살렸느냐?”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 비부 노릇을 했지요. 남에게는 김장관택 종놈이란 소리를 들으면서 한평생 그 집의 구둑(귀찮고 힘든 남의 뒤치다꺼리)을 치고 간신히 얻어먹었을 뿐인데 신세란 무신 신세예요? 값싸게 부려먹었으니까 그 집에서 우리 부모의 신세를 진 셈이지요.”

홍룡이는 토론을 할 필요는 없다하면서도 “내게는 상전도 아랫사람도 있을 까닭이 없소이다. 내 몸뚱이를 움직여서 밥을 얻어먹는 노동자일 뿐이지요.”

삼정이는 아랫입술을 자근자근 깨물고 앉아 있다가

“듣기 싫다. 너 같은 좌익병자는 보통 인간이 아니다. 주둥아리

만 살았을 뿐이지 네까짓 것들이 무얼 한다고 날뛰느냐?”

삼정이(경찰)는 형사 세 명을 더 불러 계속해서 협박범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홍룡이를 고문한다. 그러나 홍룡이는 의지를 다질 뿐이다.

(홍룡이는) 다리팔을 척 늘어뜨리고 쓰러져있으면서도 만족한 웃음이 아직도 핏기가 돌지 못한 홍룡의 입모습을 새었다.

“사지를 각을 떠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고는 허청대고 코웃음을 쳤다. 홍룡이는 고통을 참는 힘과 누구에게나 굽히지 않는 자신의 의지력을 믿었다. 생사람의 숨이 턱턱 막히고 당장에 맥이 끊어지게 되는데도 끄끄하고 정신을 잃은 그 순간까지 그 입은 무쇠병목과 같이 한 번 다문 채 벌리지를 않았다.

“아니다! 난 모른다!”

한 마디로 끝까지 버티어서 몇 번이나 면소가 되어 나온 어느 선배와, 법정에서 혀를 깨물고 공술을 거절한 어떤 동지의 얼굴을 눈앞에 그리면서 죽을 고비를 간신히 참아 넘겼던 것이다.

“그까짓 일답지 않은 일에 오장까지 쏟아놓을 양이면 정말 큰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꼬?”

“내 육신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내 의지만은, 정당하다고 믿는 신념만은 올가미를 씌울 수도 없고 칼끝도 총알도 건드리지를 못한다!”

그러나 경찰이 협박범을 잡는다는 것은 작은 명분일 뿐이었다.

아래층 취조실은 밝은 날도 음침하였다. 실내에는 지난밤에 본 사람은 그림자조차 감추고 차석되는 사람이 홍룡이를 앞에 앉히고

지난 일은 모르는 듯한 태도로 취조를 개시한다. (...) 사건이 단순히 부호의 아들을 협박하였다는 데 그칠 것 같으면 유치기한이 열흘이나 되니까 잡도리를 해도 좋을 것이나 근래에 어떠한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비밀결사가 조직되었다는 정보를 빈빈히 접한 고등계원들은 오래간만에 일거리를 장만한 듯이 이왕 걸려든 김에 홍룡이같은 인물의 배후를 뒤지면 보다 큰 사건의 단서가 잡힐 것이라고 우두머리들의 혐의를 거듭하여 홍룡이를 닦달한 결과에 따라서 일제히 검거에 착수하려는 계획이다.

경찰은 협박범이라는 죄목으로 홍룡을 잡은 후, 고문을 통해 그가 속한 단체까지 엮어서 검거하려 한다. 그의 직업이 인쇄공이었기 때문에 그가 속한 단체는 인쇄공 조합 중 하나였을 것이다. 소설 속 여러 표현으로 미루어보면 배경이 서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은 1920년대 중반까지 인쇄업종에서 특히 활발한 노동운동이 벌어진 지역이었다. 조직률은 대략 16.7%였는데, 자본주의 발전이 훨씬 빠른 영국에서 1901년에 남성노동자의 10~15%정도, 독일에서는 1913년에 12% 정도로 추산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조직률을 결코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없다.¹¹

더 나아가 서울이라는 배경과 연관해볼 때, 홍룡이가 속해있던 조합은 인쇄직공조합을 떠올리게 한다. 인쇄직공조합은 사상단체인 화요회와 긴밀히 연결된 조직이었다. 화요회는 마르크스의 생일이 화요일인데 착안해 이름을 지은 단체였는데, 코민테른 코르뷰로(고려국)의 지도를 받는 유일한 국내단체이기도 했다. 화요회는 이 단체를 기반 삼아서 서울지역운동에 강력하게 개입했다.

11 김경일,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비평사, 1992.



“인쇄직공의 단결”이라는 제목으로 경성인쇄직공 조합 창립을 보도한 1924년 7월 9일 《조선일보》 기사다. 기사는 “경성 내에 있는 인쇄직공은 3천 명 이상에 달하나 이제껏 완전한 단결관이 없어서” 창립하게 되었으며 이전에 있던 인쇄직공친목회는 조합에 인계될 것이라 보도했다. 인쇄직공친목회는 노동조합의 초기적 형태로 친목과 공제활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였다. 이를 인계하면서 결성된 것이 경성인쇄직공조합이었으므로 친목회는 발전적으로 해체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경성인쇄직공조합은 인쇄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자의 동맹파업을 지도하는 등 계급적 이익을 위한 투쟁을 지도, 후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주체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계열 지식인들과 진보적 노동자들로 지도부가 구성되어있었는데, 노동자의 대표 내지는 노동자 출신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압도적 다수와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김경일, 「1920, 30년대 인쇄출판업에서 노동조합 조직의 발전」, 《경제와사회》 4, 1990을 참고.)

경찰은 홍룡이를 통해 배후조직을 검거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하여간 다른 동지들이 잡혀온 눈치가 없는 것을 보아 명부가 드러나지 않은 것만은 짐작할 수 있었다. 홍룡이를 맡아서 취조하는 형사들도 나중에는 진력이 나서 손에 잡았던 것을 내던지며

“형사질 십 년에 너와 같이 독한 놈은 처음 보았다.”

하고 투덜거리며 내려서기를 몇 번이나 하였다.

(…)

신문기자는 들어서면서 무슨 큰 사건이나 발견한 듯

“강홍룡이가 오늘 넘어가지요? 서류는 벌써 검사국으로 보낸 것까지 알고 왔는데요. 자 이젠 사건의 내용을 발표하셔도 좋지 않습니까?”

넘겨짚는다고 어수룩하게 실정을 토할 주임도 아니지만 “그런 일 없소”하고 강경히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었다. 실상인즉 공무집행방해라는 일도당토않은 죄명을 붙여 29일의 구류기한이 지나도록 취조가 예정돼도 끝이 나지 않으니 열흘 동안 유치로 돌려 먹이고 가진 수단을 다써가며 닭달걀을 해봤건만 검사국으로 넘길만한 물적 증거도 잡지 못했거니와 “모른다”는 말 한마디로 버티고 나가는 피의자의 태도가 너무나 강경하여 이제는 더 손을 댈 여지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심증(心證)이 나쁜 것만은 움직일 수 없고 그대로 석방하기에는 경찰의 체면과 주임개인의 위신상 허락할 수 없다. 그러나 더 오래 끼고 있을 수도 없어서

“피의자는 평소부터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면서 자본주의사회의 ××을 몽상하며 동지자를 규합하여 잠행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혐의가 농후함으로 일층 엄밀한 취조를 희망한다”라는 의미의 의견서를 부쳐서 오늘 오후에 검사국으로 압송하기로 된 것이었다. 이제 와서는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던가 부호에게 협박장을 보냈다던가 하는 사소한 일은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다.

《조선일보》 1931.8.16.~12.29.

이후 홍룡은 감옥에 들어가고, 그곳에서도 좌익 동지들을 만나 교류한다. 홍룡이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은 덕분에 함께 활동하는 덕순 등의 동지들은 검속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홍룡과 같은 선진노동자 계층과 지식인이 1920년대 초중반의 노동운동을 주도했다. 주도층의 구성상 특징으로 인해 노동단체는 단위노조가 발전하여 지역연맹이 되고, 지역연맹이 모여 전국적 결합체가 출

현하는 방식으로 건설되지 않았다. 먼저 상층의 노동단체를 건설한 뒤에 기층의 단위노조를 직접 설립하거나, 자생적으로 설립된 단위노조와 연계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둘을 연계하는 지역 연맹체가 건설되는 식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런 하향식 구조가 즉각적으로 활동가들이 노동자 대중과 동떨어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동단체에 속한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고 노동대중의 의지와 활동을 대변했다. 사회주의 지식인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대중적으로 확산해있었고,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운동세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히려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매개하는 지역 연맹체가 없었음에도 전국적 결합체와 단위 노조의 연계가 큰 어려움 없이 가능했을 것이다.

조선공산당의 건설과 붕괴

조선공산당은 조선 사회의 조건 속에서 건설되었다. 조선공산당의 창당은 1920년대 중반까지 국내와 해외를 망라한 사회주의 운동의 일대 결실이었다.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한 박헌영은 조선공산당 창당의 주역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1922년, 국제공청에 고려공청 중앙 총국을 조선 국내로 이전할 것을 제안한다. 조선 내에서 직접 사회주의를 전파하고 여러 단체에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었다. 그러나 박헌영과 일행은 귀국과정에서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22개월의 수감생활 뒤, 1924년 출옥하자마자 화유회에 가입하고 조선공산당 건설을 꾀도에 올린다.

1924년 말부터 화요파는 국내 여러 공산주의 그룹과 연합을 시도하고 1925년 4월 20일,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다. 한편 1925년 4월 15일~17일까지는 전조선기자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이 두 대회는 경찰의 이목을 분산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이 틈을 타 대회 며칠 전인 4월 17일, 중국음식점 아서원에서 조선공산당이 결성되었다. 여러 진술을 종합할 때, 창당대회에는 박헌영, 조봉암, 김재봉 등을 포함해 19명이 참석했다. 김재봉이 조선공산당의 첫 책임비서를 맡았다. 그리고 하루 뒤인 4월 18일, 서울 박헌영의 집에서는 고려공산청년회 창립대표회가 비밀리에 개최되었다. 고려공청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조선공산당의 지도 아래 성립하는 최초의 공청대회로 간주한다는 의미에서 창립이라 이름 붙였다. 4월 20일,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는 시작 몇 시간 전 경찰의 불허로 실시되지 못한다. 이에 반발한 참가자 300여 명이 탑골공원에서 시위를 벌이고, 시위는 밤까지 이어져 200여 명이 붉은 기를 들고 시위를 벌인다. 이 시위에 수천의 군중이 모여 함께 한다. 이것이 이른바 ‘적기사건’인데, 이는 조선공산당 창당 이후 당의 지도 아래 운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도였다.

한편 조선공산당은 창당대회를 쫓기듯 치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강령을 만들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상해에서 발행된 조선공산당 기관지 『불꽃』에 수록된 『조선공산당 선언』이 강령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¹² 이 글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붕괴 가능성, 공산주의자들이 투쟁

12 이런 견해는 이준식, 『조선공산당 성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전명혁,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운동 연구』, 역사비평사, 2003에서 주장되었다. 그러나 임경석은 『조선공산당 선언』을 강령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그 문건은 그저 창당 후 1년 3개월이 지

방침을 세워 민족해방운동을 위해 민족혁명의 기초가 되는 것, 민족혁명 유일전선을 구축하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공산당은 이런 노선에 입각해 활동을 벌였다. 고려공청도 여러 활동을 벌였는데, 청년 조직을 결성해 청년층에 대한 사상교육을 수행했고, 코민테른에게 받은 자금으로 청년활동가의 모스크바 유학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4차례에 걸친 조선공산당 검거사건으로 조선공산당은 궤멸적 타격을 입는다. 당과 고려공청의 간부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조직을 지키려 애썼지만, 실패한다. 탄압 과정에서 일본에 체포된 당원과 공청원은 수백 명에 이르고, 심문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은 당을 재건하여 4차 공산당에 이르지만 결국 1928년 자진해산하고 만다. (1925~1928년 시기 4차례에 걸쳐 이뤄진 조선공산당 재건을 종파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각각이 마치 별개의 공산당인 것처럼 서술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이 해산한 이후에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은 지하에서 면면히 이어졌다. 사회주의 세력의 노동자운동은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상단체 위주의 운동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현장 속으로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이런 문제의식이 구체화된 것

난 시점을 보여줄 뿐 창당 당시의 정치노선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강령이 채택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임경석은 당시 참가한 공산주의 그룹 간의 견해 차이라고 주장한다. 조선공산당은 화요파를 주축으로 상해파, 북풍파가 참가해 결성되었다. 화요파는 2단계 연속혁명론에 반대하면서 “노력군중이 요구하는 혁명을 직접 해야 될 것”을 주장했다. 북풍파는 민족해방 및 민주주의 혁명을 당면과업으로 설정했다. 화요파를 ‘기본적 좌경’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상해파는 다른 어떤 공산그룹보다도 먼저 민족혁명을 당면과업으로 설정했고 민족통일전선 정책에 적극적이었다. 이와 같은 조선혁명의 성격과 목표에 관한 견해차가 강령 채택을 불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임경석, 『조선공산당 창립대회 연구』, 《대동문화연구》 81, 2013을 참고하였다.



《동아일보》 1927년 4월 3일자 신문. 제목은 “기미운동이후 조선 조유의 비밀결사사건”이다. 기미운동은 기미년에 일어났던 3·1운동을 말한다. 바로 아래에는 “조선공산당·고려공산청년회내용·지난 2일 일부해금”이라고 적혀있다. 조선공산당 검거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1925년 말이었는데, 1927년까지 보도통제로 보도되지 않다가 이 시기에 처음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송봉우(맨 윗줄 오른쪽에서 첫 번째), 박현영(맨 윗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조봉암(맨 윗줄 왼쪽에서 세 번째) 등 조선공산당 창당대회에도 참석했던 지도부 활동가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사진 출처: 《중앙일보》)

이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이다. 그리고 혁명적 노동조합의 핵심적 과제가 조선공산당 재건, 노동조합의 설립이었다.

다음 호에서는 방향 전환 이후 현장으로 들어간 활동가(지식인)들의 모습과, 그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 말기에 이르러 거의 모든 활동이 막혀버린 어두운 시대의 사회주의 활동가의 모습을 돌아본다. ●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풀지 못한 문제들: 사랑, 여성, 가족¹

메리 게이브리얼, 『사랑과 자본』 서평

김유미 (사회진보연대 페미니즘팀장)

메리 게이브리얼의 『사랑과 자본』은 저도 감명 깊게 읽은 책입니다. 마르크스 가족의 삶을 다루는 평전이라는 주제만으로 충분히 관심을 끌 만한데, 저자가 너무나 생생하게 그들의 삶을 복원해내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장을 넘기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에는 마르크스 가족과의 내적 친밀감이 하늘을 찌를 듯해 누구와도 이들에 관한 수다를 떨고 싶었습니다. 주변에 열심히 추천했는데 책의 두께 때문인지 실제로 도전한 사람은 거의 없더군요. 그래서 지난 호에 실린 이 해인 동지의 서평을 반갑게 읽어 내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의 제목에 관해 곰곰이 생각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평에서 '사랑과 자본'이라는 제목, 그중에서도 사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부분이 특히 좋았습니다. 서평은 책이 다

¹ 이 글은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1 겨울호에 실린 서평 '마르크스 가족의 혁명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남은 질문'에 답장 형식으로 작성한 또 하나의 서평입니다.

루는 사랑을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예니 부부의 사랑, 아버지 마르크스에 대한 세 딸의 사랑, 그리고 이 가족 모두가 공유하고 있던 혁명에 대한 사랑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서평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그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엔겔스와 마르크스, 동지로서의 사랑

첫 번째 주제는 엔겔스와 마르크스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마르크스 가족의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엔겔스와 마르크스 사이의 '동지애'라고 생각합니다. 유복했던 엔겔스가, 자본에 대해 글이나 쓸 줄 알았지 돈을 벌 줄은 몰랐던 마르크스에게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둘의 사연일 텐데요. 이 책을 읽으며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둘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1844년 8월 스물세 살의 엔겔스와 스물여섯 살의 마르크스는 처음 만나자마자 열흘 밤낮 동안 열띤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두 사람은 이론적 영역에서 완벽히 같은 의견을 확인합니다. 이후 둘의 교제와 공동 작업은 평생에 걸쳐 지속됐으나 주로 서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1849년 마르크스가 당대 정치적 망명자들의 집결지인 런던에 자리 잡은 뒤에도 엔겔스는 사업(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방직공장) 때문에 맨체스터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870년 엔겔스가 사업을 정리하고 런던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런던과 맨체스터 사이에 매일같이(수사적 표현이 아

니라 정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편지는 이론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뿐 아니라 가족 문제에 관한 사적인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했습니다. 마르크스뿐 아니라 예니, 마르크스의 딸들이 엥겔스와 주고받은 허물없는 편지를 보면 그들이 서로 정말로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에게 엥겔스는 가족의 일원이자, 어쩌면 가족 그 이상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르크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엥겔스였다는 점을 이러한 ‘가족적’ 관계의 한 요인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엥겔스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마르크스와 그의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거액의 생활비를 보내줍니다. 세간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들 엥겔스의 행동에는 혁명에 관한 공산주의적 이념과 마르크스의 천재성에 대한 확신이 배경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간절하고 의미 있는 일에 가진 돈을 아낌없이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가 십이 년간이나 엥겔스에게 돈을 요청한 것을 두고 냉소적인 사람들은 거지 근성이라고 비웃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엥겔스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자신이 번 돈에 대해 공산주의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즉 그 돈은 자신의 것이듯, 마르크스의 것도 될 수 있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당원’ 누구의 것도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엥겔스의 입장에서 마르크스는 당의 목표 성취를 위해 경제학 책을 쓰고 있으므로 그 돈에 대한 자격이 있었다.”

사소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재미있던 대목은 1867년 『자본』 1권이 출간되었을 때 엥겔스가 유럽과 미국의 신문들에 익명으로 “최소한 일곱 편의 서평”을 기고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동상. 구소련 시기에 세워졌다.

관점과 태도, 말투와 인격을 가장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엥겔스가 단지 마르크스의 물질적 후원자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하는 열성적 지지자이자 마르크스 가족과의 '원탐'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은 친구의 책이 지나치게 난해하다는 엥겔스의 걱정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르크스의 가족과 엥겔스는 이 책의 출간을 오래도록 기다려 왔습니다. 그들은 『자본』이 부르주아의 머리에 던져진 미사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니는 이 책의 성공으로 경제적 곤궁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역시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본』 1권은 당시에 별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지식인들에게조차 너무 어렵고 두꺼웠기 때문입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 사후에도 마르크스의 남은 가족을 헌신적으로 돌보았으며 『자본』 2, 3권을 비롯해 마르크스가 완성하지 못한 원고들

을 정리하고 출판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남긴 글을 정리하는 작업을 엥겔스는 '사랑의 노동'이라 불렀습니다. 오랜 동지와 다시 한 번 공동 작업을 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사회에서 사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성애적인 사랑, 또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간의 사랑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뜻을 지니고 그것을 향해 헌신하는 관계에서 서로에게 느끼는 신뢰와 애정, 상호의존, 기쁨 등에는 통속적인 사랑의 의미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관계를 보며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라는 신영복 씨의 문장이 떠오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1844년의 운명적인 만남 이래 두 사람은 진심을 다해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종종 엥겔스를 ‘자신의 또 다른 자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의 뜻을 나만큼 잘 이해하고, 일생을 다 바쳐 그것을 함께할 수 있는 동지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삶은 성공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극으로 끝난 세 딸의 사랑

두 번째 주제는 비극적인 실패로 끝난 마르크스의 딸들의 사랑입니다. 마르크스의 세 딸 예니헨, 라우라, 엘레이노르는 각각 혁명운동과 관련된 남성들과 사랑에 빠져 결혼(엘레이노르의 경우 법적 결혼은 아니고 사실혼)을 하지만 결국 그 관계에서 크나큰 절망을 겪습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자신이 마르크스의 개인적 삶에 관심이 생긴 계기가 “성년까지

살아남은 카를 마르크스의 세 딸 중 둘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던 순간이라고 회상합니다. 그리하여 이 책은 마르크스의 일대기가 아니라 그의 딸들을 포함한 가족의 일대기로 쓰였습니다. 책의 중반 이후로는 딸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며, 셋 중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난 라우라의 장례식 장면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만큼 마르크스의 딸들의 인생에 대한 이해는 이 책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딸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마르크스의 아내, 예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가 자신이 꾸린 가족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의심하긴 어렵습니다. 그는 애정과 관심을 표현할 줄 아는 친근한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집 안에서 혁명운동이나 예술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것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에게 곤궁한 삶을 안겨주었으며, 집안일을 돌보아주던 헬레나 데무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프레디 데무트가 상징하듯 예니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일은 1850년 임신한 예니가 네덜란드의 친척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러 집을 떠난 사이에 벌어집니다.)

이 책의 독자들은 예니가 마르크스라는 개인뿐 아니라 혁명에 관한 그의 이념을 사랑한 동지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마르크스가 쓰는 글의 첫 독자이자 운동의 조언자 역할에 열정적이었으며, 남편이 글쓰기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집안의 복잡한 일거리들을 조율하고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집으로 몰려든 다양한 국적의 혁명가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많은 혁명가가 예니의 아름다움과 친절함, 현명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회고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는 여성인 예니가 수행하는 역할이

마르크스의 또 다른 동지인 엥겔스의 역할과는 다른 종류의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상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있던 예니는 자신의 ‘여성적’ 역할이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니에게 마르크스에 대한 헌신은 혁명에 대한 헌신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 속에서 예니는 가난과 질병, 몇몇 아이들의 죽음이라는 개인적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그것마저도 혁명운동의 일부라 여기며 감내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872년의 예니는 리프크네히트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 모든 투쟁에서 우리 여성들은 더욱 힘든 일을 견뎌야 하는 것 같다”며, “남자들은 바깥세상과의 투쟁에서 힘을 끌어내고, 대규모의 적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더욱 힘을 냅니다. 우리는 집 안에 앉아 양말을 집지요. 그런 일은 인생에 맞설 용기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갉아먹는 걱정과 일상의 작은 불행을 없애주지 못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예니가 겪었던 문제는 딸들의 삶에서도 이어집니다.

마르크스의 세 딸 중 가장 먼저 로맨스에 뛰어든 사람은 둘째 라우라입니다. 1868년 스물세 살의 라우라는 폴 라파르그라는 쿠바 태생 프랑스인과 결혼합니다. 그는 파리의 학생운동을 통해 인터내셔널에 참여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결혼을 승낙하기 전에 라파르그의 경제 상태를 명확히 알아야겠다고 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자네는 내가 혁명운동을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알 걸세. 나는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그 반대지. 만약 삶을 다시 살게 된다면 하더라도 나는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걸세. 그렇지만 결혼만은 하지 않을 거야. 내 능력만 닿는다면, 내 딸들만은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좌초했던 풍랑에서 구해주고 싶네.”

마르크스와 예니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 자란 라파르그가 마음에 들었고 그가 안정적 직업을 가지리라는 기대로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라우라의 결혼은 마르크스가 언급한 ‘풍랑’ 속으로 돌진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우라와 함께 프랑스로 돌아간 라파르그가 의학 공부를 포기하고 직업 혁명가로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현모양처가 되기를 원했던 라우라는 남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혁명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프랑스 여자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자유로운 사랑을 옹호하는 프랑스 문화에 따라 프랑스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이런 문화가 가족에 대한 무책임함으로 이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라우라가 시부모와의 갈등, 임신과 출산, 그 과정에서 얻은 질병들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낼 때 라파르그는 그녀 곁에 없었습니다.

라우라는 결혼 후 4년 사이에 세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들은 모두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째 아이의 임신과 출산, 사망은 1871년 파리 코뮌과 시기가 겹쳤습니다. 라우라의 남편은 코뮌이 한창 일 때는 혁명운동에 헌신하느라 집을 비웠고 코뮌이 진압당한 후에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생 다시는 임신을 하지 않았으며, 이 시기에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한 슬픔, 인생에 대한 회한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경험은 라우라가 이전처럼 혁명운동의 대의에 몰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메리 게이브리엘은 “마르크스가 의 여인들 중 라우라가 유일하게 아버지가 약속한 미래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품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

해 가족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컸다.”고 쓰고 있습니다.

첫째 예니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예니헨은 가난한 가정의 장녀답게 조용하고 어른스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책에 따르면 “열여섯 살인 그녀는 성실하고 총명했으며 로맨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니헨은 둘째 라우라가 결혼한 후 집에서 독립해 가정교사 생활과 혁명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아일랜드 수감자를 방어하는 그녀의 기사는 상당한 반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독립생활은 3년여 만에 짧게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혁명운동(특히 1871년 파리 코뮌)과의 연관성을 들켜 가정교사 자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다시 부모님의 집에 들어온 예니헨은 마르크스와 교류하던 청년인 샤를 룡게를 만나 그의 구애를 받아들입니다. 샤를 룡게는 파리 코뮌 이후 런던으로 망명한 프랑스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예니헨은 스물여덟 살이던 1872년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라우라와 달리 예니헨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영국에 살았기 때문에 예(마르크스의 집에 얹혀살 때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룡게가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룡게의 어머니가 보내주는 약간의 돈과 예니헨이 가정교사와 강사 일로 벌어오는 돈으로 근근이 생활했습니다.

1880년 망명자들에 대한 사면이 단행되자 룡게는 파리로 돌아갑니다. 공화국 프랑스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니헨은 이 결정에 크게 절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곧 예니헨도 세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있는 파리로 향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의 삶은 열악했습니다. 좁고 엉망인 집 안에서 아이들은 돌아가면서 아팠지만, 남편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



왼쪽 사진은 1858년 예니헨(좌)과 라우라(우)의 사진. 오른쪽 사진은 1870~71년경 열다섯 살 즈음으로 추정되는 투시의 사진

설상가상으로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셋째 엘레아노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니헨은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삶에 지쳤다”, “불쌍한 아이들만 아니었다면 이런 삶을 벌써 때려치웠을 것이다”라며 좌절감을 내비칩니다. 1882년 예니헨은 자신이 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합니다. 9월에 막내딸이 태어났고 예니헨은 아기의 이름을 예니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예니헨의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어 그녀는 다음 해 1월 사망합니다.

(1881년 예니의 죽음 이후 마르크스는 육체적·정신적인 건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 들려온 딸의 사망 소식은 그의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예니헨의 사망 약 두 달 뒤인 3월 14일에 마르크스는 세상을 떠납니다.)

마르크스의 막내딸 엘레아노르는 본명보다 ‘투시’라는 별명으로 많

이 불렸습니다. 별명은 프랑스어의 ‘tousser’(기침하다)에서 온 것으로 그녀가 아기이던 시절 잔기침을 계속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녀를 투시라고 지칭하겠습니다.

투시의 인생은 언니들보다 많이 알려진 편입니다. 국내에도 『엘리노어 마르크스』라는 제목으로 스즈키 주시치가 쓴 평전이 번역되어 있으며, 2020년에는 그녀를 주제로 『미스 마르크스』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도 2009년 기관지 《사회운동》에서 ‘혁명운동과 여성’ 기획연재 첫 번째 기사로 그녀를 다루었습니다. 그만큼 투시는 혁명과 예술, 사랑을 추구하며 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10대의 투시는 아일랜드 해방운동에 폭 빠져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를 사랑했고 연극을 하고 싶다는 열망도 강했습니다. 열일곱 살에는 서른 네 살의 프랑스 사회주의자 리사가레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스와 예니는 이 교제에 반대했고 둘의 연애는 9년간 지속되다 1882년에 끝이 납니다.) 성인이 된 그녀는 영국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으며, 런던 빈민가의 노동자와 유대인 이민자의 현실에 관심을 뒀습니다. 1889년 부두노동자 파업이 벌어졌을 때는 열정적인 연설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투시는 언니들과 달리 평생 아이를 갖지 않았고 독립적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갔습니다. 첫째 예니헨은 “적어도 우리들 중 한 명은 부엌데기로 인생을 보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기쁘구나”라며 투시의 성취를 응원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투시가 에드워드 에이블링이라는 전형적인 ‘나쁜 남자’에게 빠져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이블링은 마르크스를 우상으로 여기며 런던에서 정치 활동과 강의,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남성이었습니다. 1883년 투시는 그와 동거

를 시작합니다. 에이블링은 아내의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며 거짓말, 사치, 여성편력으로 평판이 나빴지만, 그것은 투시의 사랑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투시는 ‘결함 많은 성격’으로부터 그를 구하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투시와 에이블링의 관계가 10년 넘게 지속되는 동안 에이블링 때문에 많은 친구와 동료가 투시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급기야 1897년에 에이블링은 투시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스물두 살의 여배우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리고 투시와 여배우 사이를 오가며 생활합니다. (2년 전에 그의 원래 아내가 사망해 에이블링은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흐른 어느 아침, 투시는 동료 사회주의자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은 뒤 독약을 주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편지는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도 투시에게 에이블링의 비밀 결혼 소식을 알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투시는 에이블링과의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혁명운동에서도 좌절을 겪고 지쳐있었습니다. 메리 게이브리얼은 투시의 죽음을 “격류 속에서 익사한 것과 같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투시 같이 주체적이고 능력 있는 여성 활동가가 왜 에이블링 같은 남성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저는 그녀가 ‘독립적 개인으로서의 삶’과 ‘여성으로서의 역할·육망’을 조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시가 태어난 1855년은 마르크스와 예니의 여덟 살 난 아들 에드가 장결핵으로 사망한 해입니다. 에드가를 대신하듯 투시는 집에서 아들 같은 역할을 하며 대범하고 활달한 성격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린

투시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조건을 무시 또는 극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어머니보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존경심을 훨씬 크게 느꼈다는 사실은 상징적입니다.

그녀는 종종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에서 노부모를 봉양하는 일은 막내딸의 의무였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투시는 결혼하지 않은 막내딸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그런 역할이 기대되었습니다. 노년의 예니와 마르크스가 아플 때 투시는 가족을 돌보는 일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다며 강한 거부감을 표합니다. 마르크스의 건강 회복을 위한 여행에 억지로 동행하게 된 스물일곱 살의 투시는 심각한 거식증과 불면증 증세에 시달리다 예니헨의 도움으로 그 역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부모의 마지막 순간에 가족을 돌보기보다 자기를 앞세웠다는 죄책감을 떠안고 오래도록 괴로워했습니다.

투시와 에이블링의 관계가 시작된 것은 예니와 예니헨, 마르크스가 연달아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가장 의지하던 사람들을 잃고 사랑을 갈구하던 투시는 에이블링의 강렬하고 지적인 에너지에 매료되었습니다. 투시는 에이블링을 만나고서야 자신의 여성성(성적 욕망과 이끌림)을 자각했다고 회고합니다. 하지만 에이블링을 향한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와 같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은 투시가 관계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애썼다는 점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투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혐오를 내비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올리버 슈라이너에게 “나에겐 (...)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라곤 거의 없어. 네가 날 돌보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들 중 하나야”라고 말했으며, 다른 친구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가슴 깊이 혐오하는 인간인 바로 나 자신”

1886년 독일사민당 후원 기금 마련을 위해 미국을 돌던 중 뉴욕에서 찍은 투시의 사진. 왼쪽은 독일사민당을 창당한 빌헬름 리프크네히트, 오른쪽은 투시의 연인 에드워드 에이블링이다.



이라 고백했습니다.

에이블링과의 관계에서 실망을 반복하던 1880년대 중후반 투시는 런던의 친구들과 함께 헨릭 입센의 연극 〈인형의 집〉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작품의 의미에 대해 토론했다고 합니다. 투시의 제안으로 투시가 노라, 에이블링이 남편 역을 맡아 『인형의 집』 낭독회를 가졌다는 것, 투시가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소설 『보바리 부인』을 읽고는 그것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사실은 인상적입니다. 두 작품은 자신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인간적 존중이라기보다 ‘인형’에 대한 사랑과 같다는 여성의 자각, 낭만적 사랑과 결혼 이후에 여성이 겪는 공허함 등을 다룹니다.

19세기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역할은 가족 또는 남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결혼과 임신·출산으로부터 거리를 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투시는 이런 역할을 거부하고 혁명가, 예술가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일이지만 투시에게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삶의 다른 모든 면에서처럼 에이블링에 대한 사랑에도 치열했습니다. 에이블링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더 큰 사랑으로 그를 이해하고 포용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형의 집』에서 노라의 남편이 그랬듯이 에이블링은 여성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남성이었습니다. 절망은 오롯이 투시의 몫으로 남습니다.

메리 게이브리엘은 마르크스의 세 딸의 사랑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르크스의 딸들은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났다. 부모는 서로를 - 거의 광적으로 - 사랑했다. 그리고 카를에 대한 예니의 헌신은 고귀한 자기희생의 전범이었다. 딸들은 각자의 결혼에서 그런 관계를 모델로 삼았지만 깊은 사랑도, 서로 고통을 나누는 것도 얻지 못했다. 예니헨, 라우라, 투시 세 사람 모두 혁명의 깃발을 흔드는 남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지만, 남자들은 붉은 혜성처럼 궤도를 따라 멀리 사라져버렸고, 그들은 뒤에 남겨진 채 혼자 인생과 씨름해야 했다.”

예니헨, 라우라, 투시는 모두 마르크스와 예니의 관계라는 모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마르크스의 가족 안에는 강렬한 사랑(혁명에 대한 사랑, 마르크스와 예니의 사랑, 마르크스에 대한 딸들의 사랑)이 존재했습니다. 사랑은 경제적 어려움도 견딜만한 것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딸들이 자기 인생의 실패에서 빠져나오는 데 도움보다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딸들이 선택한 남성들이 마르

크스보다 훨씬 혁명과 사랑에 서투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녀들은 예니가 그랬던 것처럼, 남편의 모든 결점을 견디며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를 몰랐습니다.

마르크스 가족의 사랑은 그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19세기 가족 형태의 전형적 틀을 넘어서지 못했으며, 그것은 딸들의 인생에 치명적이었습니다. 부르주아 계급의 형성과 동시에 발전한 빅토리아적 가족형태는 낭만적 사랑과 모성의 가치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남성 가장의 욕망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의 주체적인 인생을 희생하면서 굴러갑니다. 마르크스는 딸들에게 엄청난 지적 세례와 혁명에 대한 열정을 물려주었으면서도 이러한 가족의 모습, 여성의 역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크스의 딸들이 젊은 시절 지니고 있던 총명함과 혁명운동에의 열의가 결혼 생활을 겪으며 속절없이 사그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마르크스와 예니가 당대 자본주의를 변혁이 가능한 체제로 사고했던 것처럼 가족 제도 역시 변화 가능한 구조로 통찰했다면, 그래서 딸들에게 남편 없이도 자신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떤 사랑의 경우에는 단호한 헤어짐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부질없는 가정을 해보게 됩니다.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

세 번째 주제는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입니다. 페미니스트로서 우리는 마르크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마르크스는 프레디 데무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평생토록 정

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일을 돌보기보다 어지럽히는 가족 구성원이었고, 그렇다고 가장으로서 경제적 역할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사랑했지만 그들이 ‘남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마르크스는 딸들을 문학, 정치, 역사, 과학 등의 모든 세계로 인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딸들이 집 안의 자기 옆자리에 앉전히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바랐다. 남편감이 와서 별반 다를 것도 없는 또 다른 그런 세상으로 그녀들을 데려가기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놀랍게도 그는 딸들이 스스로 무엇인가 이룩해보고 싶다는 갈망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마르크스도 역사적으로 돌아볼 가치가 없는 ‘한심한 가부장’이었다고 치부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런 식으로 오늘의 잣대를 통해 역사 속의 인물들을 재단하고 비난하는 일은 자기만족 외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영웅을 추앙하기 위해 그의 개인적 치부를 숨기거나(소련에서 마르크스의 혼외자에 관한 언급이 금지시되었듯이)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 역시 경계해야 하겠지만요.

우리는 마르크스 역시 그가 살던 시대의 한계 속에 있던 인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르크스라는 개인의 이러한 한계는 마르크스 이론의 한계와도 연결됩니다. 마르크스 자신의 페미니즘적 결함이, 마르크스주의라는 사상이 그 자체로 여성의 권리라는 문제를 모두 설명하고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 우리는 다시 엥겔스를 소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엥겔스의 성취와 한계는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을 다루기 위한 중요한 관

리지 번스의 사진. (메리 번스의 사진은 남아있지 않다.) 엥겔스는 리지 번스가 죽은 뒤 다음과 같이 썼다. “내 아내는 아일랜드 프롤레타리아트의 진정한 자녀였다. 자신이 태어나 속한 계급에 대한 그녀의 열정적인 헌신은, 잘 교육받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블루스타킹(여성 지식인)의 그 모든 고상함보다 나에게 더 값진 것이었으며, 내가 힘들 때 더 큰 도움이 되었다.”



문입니다.

우선 엥겔스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아일랜드 노동자인 메리 번스와, 메리가 1863년에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녀의 동생인 리지 번스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계급적 차이가 극명했으므로 엥겔스의 가족과 친척들은 이들을 정식 아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엥겔스가 결혼하지 않은 것은 부모의 반대 때문이라기보다 그가 결혼 제도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르주아적 결혼이 갖는 위선적인 측면을 간파했으며, 두 사람이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는 한 교회나 국가의 승인은 무용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1878년 리지 번스가 임종 직전에 결혼을 원하자 엥겔스는 목사와 증인을 대동하여 리지의 침대맡에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

드에서는 결혼식 없이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은 연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죽음을 목전에 둔 그녀는 마음이 약해져 그 이야기를 믿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메리와 리지는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녀들의 생각이나 일생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엥겔스와 마르크스의 가족(특히 투시)에게 하층 노동자계급의 현실과 아일랜드 해방운동의 정신을 알려주는 데에 작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엥겔스의 결혼 생활에 관해서는 1989년 국내에 번역·출간된 다마이 시게루의 『엥겔스의 아내』를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엥겔스는 결혼 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지니고 그러한 입장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여성 억압에 대한 연구에도 기여했습니다. 1884년 출간한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은 마르크스주의에서 여성 억압에 대한 이론적 작업의 출발점입니다. 이 책에서 엥겔스는 19세기의 인류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가족 형태의 역사를 분석합니다. 그에 따르면 원시 공산주의 사회는 생산의 중심이 가족에 있었고 모권 사회로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는데, 가족 밖에서의 생산이 중요해지면서 성별 분업을 통해 여성의 지위가 전복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엥겔스의 분석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여성 억압의 소멸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철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엥겔스는 가족 제도의 역사적 변화를 분석했으며, 부르주아적 가족 제도는 사랑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소유를 전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는 여성 억압을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관심사인 사회적 생산과 연

결하고, 여성 해방이 노동자계급의 해방과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자가 여성 문제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엥겔스의 분석은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에서 여성 억압을 ‘경제적 조건’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성억압에 대한 엥겔스의 정식화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는 다양한 편향이 발생합니다. 여성 문제의 해결을 ‘혁명 이후’의 과제로 미뤄둔다든지, 페미니즘 운동의 여러 의제를 ‘부르주아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노동자계급 여성의 투쟁만을 강조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영국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실라 로보섬은 「마르크스 가족의 가려진 사생활」이라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번역본이 권현정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성』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데 이 글은 마르크스의 딸들의 인생에 대해 앞서 제가 서술한 것보다 풍부한 해석을 덧붙이고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글에서 로보섬은 “만약 엥겔스가 자신이 알던 중간계급 여성들의 사적인 경험을 이해하는 데 좀 더 흥미가 있었다라면, 마르크스 딸들의 삶이 그의 이론에 결점이 있다는 경고로 기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엘리너(인용자 주: 엘레아노르)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지만 성적으로는 여전히 에드워드에게 의존적이었다. 그리고 제니(인용자 주: 예니헨)의 세 아이들이 한밤에 깨서 그녀를 미칠 지경으로 만들었던 수면 부족을 사회화하기는 곤란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마르크스의 딸들의 삶이야말로 경제적 조건으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 문제의 실존을 고통스럽게 증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르크스는 당대의 수많은 지적 성취를 탐독하고 자신의 이론에 통합하려 했지만 가족이나 여성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에도 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쟁

과 실험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되새긴다면 이 분야에 대한 마르크스의 맹목은 의아한 일입니다. 마르크스에 비하면 엥겔스는 자신의 삶에서도, 이론적 작업에서도 결혼, 가족, 여성을 둘러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여성 억압의 연결은 엥겔스의 기여지만, 그 역시 경제적 조건으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 문제를 인식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사랑과 자본』은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운동 궤적을, 그 길에 함께했던 여성들의 존재와 ‘함께’ 보여줍니다. 혁명의 역사 속에 그 존재와 역할이 지워지기 일쑤였던 여성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더욱 특별한 의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미처 풀지 못한, 즉 사랑, 여성, 가족이라는 문제를 그 가족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르크스 가족의 삶은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운동이 왜 여성의 해방과 결합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마르크스의 딸들과 우리는 닮아 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마르크스의 세 딸이 겪은 실패는 지나간 시대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9세기의 높은 유아사망률과 갖가지 질병, 빅토리아 시대가 여성에게 부과한 의무와 편견으로부터 우리는 상당 부분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세 사람이 겪었던 문제가 오늘날 여성 활동가가 겪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첫째, 여성의 결혼, 특히 임신출산이 여성 활동가 자신의 성취와 양

립 가능하냐는 문제입니다. 21세기의 여성에게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안전하고 간편한 피임법의 발명으로 임신에 대한 통제는 훨씬 쉬워졌으며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스템도 일정 정도는 갖춰져 있습니다. 예니헨처럼 원치 않은 임신을 반복하며 몸과 마음이 망가지거나 라우라처럼 종일 집에 홀로 남아 아픈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부터는 여성의 현실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활동가는 활동가로서의 삶과 육아 중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커리어와 육아 둘 다 붙잡기를 원한다면 방법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방법이란 많은 경우 본인을 ‘갈아 넣는’ 일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 아닌 선택의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구체적인 고민을 맞닥뜨립니다. 물론 자기 일을 사랑하는 수많은 전문직 여성도 이러한 선택지들을 놓고 저울질을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여성의 직업 활동에는 혁명운동과는 다른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둘째, 성적 자유가 저절로 여성의 권력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에게 위협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투시는 가족과 친구에게 에이블링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랑이 있다면 법적 결혼은 중요치 않다고 강변했습니다. 투시의 생각은 그녀가 믿고 따랐던 앵겔스의 신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사랑하고 존중했던 앵겔스와 달리, 현실에서 많은 남성이 이러한 의무 없는 관계를 악용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성에게는 과거에 비해 자유로운 연애와 성적 경험이 허용되는 편이지만, 여성은 언제나라도 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성적 폭력, 물리적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을 염두에 두곤 합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발생하는 관계를

제외하더라도 이성애 관계에서 많은 여성이 기대와 실망, 집착과 체념을 오가며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지금의 사회에서 이성애 연애란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는 관계맺음을 할 줄 모르는 남성, 내 욕망보다 상대방의 욕망을 먼저 배려하는 여성의 결합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비대칭성은 남성이 나이·직급·경제력에서 더 큰 권력을 지니고 있거나 유부남인 연애에서 극대화되곤 합니다. 투시가 그랬던 것처럼 여성 활동가는 결혼 제도나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랑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사람을 만나 결혼 제도에 안착하는’ 일반적인 선택을 하는 여성보다 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기도 합니다.

셋째, 여성 활동가가 자신을 저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선 문제들보다 미묘하지만 못지않게 강력한 것입니다. 예니헨과 라우라에게도 정치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었지만, 그녀들은 특유의 ‘나서지 않는’ 성격으로 남편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반면 투시는 남들이 보기에 충분히 유능하고 매력적인 활동가였음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혐오에 시달렸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비관하여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인생에서의 성취를 타인(연애관계 또는 자녀)에게서 찾으려는 일은 오늘날에도 드물지 않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에게 적합한 사회적 표상, 즉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은 여성도 지적 능력, 직업적 성취, 성적 욕망, 개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겸손, 자제, 친절, 아름다움 등의 ‘여성적’인 태도를 요구받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자아 정체성을 다루는 데 어려

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사회적 조건에 있다고 해결을 사회 변혁 이후로 미뤄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 활동가가 매 순간 직면해야 하는 현실이고, 활동가로서의 성장 또는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닌 가능성과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발전시키는 것은 여전히 여성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성 활동가 자신의 노력과 여성간의 연대가 둘 다 필요할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딸들과 우리의 모습은 분명 닮았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쩔 수 없는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바꿔야 할 현실로 이해하고, 공동의 운동 과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풀지 못했던 사랑, 여성, 가족이라는 문제를 운동의 과제로 삼는 일이 쉬울 리는 없습니다.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것만큼 또는 그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본주의의 변혁과 여성의 해방을 동시에 추구한 혁명가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 적지 않습니다.

19세기 초 유포피아 사회주의자들은 공동체 속 시민의 권리를 구성할 때 여성의 성욕과 모성에 관한 권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여성의 권리를 둘러싼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고 사회주의 공동체에서 성적 자유와 공동 육아,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실험했습니다. 20세기 초 러시아혁명기 여성 혁명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혁명이 여성에게 정치적·경제적 평등을 보장하고 가사노동을 사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여성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성들의 정신적 독립,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콜론타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글을 쓰고 강연을 했습니다.

19~20세기와는 사회적 조건이 엄청나게 바뀌어버린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이나 콜론타이 같은 여성 혁명가들의 시도를 이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동시에 예니와 그 딸들의 좌절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본주의의 변혁과 페미니즘 운동이 둘 다 절실한 문제라고 여기는 오늘의 활동가가 답해야 할 몫일 것입니다. ●

책소개

‘민주주의 붕괴’가 보내는 경고의 신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소개

상효정(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조직국장)

민주주의 위기 사례에 대한 연구 고찰

2018년 출간된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렛)의 원제는 ‘How Democracies Die’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강한 표현에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이자 국가 간 정당·정치제도의 차이를 연구하는 정치학자인 두 저자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미묘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민주주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정치적 아웃사이더인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을까’라는 저자들의 고민은 ‘오늘

날 민주주의가 위협에 처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위협에 처했던 여러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붕괴하는 역사적 패턴을 발견한다. 더불어서 이들은 ‘극단적인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죽일 수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안과 따르지 말아야 할 전략을 제시한다. 민주주의 위기 사례에 대한 지난 연구 끝에, 두 저자가 미국 사회에 던지게 된 묵직한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잠재적 독재자의 출현

민주주의 위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위기의 발단으로 저자는 ‘민주주의자와 극단주의자의 치명적 동맹’을 꼽고 있다. 즉 기성 정치인이 경제위기, 여론 악화, 선거 패배 등과 같은 불안정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극단주의자의 인기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며 위기를 모면하려 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아웃사이더였던 극단주의자는 기성세력의 도움을 받아 정치 무대로 진출하게 된다.

그런데 기성 정치인의 정치 수(手)는 권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간다. 극단주의자의 인기는 제어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가 전제주의 권력을 쥐게 되면서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책에서는 기성 정치인이 극단주의자에게 권력을 쉽게 넘겨줬던 사례로 베니토 무솔리니와 아돌프 히틀러를 들고 있다. 1920년대 초 이탈리아는 사회불안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당시 주요 정당이 의회 대다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지은이: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

옮긴이: 박세연

출판사: 에크로스

출간일: 2018.10.2



를 차지하지 못하자, 지오반니 줄리티 수상과 같은 원로 정치인은 베니토 무솔리니의 인기를 이용하기 위해 선거동맹인 '부르주아 연합(국민당, 파시스트, 자유당)'을 맺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르주아 연합은 실패하고 줄리티는 사임한 반면, 무솔리니는 이를 기반으로 권력에 도전할 자격을 얻게 된다. 1930년 초 독일은 대공황으로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는 교착상태였다. 이에 보수주의 정치인은 대중에게 인기가 높았던 히틀러를 수상 자리에 앉히기로 타협한다. 그의 높은 인기를 이용한 다음엔, 얼마든지 그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남미 브라질의 제툴리우 바르가스,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또한 기성세력과의 '동맹'을 통해 권좌에 올라간 사례다.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라파엘 칼데라는 자신의 정치 경력이 위기를 맞이하자, 당시 쿠데타 우두머리였던 차베스를 지지 표명하여 반정부 지지층의 인기를 획득하고자 한다. 또한 그는 차베스의 반역죄 혐의를 모두 풀어주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차베스가 정치 무대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왼쪽)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오른쪽). 사진은 1936년 10월25일 '추축 동맹'을 맺은 모습 (출처: 위키미디어)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우고 차베스는 대선 유권자 과반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 경우다. 석유에 의존하던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자, 차베스는 석유 자원이 가난한 이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진정한' 민주주의를 건설하겠다고 쿠데타 우두머리였다. 부패정권에 맞선다는 표상을 획득한 그는 대중의 인기에 힘입어 1998년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하거나, 독자적인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언론 장악과 같은 독재 행보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는 모두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저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오늘날 민주주의 붕괴는 다름 아닌 투표장에서 시작한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물론이고 조지아, 헝가리, 페루, 폴란드,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 선거에 의해 추대된 지도자가 민주주의 전복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유권자 대다수가 전제주의를



우고 차베스 (Hugo Chavez (1954-2013))는 1998년 12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2013년까지 약 14년간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사진은 1995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출처: 위키미디어)

지지했던 것도 아니고, 베네수엘라 국민이 독재자를 원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정치적 아웃사이더가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나이다. 저자들은 모든 독재자가 초기부터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른바 포퓰리즘 아웃사이더는 부패한 기성 정치에 반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등장한다. 대중의 감성을 건드리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방식으로 인기를 얻는다.

따라서 이 책은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하기 위해선 4가지 신호를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한다.¹ ①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② 정치 경

¹ 에일 대학 교수 린츠의 저서 『민주주의 정권의 몰락』은 반민주적 정치인을 가려내기 위한 ‘리트머스 테스트’ 초석을 제시하는데, 두 저자는 이 연구를 기반으로 정치인을 평가하는 4가지 기준을 개발한다. 린츠 교수는 “이념적으로 멀다고 해도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

쟁자에 대한 부정, ③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④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이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전제주의 행동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 트럼프의 사례에서 더 살펴보고자 한다.

극단주의자의 호소에 대한 대중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 엘리트 집단이 사회적 거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이다.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당의 역할’이다. 즉, 정당을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주체로 사고한다. 정당은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의 문지기 역할을 수행한다. ① 잠재적인 독재자를 당내 경선에서 배제한다. ② 정당의 조직 기반에서 극단주의자를 제거한다. ③ 반민주적인 정당이나 후보자와의 모든 연대를 거부한다. ④ 극단주의자를 체계적으로 고립시킨다. ⑤ 극단주의자가 유력 후보자로 떠오를 때 주요 정당은 연합 전선을 형성한다. 두 저자는 앞서 살펴본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의 사례를 상기하면서, 정당이 포퓰리즘 혹은 극단주의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극단주의자를 배제·제거·고립·연대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당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인기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는 일과 극단주의자를 걸러내는 일이 상충한다면, 정당이 상충 관계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이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정당이라는 정치 엘리트 집단이 균형 잡히고 중도적인 정치

한 강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상대 정당과 연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당의 연합 전선을 강조한다.

를 해야 한다는 시각을 함축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당의 문지기 역할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2016년까지만 유효했다. 문지기 기능이 마비되면서, 트럼프와 같은 극단주의 아웃사이더가 정치권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책은 정당의 문지기 기능이 위축되게 된 배경으로 두 가지를 짚는다. 첫째, 2010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외부 자금을 선거 운동에 수월하게 끌어들이 수 있게 되면서 자금이 풍부한 후보자들이 약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케이블 뉴스와 소셜 미디어 산업 성장으로 인해 주변부 후보자들도 대중적 지지와 인지도를 높이기 쉬워졌다. 또한 문지기 기능은 프라이머리 과정(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 경선의 방식이다. 코커스(caucus)는 등록된 당원만 참여할 수 있는 반면,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다.)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프라이머리 시즌 초반, 트럼프는 공화당 유력 인사 중 누구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전통적인 공화당 내부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끊임없이 논쟁거리를 빚어내 주류 방송 채널에 오르내리면서 영향력을 높였다. 결국 보이지 않는 프라이머리는 허물어졌고, 실제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국에서 1400만 표를 얻은 그를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지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서 살펴본 ‘잠재적인 독재자’의 4가지 신호를 트럼프에 대입해보면, ① 그는 2016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면서 선거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표했고, ② 오바마와 힐러리를 각각 ‘외국인’, ‘범죄자’로 규정하며 비난했다. ③ 본인의 지지자들이 폭력을 행하면, 이를 용인하거나 독려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④ 야당, 언론, 시민사회 등 자신을 비난

하는 이를 처벌했다. 힐러리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 검사팀을 꾸렸고,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을 처벌하겠다고 억압한 것이다.

전복되는 민주주의

다음으로 책은 잠재적 독재자가 선출된 후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분석한다. 즉, 독재자를 제어하도록 설계된 민주주의를 어떻게 허물어뜨리는지를 살펴본다. 여러 역사적 사례를 통해 발견한 주된 특징은, 그들이 점진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전복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로, 법원과 검찰, 정보기관, 국세청, 규제기관과 같은 사법기관은 잠재적 독재자에게 위험인 동시에 기회다. 잠재적 독재자는 사법기관을 매수하여 법률을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편은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적은 처단하는 효과를 얻는다. 사법기관을 매수하고 난 뒤, 두 번째로 그들은 정치적 경쟁자를 매수하거나 탄압한다. 정치·경제·언론 분야부터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공직을 제안하는 식으로 회유하거나, 정치적인 장애 요인이 유발되지 않도록 침묵을 강요한다. 이에 국한하지 않고, 세 번째로 그들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 헌법과 선거 시스템, 다양한 제도를 바꿈으로써 저항 세력을 약화하고, 경쟁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운동장을 기울인다. 잠재적 독재자는 반민주적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위기, 자연재해, 안보 위협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 책은 이러한 특징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상세히 서술한다.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검찰과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친여당 인사로 채웠다. 나아가서는 사법기관 구성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

자 대법원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우회하여, 인원 중 일부를 여당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했다.

임기 10년 동안 독재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받는 페루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는 처음부터 대통령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정치계에 뛰어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1990년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페루 경제가 무너졌던 시기였다. 그는 기존 정당을 혐오하는 시민의 분노를 활용하는 등 포퓰리즘을 앞세워 등장했다. 취임 이후 초반에는 의회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기성 정치인을 향해 비난 공세를 취했지만, 민주주의 제도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그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페루 정보 자문이었던 몬테시노스는 국가정보원을 이끌며 야당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불법 행동을 촬영해 협박하거나, 현금을 통해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매수했다. 후지모리 정권은 1990년대 말 주요 TV 방송국, 일간지, 출판사에 뇌물을 주며 언론계를 매수했다. 1997년 헌법재판소가 후지모리 대통령의 세 번째 대선 도전을 위헌으로 판결했을 때, 후지모리의 측근들은 헌법재판관 중 세 명을 해임했다.

터키 에르도안 정권은 안보위기를 활용하여 권력 장악을 정당화하였다. 에르도안이 이끄는 정의개발당이 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자, 이슬람국가의 테러 공격을 빌미로 조기선거를 실시해 의회를 장악했다.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가 비상사태라는 명목하에 공무원을 해고하고, 신문사를 폐간했으며, 판사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포함한 5만 명 이상을 체포한다. 이윽고 2017년엔 대통령 권한 제한을 삭제한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키며 행정부 권력을 강화하게 된다.



블라디미로 몬테시노스(왼쪽)와 알레르토 후지모리(오른쪽). 블라디미로 몬테시노스는 페루의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 후지모리 대통령의 특별고문이자 페루 국가정보부장이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두 저자는 아무리 잘 설계된 헌법이라도 법체계에는 본질적으로 내포된 개념적 공백과 의미의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헌법 조항에만 의존해서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다고 본다. 미국 사회의 경제적 풍요, 탄탄한 중산층, 활발한 시민사회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지만, 두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민주주의 규범이다. 민주주의는 성문화된 규칙(헌법)과 심판(사법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책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성공적인 민주주의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에 의존한다. 규범은 성문화된 헌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완충적인 가드레일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 규범 중에서도 저자들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상호 관용(mutual toleration)’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다. 상호 관용은 자기와 다른 집단의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집단 의지이다. 제도적 자제는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이자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세를 뜻한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보다 더 오래된 전통을 갖는 규범이다. 예를 들어, 수정헌법 2조가 규정되기 전까지 미국 대통령의 임기 제한은 법률이 아니라 자제의 규범으로 이어져 왔다. 두 저자는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 이 두 가지가 모두 작동하여 선순환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서 비교적 최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마저 무너지게 되면, 성문화된 규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체재라고 밝히기도 한다.²

이 책은 기본적인 규범이 힘을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한다고 말하며 여러 국가의 사례를 들고 있다. 그중 역사상 가장 비극적으로 민주주의가 붕괴한 사례는 칠레다. 칠레는 남미 지역에서 가장 유서 깊고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마르크스주의 좌파에서 보수주의 우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보였다.

그러나 냉전 체제를 거치며 칠레 정치판은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1970년 대선에서 절정을 이룬다. 당시 좌파 인민연합당 후보인 살바도르 아옌데가 당선되었는데, 그는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그의 집권에 대해 강한 불안감을 표하

2 “트럼프 이후 우리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이용해 돈을 벌지 못한’다는 규범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규범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너졌을 때, 명문화된 규정은 가장 효과적인 대체제다.” (“레비츠키 ‘민주주의 지키려면, 정치인들이 지지기반에 맞설 줄도 알아야’”, 《경향신문》, 2021.01.27.)

었다. 특히 극단주의 우파 조국과 자유당은 제도적 자제를 버리고 아옌테를 끌어내릴 강경한 전략을 모색했다. 그러던 중 여당이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아옌테의 사회주의 프로그램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아옌테는 대통령 권한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입장을 내비치게 되는데, 이를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게 되면서 정당 간 적개심만 깊어지게 된다. 극단의 대립과 혼란이 치달은 끝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총사령관이 이끄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칠레의 민주주의는 막을 내리게 된다.

여기서 저자들이 주되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정치 분열이다. 정치 집단이 서로 공존할 수 없게 적대적으로 분열하면, 상호관용이나 제도적 자제와 같은 규범이 허물어지면서 결국에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반체제 집단이 등장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이 책은 이와 같은 시각에서 미국의 역사를 분석한다. 미국 건국 초기, 연방주의자와 공화주의자는 서로를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1780년대~1790년대에 상호 관용의 규범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20세기로 들어설 무렵에서야 미국 사회의 튼튼한 견제와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균형 잡힌 시스템하에서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 규범이 제대로 자리 잡아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루즈벨트 집권 시기에 비대해진 행정부 권력이 균형 시스템에 위협을 가한 일, 1950년대 초 반공주의 매카시즘의 등장인 상호 관용 규범을 위협한 일, 닉슨 행정부가 전제주의 행보를 보인 일과 같은 위협 신호가 있었으나,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은 무너지지 않았고 위기는 극복되었다.

그러나 저자들은 미국 사회가 이제는 위기의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치 시스템을 떠받치는 규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연방주의자와 공화주의자가 연방 헌법 비준을 두고 토론을 벌이는 모습
(출처: 위키피디아)

범은 사실상 인종차별과 같은 차별에 근간을 두었다. 즉, 정치 공동체가 대부분 백인의 영역으로 제한되었던 동안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서로의 존재를 위협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러나 1964년 시민권법과 1965년 선거법을 거치며 만들어진 민주화 흐름은 미국사회를 양극화하게 된다. 책 7장에 상세히 서술된 민주당과 공화당의 분열 과정을 요약하면, 부시 정권에 이르러서는 자체 규범과 상호 규범이 위기를 맞이하고, 오바마 임기 동안엔 당과 간 적대감이 고조되면서 자체의 규범은 힘을 잃었다. 이윽고 백인 민족주의를 앞세우며 나타난 트럼프는 극단적으로 규범을 파괴하게 된다.

무너지는 민주주의가 직면한 과제

책이 집필된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반이다. 저자들은 이미 트럼프가 임기 첫해부터 여러 측면에서 전제주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며, 민주주의 존속 변수로 공화당 지도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여론의 지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안보위기가 어떻게 활용되느냐를 꼽는다.

트럼프가 민주주의 제도를 직접 허물어뜨리진 않았지만, 그가 파괴한 규범으로 인해 미국의 헌법적 민주주의마저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전제주의 행보를 강력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연합 전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미국 사회는 인종적·종교적 재편, 경제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가 뿌리 깊게 고착화되어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 사회가 다민족을 기반으로 규범의 범주를 넓혀 가야 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여러 풍부한 사례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의 민주주의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다. 독자는 여러 사례를 참고하면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공감을 느낄 수도 있다.

잠재적 독재자의 징후, 가짜 뉴스·대체언론, 정치적 분열, 선거 공학 등은 한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2021년 11월 발행된 사회진보연대 소책자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는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하기 위한 4가지 기준을 한국 대선 후보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의 도의회 패싱 논란, 본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성남시 의원을 고소한 사건, 정치적 경쟁자를 적폐 세력 등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말은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 것이자 민주주의 규범을 준수하려는 노력의 부족이다.

다만 강력한 민주주의 규범이 민주주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저자의 '믿음'은 다소 모호하게 느껴진다. 저자는 각 당이 돌아가면서 권력을 차지하는 관용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정당 경쟁이 저자의 믿음처럼 공존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고민이 필요하겠다. 책이 민주주의 위기 신호를 보냈다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

책소개

중국식 경제성장의 이면과 그 정치적 의미

『차이나 붐: 왜 중국은 세계를 지배할 수 없는가』 책 소개

조유리(정책교육국장)

어떤 사람들은 미중의 전략적 경쟁을 미국의 패권이 약화하는 증거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미국이 정치·군사·경제적으로 지위가 하락하자,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막기 위해 무역전쟁을 넘어 정보통신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체제 구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인위적으로 구사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제칠 것이라는 예상이 뒤따를 것이다. 과연 세계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나아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는 미국의 세계질서보다 더 평화롭고 평등할까.

홍콩 출생의 중국계 미국인 홍호평은 머지않아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거란 믿음에 의문을 표한다. 중국을 편향적이고 선택적으로 이해하여, 중국의 경제적 부상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차이나 붐

왜 중국은 세계를 지배할 수 없는가

지은이: 홍호평

옮긴이: 하남석

출판사: 글항아리

출간일: 2021.4.8. (원작 2015년)

Ho-fung Hung



차이나 붐

왜 중국은 세계를 지배할 수 없는가

The China Boom

홍호평 지음 하남석 옮김

글항아리

이다. 대신 그는 총체적이고 역사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중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1.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없는 이유

홍호평은 『차이나 붐: 왜 중국은 세계를 지배할 수 없는가』(2015; 국역: 글항아리, 2021)를 통해 두 질문에 답한다. 첫째, 1980년대 이후 중국이 빠르게 부상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중국의 급격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정치적 조건을 밝히기 위해 그는 무려 18세기에서부터 중국 경제의 변화와 국가 지도자들의 대응을 추적한다. 둘째,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에 처한 서구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는 중국 경제 성장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면서, 중국이 세계 경제를 구원하기는커녕 그 위기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책의 순서대로 그의 논지를 따라가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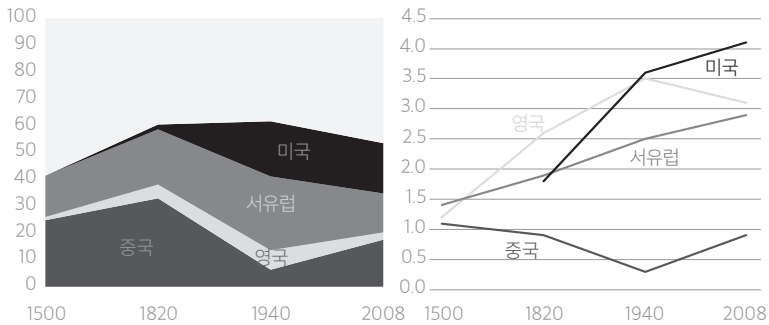
1) 자본주의는 왜 중국이 아닌 영국에서 태동했나: 1650~1850년¹

홍호핑은 16~17세기에 이어, 18세기 중국은 세계에서 상업이 가장 발전한 국가였다는 최근의 연구에 주목한다. 심지어 상업의 발전 정도는 18세기 유럽을 능가했고, 당대 중국인의 생활수준도 유럽인의 그것에 뒤지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이 되면 중국과 유럽의 발전 경로는 분기하기 시작한다. 유럽에서는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한 반면, 중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유럽인의 생활수준은 상승했지만, 중국인의 생활수준은 하락했다.

왜 그럴까? 홍호핑은 영국과 달리 중국에서 강력한 자본가 계급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강력한 자본가 계급이 있어야, 농촌에서의 잉여를 집중하여 기술발전에 사용하고, 그것을 토대로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상업의 발전이 독립적인 자본가 계급의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중국의 상인들은 향산·국가 엘리트로 변모하거나 인근에 있는 유럽의 식민 항구 도시(포르투갈의 마카오, 스페인의 마닐라, 네덜란드의 바타비아 등)로 이주하기를 선택했다.

중국에서 자본가 계급이 형성되지 못한 것은, 청이 상업을 통제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통념과는 달리, 청은 일관되게 상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관료들도 민간 상인의 발전에 의존하여 지역의 식량을 확보하고, 기반 시설을 만들고, 군사 작전에 물자를 조달했다. 민간 상인은 상업세 인하나 저리의 대출 등 청 정부의 혜택을 받기도 했다. 이

¹ 왜 중국에서 자생적으로 자본주의가 태동하지 못했나, 혹은 어떻게 영국에서 먼저 산업자본주의가 태동할 수 있었나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존재한다. 이 부분에서는 홍호핑의 주장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소개한다.



1500~2008년 중국과 서구 비교

왼쪽 그래프는 세계 총생산(GDP)을 100으로 보았을 때, 중국, 영국, 서유럽, 미국의 국내총생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나타낸다. 1820년 이후 중국의 급격한 비중 축소와 반등을 관찰할 수 있다. 오른쪽 그래프는 세계 1인당 평균 GDP를 1으로 보았을 때, 중국, 영국, 서유럽, 미국의 1인당 GDP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다. 다른 국가에서의 상승세와 달리 U자 형태로 나타나는 중국의 경제적 부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래프는 책 44쪽의 표 1.1을 재구성했다.

처럼, 상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부의 전략은 청과 영국에서 유사했다.

영국과 청의 정부에 차이가 있었다면, 노자 갈등에 대한 태도에서였다. 면방직 작업장을 장악한 상인들이 공장 소유주로서 노동자와 갈등할 때, 영국 정부가 전적으로 공장주의 편에서 노동 수요를 탄압했다면, 청 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공장 소유주에게 고용보장의 의무와 임금·노동일에서의 양보를 요구했다. 도시에서 발생한 식량폭동에 대해서도 영국 정부는 인민의 생존권 대신 상인의 소유권을 옹호했다면, 청 정부는 폭동을 제압하는 동시에 상인에게 식량 가격의 인하를 요구했다. 그 결과 영국에서는 상인 자본이 성장하여 강력한 자본가 계급이 형성됐다면, 청나라에서는 자본가의 재생산이 제한되었고, 자본가 계급이 향산·국가 엘리트와 동등한, 독립적인 집단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 요컨대 정부의 태도가 자본가 계급의 형성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강력했던 청 국가의 능력은 18세기 후반에 급격하게 쇠퇴한다. 홍호평에 따르면, 상업은 발전했으나 경직된 재정 체제로 인해 새로운 세입원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청의 세금 수입은 18세기 내내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정부 지출이 제약되면서 관개 시설이나 운하 같은 공공 기반 시설을 유지하거나 관료의 봉급을 인상할 수 없었다. 상업의 발전과 은의 유입으로 인플레이션까지 발생하면서, 관료는 뇌물 에 의존하게 됐고, 지방 정부는 불법적인 세금 징수에 의존했다. 중국 국가 엘리트의 실패는 18세기 후반부터 영국인과 중국인의 생활수준 이 분기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2) 국가가 주도한 농촌 잉여의 자본으로의 전환: 1850~19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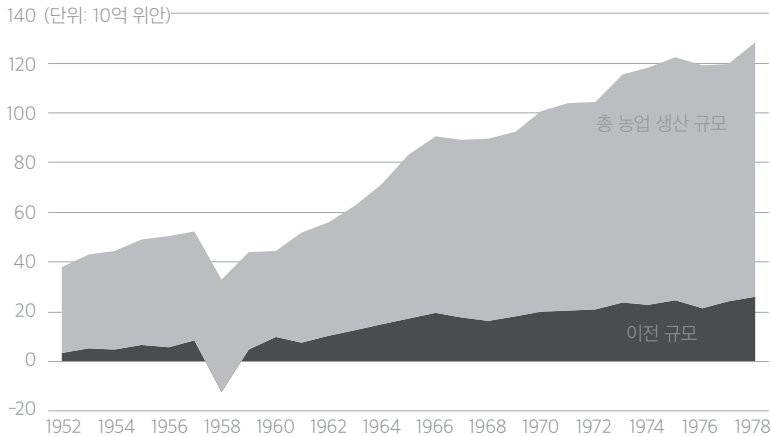
독일, 러시아 등 모든 후발 산업 국가는 최초의 산업국가인 영국과 달리 자본가 계급의 자생적 노력만으로 산업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으며, 잉여를 추출·집중해 자본으로 전환하는, 즉 시초축적을 지원하는 국가의 역할을 필요로 했다. 19세기 후반에 산업화를 시도한 일본이나 20세기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관점에 따라 홍호평은 1850~1980년의 중국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농촌의 잉여를 산업 영역에 집중시키려는 국가의 시도를 분석한다.

첫 번째 시기는 청의 몰락기인 1850~1911년이다. 이 시기 청의 중앙 정부는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잉여를 집중시키는 데 실패했다. 앞서 살펴본 대로 18세기 말, 청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을 상실했고, 도시 폭동과 종교적 봉기가 끝없이 이어졌다. 청 정부는 백련교도의 난

을 진압하기 위해 지방을 군벌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향신, 국가, 상인 엘리트가 결합하여 지방에 분산된 군사-약탈 엘리트가 형성됐다. 같은 시기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시행해 이후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건설했고, 농촌의 분산된 잉여를 집중시켜 미쓰비시, 미쓰이 등으로 대표되는 기업집단(자이바쓰)에 자금을 조달했다. 반면 중국에서는 지방의 군사-약탈 엘리트가 농촌의 잉여를 추출하여 자신들의 폭력 수단을 축적하는 데 사용했고, 나아가 중앙정부가 산업 기업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방해했다. 같은 조건에 있었던 일본과 청이 국가 엘리트의 대응에 따라 다른 경로로 분기했다.

두 번째 시기는 혁명, 내전, 제국주의 열강과의 전쟁이 지속된 1911~1949년이다. 이 시기에는 중국에서 농업 발전이 지속되었음에도, 중국 엘리트들은 그 잉여를 산업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앙집중적인 국가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아편전쟁에 패배한 이후에도 중국은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 완전히 식민화되지는 않았고, 중국의 농촌 경제 역시 식민지적으로 재구조화되지 않았다. 농업 생산성은 상승했고, 농촌의 면직물 산업도 성장했다. 중국에서 생산된 면직물이 영국의 면직물보다 두껍고 내구성이 좋아 역으로 영국으로 수출될 정도였다. 그러나 농촌의 잉여를 산업 발전에 투입할 유능한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자본의 시초 축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 번째 시기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부터 개혁개방 직전까지인 1949~1980년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중국은 중국공산당에 의해 압축적인 자본의 시초 축적에 성공하게 된다. 건국 초기에 중국 공산당은 토지 개혁과 농촌 협동조합 활성화를 시도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농촌의 잉여를 도시의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50



1952~1978년 총 농업 생산에서 공업으로 이전한 경제 잉여의 규모

마오쩌둥 시기 중국은 농산품과 공산품 간의 불평등 교환을 통해 농업에서 공업으로 가치를 이전했다. 이전 규모가 총 농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대 초반의 10% 이하에서, 1960~1970년대 20% 이상까지 상승했다. 그래프는 매우 보수적으로 추산한 규모를 나타내는데(총 3740억 위안), 1953년에서 1978년까지의 이전 규모가 인민폐로 6~8천억 위안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그래프는 책 83~84쪽의 표 2.1을 재구성한 것이다.

년대 후반부터 중국 공산당은 인민공사를 건설해 농촌을 집단화하고, 그 잉여를 추출해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농촌에서 시장이 폐지되고, 인민공사가 토지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모든 생산물을 관리하며, 도시 공업에서 생산한 비료와 농업 기계를 농촌에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농촌의 잉여는 도시로 이전됐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에서는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전할 수 있었고, 농촌과 도시의 생활수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마침내 중국 공산당에 의해 농촌의 잉여가 자본으로 전환됐다.

산업화를 위한 농촌 집단화와 농업-공업의 잉여 이전 체제는 소련이나 다른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중국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 중국은 농민이 도시로 이주하지 못하게 하는 호구 제도를 도입했고, 경기 변동에 따라 도시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완충하기 위해 농촌을 활용했으며(상산하향), 농촌이 치른 희생의 대가로 농업 기반 시설, 농민의 기초 교육과 보건에 투자했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마오 시기 중국의 독특한 특징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이끌 세 가지 유산을 남겼다. 국유기업과 기반 시설 네트워크, 교육받고 건강한 농촌의 산업예비군, 낮은 대외채무로부터 비롯하는 외국 정부와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율성이다.

3) 중국의 호황: 1980~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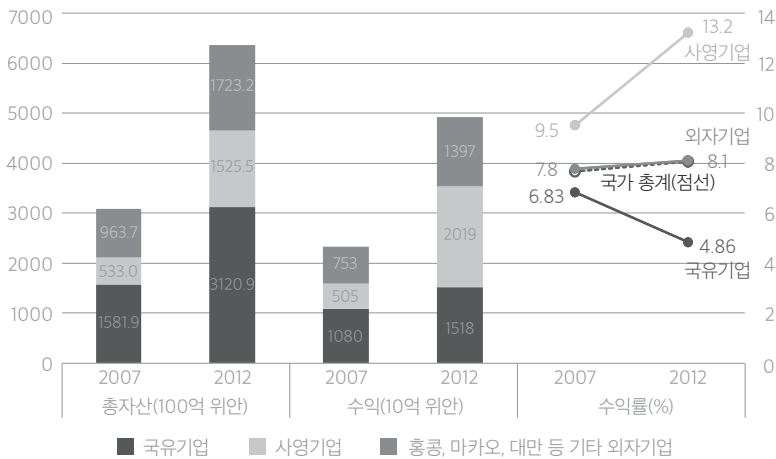
홍호평은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가파른 성장을 동아시아의 냉전과 탈냉전이라는 동학 속에서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아시아 냉전의 한쪽에서 중국은 국유기업 네트워크, 농촌의 잉여 노동력, 낮은 대외채무라는 세 유산을 형성했다. 다른 한쪽에서 일본과 동아시아 네 호랑이 즉,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미국의 공산주의 봉쇄전략에 힘입어 자본주의적 발전을 이루어냈다. 홍호평은 동아시아 냉전의 양대 결과가 탈냉전 이후 결합하면서, 중국이 빠르게 부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일단 중국 개혁·개방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자. 여기서 개혁은 ① 1980년대 초반 농촌의 탈집체화, 시장 부활, ② 1980년대 후반 도시의 국유기업 개혁과 가격 개혁, ③ 1990년대 국유기업 개혁의 가속화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개방은 아시아의 화교자본에 대한 개방에서 전 세계의 초국적 자본에 대한 개방으로 확대됐다.

개혁개방 과정에서 중국의 당-국가는 국가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던 중앙집중적 국가에서, 사적 자본의 축적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는 분권화된 국가로 변화했다.² 국가 성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1989년의 천안문 사태였다. 1980년대 초 농촌 개혁은 농촌에 시장을 부활시켜 소득 상승으로 이어졌고, 농촌의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종신 고용이 폐지된 부정적 효과가 상쇄됐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시의 국유기업 개혁은 노동자 복지 후퇴, 임금 하락, 고용 안정 약화로 이어졌다. 동시에 가격개혁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부정부패, 사회 양극화가 나타났다. 대중적인 불만이 물가 인상과 맞물리면서 천안문 소요가 발생했지만, 중국 공산당은 간부-자본 계급과 결합하여 노동자의 소요를 가차 없이 진압했다. 이 사태는 정치 자유화 봉쇄와 도시 노동자의 권리 약화, 나아가 미국 중심의 금융 세계화로의 편입이라는 이후 중국의 발전 경로를 규정했다. 이후 중국공산당의 중심은 간부-자본계급, 자수성가한 사업가, 중산층 전문직 등 신흥 부유층이 장악했다.

개혁개방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 핵심 간부의 가족들은 국유기업을 통해 주요 경제부문을 장악하고, 이익을 얻었다. 국유기업은 당-국가가 제공하는 재정, 금융, 정책 특혜를 받으며 막대한 자산을 축적했다. 문

2 1980년대 중국은 시장개혁을 위한 분권화를 시도한다. 중앙 개혁과 지도부들은 보수적인 노간부들을 견제하면서, 지방 간부들 사이에서 시장 개혁을 지지하는 관료층을 만들기 위해 하급 정부가 이유를 취할 수 있게 허가했다. 지방정부는 동아시아 화교자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존하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했다. 경제 분권화의 결과로 중앙정부의 권위가 약화하자, 1990년대 들어 중앙정부는 재중앙집중화를 시도했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향진 정부에서 성급 정부로의 집중화는 이루어졌지만, 성급 단위에서 중앙정부로의 권력의 집중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2007년과 2012년 유형에 따른 공업 기업의 수익률 비교

2007년과 2012년 사이 국유기업의 자산은 2배로 늘어났지만, 국유기업의 수익은 1.5배 상승에 그쳐 수익률은 2%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반면 2012년 사영기업의 자산은 국유기업의 1/2 수준이지만, 수익은 약 30% 정도 더 크다. 이 그래프는 책 109쪽의 표 3.2를 재구성했다.

제는 이런 국유기업들이 사영 기업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유은행은 수익성이 없는 국유기업에 방만한 대출을 지속하여 부실채권이라는 문제를 낳았다. 1999년의 구제금융과 2009년의 만기 연장에도 국유기업의 개혁은 지체되는 반면,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국유부문의 부실이 중국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데도 중국이 국유기업에 보조금과 금융 특혜를 제공하는 이유를, 홍호평은 중국의 특징적 경제 구조에서 찾는다.

사영 수출기업은 국유은행을 통해 외화수입을 고정된 환율의 인민폐로 교환한다. 이때 수출 부문에서 무역 흑자가 발생하면, 중국 은행 시스템에서는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그만큼 인민폐의 양도 증가한다. 국유은행은 이 증가한 유동성으로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고정자산 투

자를 위해 대출한다. 중국은 고정자본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을 지속한다. 수출 부문의 호조는 중국의 자본주의적 변영의 토대를 이룬다.

수출 부문의 성장은 탈냉전 이후 마오의 유산과 동아시아 자본주의가 결합한 결과였다. 수출 부문이 성공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탈냉전이라는 조건으로 1990년대 들어 국제적으로 중국의 수출 제조업 부양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달러 페그제와 위안화 평가절하, 미국 클린턴 정부의 무역 최혜국 대우 연차 심사 폐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승인 등이다. 둘째, 마오의 유산으로 중국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오랜 기간 저임금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중국 정부는 농촌의 경제성장을 억압하며, 농민의 이농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했다. 셋째, 중국은 기존의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 결속되었고, 동아시아의 막대한 제조업 자본이 중국에 투자됐다. 중국의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는 동아시아의 수출 지향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생산라인을 옮기도록 유도했고, 이를 통해 기술과 경영 노하우, 해외의 소비시장까지 확보했다. 또 동아시아의 자본이 중국에 투자되어, 총자산은 작지만 수익률과 총수익이 모두 높은 사영 수출기업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수출 부문의 성장이, 앞서 설명한 국유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이끌었다.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로 편입한 중국은 다양한 기술 수준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여, 일본, 동아시아 네 호랑이, 말레이시아·태국 등 동남아 신흥국의 수출 제조업체를 위협하고 있다. 일본이 선두에 선 동아시아의 다층적 하청 생산 네트워크(기러기 대열 모델)는 2000년대 들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생산 네트워크(판다 중심의 원형 대형)로 변화했

다. 동아시아 국가의 중국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의 한계와 취약성이 다른 아시아 국가의 한계와 취약성으로 확장했다.

4) 중국의 성장이 개발도상국에 미친 영향

산업혁명 이후 국가 간 경제성장의 불평등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특히 부유한 서구 지역과 나머지 지역의 격차가 벌어졌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은 이런 경향을 반전시켰다. 홍호핑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중국 내에서 도농 간, 성 간 불평등이 크게 확대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가장 가난한 지역도 실질 소득 증가율이 세계 평균보다 높았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은 세계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만약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현재와 같이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중국의 평균 소득이 세계 평균 소득에 도달하는 향후 30년간 중국의 성장은 세계 불평등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까지 하락하거나 심지어 더 낮아진다면, 중국은 세계 불평등의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세계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개발도상국이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거나, 중국의 성장 모델을 이식할 수 있다면, 세계 불평등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수출국, 그리고 인도처럼 인구가 아주 많은 국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의 제조업이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다. 중국은 아시아의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부품과 기계

류를 수입하여 최종 제품으로 조립한 다음, 다른 지역으로 수출한다. 중국과 지역 생산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아시아 인접국은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이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에 천연자원을 공급할 뿐이며, 따라서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볼 수 없다. 천연자원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네덜란드 병’(천연자원에만 의존하고 산업 발전에 소홀해 결국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현상)이나 ‘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조업과 경제 부분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이들 국가의 산업은 중국 제조업체와의 경쟁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그나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정부가 광산 기업을 통제하거나 소유하여, 천연자원 부문에서의 수익을 경제성장을 위한 장기투자에 사용할 수 있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원 채굴마저도 해외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자원 채굴을 위해 진출한 중국 기업은 그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고,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 성장은 제약되고 있다.

다음으로 인도는 독자적인 고속 성장을 통해 세계불평등의 감소에 기여하리라고 예상되는 유력한 후보다. 그동안 인도는 중국과 지정학적 경쟁으로 인해 무역·투자의 연계가 적었고, 인도의 경제 성장은 중국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다. 최근 인도의 경제 성장은 국내 소비를 중심으로 하며, 수출과 투자의 비중은 낮아, 중국과는 정반대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도가 중국의 경로를 따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5) 중국은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 있나

홍호평은 미국의 세계 헤게모니가 쇠퇴하고 있지만, 미국의 도전자라고 여겨지는 중국이 사실은 미국의 헤게모니를 지지함으로써 그 쇠퇴를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질서는 중국에 의해 세력 균형이 재형성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달러 헤게모니에서 시작한다.

미국의 달러 헤게모니는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확정되었고,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보완되었다. 미국은 1950~1960년대에 절대적인 경제적 패권을 누리면서 군사력을 강화했고, 서유럽과 일본이 달러 사용을 지지하는 대가로 안보 우산과 무기를 제공했다. 달러-안보 연계가 형성되자, 미국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해체되어도 서유럽과 일본은 달러의 헤게모니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탈냉전 이후 안보의 위협이 사라지자, 유럽은 달러에 대한 대안으로 유로화를 구상했지만, 유로화의 지배력은 제한적이었다. 미국의 주요 도전자였던 일본이 1990년대 장기불황에 빠지고, 유럽도 2000년대 유럽통합의 위기를 맞으면서, 미국은 쇠퇴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지배력을 통해 아직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서유럽, 일본과 달리, 중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의존하지 않고 있고, 지정학적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 심지어 2008년 이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미 재무부 채권의 최대 보유국이 되었다. 이론적으로 중국은 달러 자산을 투매하여 미국의 통화 위기, 금융 붕괴, 재정 위기를 일으킬 수 있고, 이는 달러 헤게모니의 최종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홍호평은 중국이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중

국이 달러 헤게모니에 도전할 일은 없을 거라고 본다. 우선 1990년대 이후 수출 지향적 성장으로 형성된 중국 내 기득권 세력이 중국 경제 구조를 소비를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무역흑자는 오직 미국과 유럽에서만 발생하며, 중국의 대미, 대유럽 수출의 전체와 대부분은 달러화로 결제된다. 따라서 중국은 달러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은 분명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조정하고 있다. 2차 세계전쟁 이후 미국은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의 다수 국가에 경제적, 군사적 안보를 제공함으로써 동아시아에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아시아에서는 중국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했다. 중국은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수임하거나 그에 투자하는 등 인접국에 투자, 대출, 경제 원조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자, 중국은 자신의 경제적 영향력을 외교적 무기로 활용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나 일본과의 영토 분쟁과 관련해 다른 국가에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경제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제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동아시아에 남아주길 바라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려 한다.

중국의 영향력 확장은 동아시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은 아프리카에 관심을 기울였고, 정치체제에 무관하게, 미국과 유럽보다 더 관대한 조건으로 아프리카 국가에 투자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의 환심을 얻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달러이 라마 같은 정치적 이슈에서 중국을 지지하면서 그에 보답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나이지리아 등 중국과 밀접한 국가들조차 중국에 대한 불안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처럼 중국은 단기간에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중심이 되지는 않겠지만, 세계 정치의 동학을 변화시키고 있다.

6) 미국과 중국은 함께 지구적 위기를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홍호평은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쇠퇴시키는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기는커녕, 미국의 쇠퇴로 인한 변화에 의존하여 성장했으며, 이제는 바로 그 질서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1970년대, 미국 경제는 위기를 맞았으며 그 대응으로 세계화를 진전시켰다. 중국은 그런 미국의 변화한 전략에 힘입어 수출을 확대하며 성장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중심의 질서는 다시 위기에 처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세계 경제의 불균형의 한 축이 중국 경제의 불균형이다. 미국이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며 세금을 인상하려 해도, 중국이 계속해서 소비를 억제하고 무역 흑자를 유지하려 한다면 불균형을 재조정할 수 없으므로, 양측에서의 조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중국은 성장 과정에서 가계 소비를 억압하고 과도하게 고정자본 투자와 수출에 의존했고, 그 결과 거대한 불균형이 야기되었다. 특히 그는 중국에서 과잉투자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지닌 지방정부는 각기 자율적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는데, 지방 정부들은 수출지향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와 내수지향적인 국유기업의 생산 능력, 인프라 건설을 두고 경쟁한다.

거대한 투자에도 수출기업은 어느 정도의 이윤을 산출했다면,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는 점차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 그런데도 지방정부 사이의 보호주의 정책과 금융 시장의 저발전으로 이미 포화상태의 지방과 부문의 국내 기업의 투자는 계속해서 심화한다. 심지어 국유은행은 지방 당 실권자들의 명령이나 대인관계에 의해, 수익이 높은 사영기업보다 부실하고 방만한 국유기업에 신용을 제공한다. 이런 비효율적 자원 배분은 이윤 하락과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위기의 폭발은 중국 정부의 금융구제와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고 위안화 평가절상을 억제함으로써 국유기업과 수출 제조업자를 보조하고, 농촌에서 대규모 산업 예비군을 창출하여 상대적인 제조업 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즉, 불균형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홍호평은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재조정을 위해 분배를 조정하여 노동의 몫을 대폭 증가시키고, 도시와 농촌 간의 불평등을 축소하며, 국유 부문의 특권을 축소하는 재분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당-국가 엘리트에게 이런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경제 개혁을 위해서는 당-국가 엘리트의 특권을 견제하기 위한 민주화와 자유화가 필요하다. 중국의 사회정치적 개혁이 있어야 중국의 경제적 재조정이 가능하고, 중국 경제의 불균형을 조정해야 세계 경제의 재조정도 가능하다.

2. 중국식 경제발전이 위험한 이유

‘왜 중국은 세계를 지배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홍호평은 답

은 간단하다. 중국이 미국의 질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단기간 내에는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일은 없다. 그러나 그는 중국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의 곳곳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1) 중국의 성장둔화는 국내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0년 중국은 경제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에 등극했고, 수출규모로는 독일을 제치고 1위가 되었다. 그러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아직 세계 평균보다 낮다. 중국이 향수 수십 년간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1인당 소득이 세계 평균에 도달하는 데에는 3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156-157쪽).

그런데 중국의 경제성장은 벌써 둔화하고 있다. 홍호평은 중국 GDP 성장률이 8% 밑으로 떨어진 2013년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지적한다. 이전 30년 동안 중국의 GDP 성장률이 8%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90~1991년과 1999~2000년 두 번 밖에 없었고, 일시적인 하락 후 다시 빠르게 반등했다(257쪽). 홍호평의 예상대로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하여 2019년에는 5.9%를 기록했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던 2020년에는 2.3% 성장에 그쳤다.

홍호평은 중국의 금융 체계는 이미 부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성장의 둔화를 견딜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부실 채권으로 인해 금융 체계가 무너진다면, 채무불이행과 파산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243쪽). 중국 정부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이 GDP 성장률 1%포인트 이상 하락을 감수하면서도 헝다그룹을 파산하게 내버려 둔 것이 대

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포함하여, 중국 금융 체계 전체의 부실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슷한 위험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또 그는 중국 정치제도의 불안정성에도 주목한다.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강력한 국가적 통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가파른 성장 덕분이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세원을 찾을 수 있었기에, 2006년 농업세를 폐지하거나 2008년 새로운 노동계약법을 도입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지방 정부들은 ‘안정 유지 기금’을 운용하는데, 시위가 발생하면 시위자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257쪽).

그러나 성장 둔화가 오래 지속되면, 이런 방법들로는 내부의 불만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국가에 도전하는 사회적 소요가 나타날 수도 있다. 홍호평은 이런 사태에 대비하여 당-국가 엘리트가 대중의 분노를 공격적인 민족주의로 전환하려 시도하고 있고,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258쪽).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무력 통일을 공언했으며, 2021년 내내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 홍호평은 중국의 내부적 문제로 인해 이런 상황이 반복하여 나타날 수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2) 중국과 동아시아, 중국과 세계는 점점 하나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는 중국과 수출 지향 생산 네트워크로 결합되어 있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중국에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공급한다. 중국은 최종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과 유럽의 부유한 국가로 수출

한다. 중국은 세계경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거대한 일부가 되었다.

특히 홍호평이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중국과 동아시아의 관계를 살펴보자. 중국이 부상하면서 일본을 선두로 하던 동아시아의 산업질서는 중국 중심의 수출지향 산업질서로 전환했다. 기존의 산업질서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러기 대형의 위계에 따라 각기 다른 최종 소비재를 서구 시장에 수출했다. 일본이 가장 기술적으로 발달한 제품을 수출하면, 한국과 대만은 중간 수준의 제품을, 동남아시아는 부가가치가 가장 낮은 제품을 수출했다. 이제 변화한 산업질서에서 일본은 중국에 자본재를 수출하고, 한국과 대만은 중국에 고부가가치 부품을 수출한다. 중국은 이 자본재와 부품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서구의 부유한 국가들로 수출한다(130-134쪽).

동아시아 국가의 무역구조 변화는 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1990~2000년대에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대중 수출은 대미 수출을 넘어섰으며, 일본의 대중 수출은 대미 수출을 따라잡고 있다(135쪽).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증가하면, 중국의 수출 부진이 연쇄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생산 네트워크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는 의도치 않게 중국 금융체계의 부실로 인한 위험을 공유하게 된다.

3)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나 일본과 영토 분쟁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주권 주장을 침해하는 국가에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경제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위협했다. 2012년 일본 정부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자, 2013년 중국 정부는 일본이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중국에게 넘기고 중국 영토로 인정할 때까지 희토류 원소를 일본에 수출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중국 내에서는 대규모 반일 시위가 일어나,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했다. 2012년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싸고 필리핀과 갈등을 빚을 때에는 중국이 관광을 중단했고, 베트남에도 비슷한 위협을 했다(202-203쪽).

2016년 한국의 경험은 더 생생하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실질적인 경제보복에 나섰다. 11월 18일 롯데그룹의 성주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의 전 사업장에 세무조사, 소방·위생점검,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2017년 2월 28일에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하겠다고 경고했고, 3월 3일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했다. 8일에는 중국 내 55개 롯데마트 점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15일에는 한국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다. 20일, 결국 한국은 중국의 경제보복을 WTO에 제소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할수록,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할수록, 중국의 정치적 압력은 강해질 수 있다.

4) 중국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려 한다

2013년 중국은 국방백서에서 ‘해외에서의 이익이 중국 국가 이익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인민해방군의 핵심 목표라고 명시했다. 중국은 경제적 이익 방어를 위해 국제 용병도 고용했는데, 특히 에릭 프린스 같은 사람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210쪽). 그는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특수 부

대에서 장교로 복무했었다. 퇴역 후 그는 안보업체인 블랙위터를 창업했고, 미 국방부와 계약을 맺어 이라크 전쟁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제 그는 중국 최대 국유기업 중신그룹(ZTE)의 지원을 받아 홍콩에서 보안·물류 회사인 프린티어서비스그룹(FSG)을 운영하고 있다.³

무력을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2017년 8월 중국은 처음으로 해외 군사기지를 보유하게 됐다. 이 군사기지는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수에즈 운하로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다. 현재는 아프리카 적도 기니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것이 완성되면 중국은 아프리카 동서에 하나씩 군사기지를 확보하게 된다. 이 군사기지가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한다.

중국 자체적으로 민간군사기업(PMC)을 육성하고 있기도 하다. 일대일로 사업으로 해외로 나가는 중국 기업과 중국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중국 민간군사기업의 능력이 뒤쳐지고 있지만,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3 신장위구르자치구는 1949년 중국의 영토로 편입됐고, 한족이 대거 이주했다. 현재 전체 인구의 45% 정도는 위구르족이다. 2009년부터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는 자기 문화를 지키려는 위구르족 분리독립 세력의 테러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집단 수용소를 만들어 위구르족을 감금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018년 8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에는 1000개가 넘는 강제수용소가 있고, 위구르인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구금되어 강제 노역과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자 중국은 인권탄압을 부인하면서 강제 수용소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에릭 프린스가 운영하는 프린티어서비스그룹과 신장에 연간 8000명을 훈련할 수 있는 군사기지를 만드는 계약을 체결했다.

3. 우리가 중국에 주목하는 이유

중국의 부상이 수반하는 여러 위협에도, 많은 개발도상국은 중국의 부상을 기회로 인식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해온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을 서로 경쟁시키며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 했다.

미얀마가 그런 사례다. 1990년대 이후 미국과 EU는 미얀마 군사정부의 민주주의 탄압을 이유로 미얀마에 각종 경제제재를 부과했다. 이 기간에 미얀마는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각종 인프라 건설에서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큰 이익을 봤다. 그러나 중국 투자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면서 미얀마는 거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점차 불안감을 느꼈다. 중국의 국유 광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적 불만도 고조되었다.⁴

2011년경 미얀마 군사정부는 정치 개혁을 시도하며 미국과 서구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시도한다. 이후 미얀마는 중국과의 경제적 우호관계를 누리면서도 미국과의 경제적, 정치군사적 관계를 동시에 개선하려 했다. 2013년에는 벵골만과 중국의 서남부 원난성을 잇는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가 건설한 가스관을 개통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했고, 미국과 타이의 군사훈련에도 참여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했다(204-205쪽).

홍호평은 미얀마 외에도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4 미얀마와 중국의 경제적 관계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미얀마 쿠데타: 부패한 군부와 중국의 대외확장”, 《사회운동포커스》, 2021.4.5.

국가들이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실용적이고 일시적인 접근을 해왔다고 본다. 한국 역시 그가 지적한 국가들 중 하나다. 그는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만, 그 함의를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은 이미 쇠퇴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질서에 올라탔다. 쇠락하는 질서 속에서 호황을 누린 중국은 세계 경제 불균형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한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중국 공산당의 소수 지도부에 의해 전체 경제가 통제되면서 거대한 부실이 야기되었다. 이제 중국은 해외에서도 정치와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제를 활용하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력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중국과 경제 관계를 맺는 국가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자생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중국의 정치적 이익에 종속될 위험이 크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 중국에 대한 단기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위험한 이유다.

『차이나 붐』은 홍호핑이 이전에 썼던 여러 논문을 묶어 2015년에 한 권의 책으로 낸 것인데, 여전히 오늘날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큰 시사점을 준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미국 해계모니의 쇠퇴와 그에 대한 대응, 동아시아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동학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중국 자본주의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긴밀하게 결합하고 있고, 벌써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이 트럼프-시진핑 시기의 미중갈등이나 바이든-시진핑 시기의 전략적 경쟁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책의 분석은 2022년 현재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승리주의 혹은 패배주의의 신화에서 벗어나 역사적 궤적 속에서 중국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책을 읽어보는 게 어떨까. ●

욕망을 걷어내고 바라본 한국 고대사

『욕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 왜곡과 날조로 뒤엉킨
사이비역사학의 욕망을 파헤치다』 소개

이진호(인천지부 회원)

1. 서론

한국 고대사라고 하면 무언가 고리타분하고 현재와 먼 것으로 느껴진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맞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수호할 사명을 가져야 할 것 같기도 하다. 한국 고대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당대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보편적 이해보다는, 특정한 목적이 더 강조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주변국과 쟁점이 되는 ‘역사왜곡’ 문제와 결부지어, 현대의 정치적·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른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역사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크다. 이와 같은 한국 고대사 이해는 다른 견해를 제기하기 어려운, 사뭇 ‘정신교육’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역사 교육이 애국심 고취를 목적으로 이뤄진 탓도 클 것이다.

과학적·합리적 역사 이해가 아닌, 특정 목적을 전제한 역사 이해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 토론과 비판이 가능한 학문적 논쟁보다는, 이해관계를 따지는 정치적 논란이 된다. 문제인 정부 들어서 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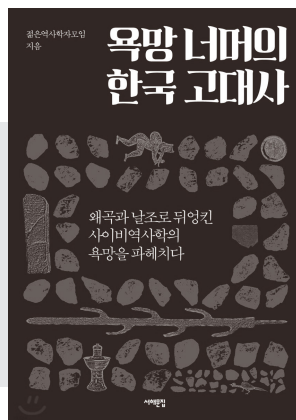
욕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

왜곡과 날조로 뒤엉킨 사이버역사학의 욕망을 파헤치다

지은이: 젊은역사학자모임

출판사: 서해문집

출간일: 2018.10.20.



난 한국 고대사 관련 해프닝은 이를 잘 보여준다. 문제인 정부 출범 직후, 문제인 대통령은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2017년 6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보통은 가야사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경북까지 미치는 역사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광양만, 순천만, 금강 상류 유역까지도 유적들이 남은 아주 넓었던 역사”라며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¹ 이후 가야사 연구·복원은 정부 100대 국정 주요 과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 역사학계는 큰 틀에서는 가야사 복원이라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체계적 연구 없이 무리한 발굴과 복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당시 한국고대사학회장이었던 하일식 연세대 교수는 한국고대사학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역사의 특정 시기 연구를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역사학과 고고학계 일부는 환영하고, 일부는 가우뚱하고 있다”고 밝혔다.²

1 “文대통령, ‘가야사 복원’ 강조 왜?…역사 통한 동서화합 카드”, 《연합뉴스》, 2017.06.01.

2 “가야사 복원·도종환 역사관 놓고 역사학계 ‘시끌’”, 《연합뉴스》, 2017.06.11.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도 후보자는 당시 '재야 역사관 추종' 논란에 대해 “확실히 싸워야 할 문제가 있으면 싸우겠다.”고 발언하여 큰 논란이 되었다. (출처: 《한겨레》)

2017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역사관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웠다. 당시 역사학계는 도 후보자가 의원 시절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위 재야사학계에 편향된 입장으로 ‘동북아역사지도 사업’과 ‘하버드대 한국 고대사 프로젝트’를 무산시키는 데 기여했고, 민족주의 사관에 물든 재야사학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목소리를 높일 기회를 줬다고 보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도 후보자는 “확실히 싸워야 할 문제가 있으면 싸우겠다.”라는 발언을 하여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³ 재야사학계의 주장대로 ‘식민사관에 잠식된 역사학계’에 맞서 싸우겠다는 발언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도 후보자는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장관에 그대로 임명되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역사관 논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이와 같은 역사인식이 우리 사회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큰 문

3 “도종환, ‘역사관 비판’ 반박 ‘싸울 땐 싸우겠다’”, 《한겨레》, 2017.06.06.

제다. 과학적·합리적 역사인식을 방해할 뿐더러, 민족주의적 인식에 내재한 욕망을 자양분으로 삼아 위험한 주장이 힘을 얻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앞서 나온 ‘재야사학계’의 주장이다. 사실 ‘주류사학’에 대비되는 ‘재야사학’이라는 용법은 적절치 않다. 이들의 연구방법과 목적은 학문이라면 갖추어야 할 기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사학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흉내를 내지만 ‘가짜 학문’이다. 이를 영어권에서는 ‘슈도히스토리(pseudo-history)’라고 하며, ‘유사(類似)역사학’, ‘의사(擬似)역사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맹자』에 나오는 ‘비슷하지만 아닌 것’을 가리키는 ‘사이비(似而非)’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이비역사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이비역사학은 현재 한국 역사학계가 여전히 일본 식민사관을 추종하여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공격한다. 이들은 위대한 역사와 거대한 영토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며 역사인식을 체계적 연구와 토론이 아닌 윤리적 당위의 영역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친일 식민사관’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린다. 상대를 ‘친일파’라는 ‘적’으로 규정하고 선동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사이비역사학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갈리는 사람들도 사이비역사학의 틀은 공유하기도 한다. 가짜 지식이 사회적으로 폭넓게 소비되는 건 반지성주의의 확산을 가리키는 위험한 징후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이비역사학은 ‘쇼비니즘(극단적 민족주의)’과 결합되어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동안 역사학계는 이와 같은 사이비역사학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그 수준이 학문적으로 매우 저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비역사학이 점차 확산되자 최근 이를 비판하는 연구자들의 적극적이고 다

양한 대응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 고대사를 전공한 소장학자들이 주축이 돼 2015년 결성한 ‘젊은역사학자모임’이 그 대표주자다. 재야사학계를 ‘사이비’로 신랄하게 비판하며 그 행태를 ‘역사 과시즘’으로 규정한 이들의 주장은 매우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⁴ 이들이 2017년 출간한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역사학』은 적지 않은 호응을 받기도 했다.

2018년 출간된 젊은역사학자모임의 두 번째 책 『욕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 왜곡과 날조로 뒤엉킨 사이비역사학의 욕망을 파헤치다』는 우리 사회 역사인식의 ‘욕망’을 드러내 철저하게 비판한다. 여기서 욕망은 사이비역사학의 왜곡된 욕망이자, 오랜 기간 주류 역사학계에서 통용된 민족주의 역사관의 욕망이다. 필자들은 사이비역사학의 확산에는 기존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역사교육이 과거에 대한 호기심과 인간과 사회에 대한 보편적 이해 이전에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지면서, 사이비 역사학 같은 가짜 역사가 퍼질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주었다는 것이다. 『욕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에 실린 여러 연구자의 글들을 따라 사이비 역사학의 뒤틀린 욕망을 넘어, 교과서의 역사지식이 내재하고 있던 민족주의적 욕망을 넘어, 고조선부터 발해까지 이어지는 한국 고대사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4 ‘젊은역사학자모임’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2016년 경향신문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정치외교 이득 따라 움직이는 게 진짜 학문 맞나? 젊은 역사학자들 방담(전문)”, 《경향신문》, 2016.04.11.

2.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과는 사뭇 다른 한국 고대사

한국 고대사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말하라고 하면 대부분 교과서에서 배웠던 지식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대륙까지 걸쳐있었던 고대 국가의 영역지도, 시시각각 변동한 삼국의 영역지도, 활발한 국제 교류를 보여주는 지도 등이다. 삼국시대 각국의 전성기로 ‘4세기 백제(근초고왕), 5세기 고구려(광개토왕, 장수왕), 6세기 신라(진흥왕)’를 꼽았던 일종의 ‘공식’을 떠올릴 수도 있다. 이처럼 역사 교과서의 사회적 영향력은 상당하다. 교과서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평생의 지식이자 정답이 되며 우리 사회 시민의 ‘상식’이 된다.

그러나 역사연구는 계속되기에, 교과서의 역사 지식이 언제나 정답일 수는 없다. 더불어 고대사를 영토 중심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생산력과 국가행정력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던 고대 사회의 영역을 현대 국가의 영토와 동일하게 사고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도 지속적인 ‘역사왜곡’ 논란의 대상이자, 대륙을 향한 욕망을 품은 사이비역사학의 주요 관심사가 바로 고대 국가의 영토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유념하며 우리가 알고 있던 교과서 속 내용과는 좀 다른 한국 고대사에 대해 알아보자.

1) 수수께끼의 나라, 고조선

고조선은 흔히 ‘한국사 최초의 국가’로 불리며, 상당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단군을 교조로 삼는 대종교와 ‘기원전 2333년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국경일’인



우리 사회에서 고조선은 정치적·종교적 상징성이 더욱 크다. 영정이 남아있을 리 없는 단군의 영정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게 그 대표적 사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천절의 존재는 우리 사회에서 고조선이 이해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조선에 대한 환상과 쇼비니즘이 결합하여 탄생한 극단적 사례가 위서(僞書) 『환단고기』다. 『환단고기』에 대해 할 말도 많지만 생략하고, 고조선은 정말 ‘우리 민족사의 순수한 원형’, ‘찬란했던 과거의 문명’일까? 기경량은 『육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의 첫 장 ‘고조선 역사,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환상에 싸인 고조선이 생각보다 알 수 없는 나라임을 알려준다.

고조선은 수수께끼의 나라다. 단군신화가 고조선 당대의 이야기인지, 고조선의 건국 시기는 언제인지, 고조선의 중심지는 어디인지, 비파형 동검·탁자식 고인돌·미송리형 토기는 고조선의 유물이 맞는지 등등에서 확실한 것이 별로 없다. 예를 들어 단군신화를 보자. 단군신화에

나오는 환웅·곰·호랑이 등은 실존했던 각 부족 형태의 정치체이며, 단군 신화의 의미는 환웅부족이 곰을 토tem으로 하는 부족과 연합해 고조선을 형성했고, 호랑이를 토tem으로 하는 부족은 배제했다는 것이란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신화의 내용을 통해 고조선의 역사적 실체를 파악하려는 시도 중 하나다. 하지만 고려 시대 문인 이충훈이 저술한 『제왕운기』에는 우리가 아는 내용과 상당히 다른, 곰과 호랑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판본의 단군신화가 나온다. 이와 같이 현재 역사학계는 단군신화가 고조선 당대부터 존재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단군신화를 통해 고조선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신화가 아닌 실체를 갖춘 고조선 관련 기록은 중국의 고대 역사서 여기저기에 산발적으로 남아있다.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기원전 4세기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관자』라는 책으로, 기록상 고조선의 존재가 확인되는 시기의 상한은 기원전 4세기 무렵임을 알 수 있다. 『삼국지』와 사마천의 『사기』를 통해 고조선의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최근 역사학계는 고조선의 중심지가 본디 랴오허 강(요하) 일대였으나, 연나라의 침공 이후 평양 지역으로 옮겨졌다는 ‘이동설’을 널리 수용하고 있다. 비파형 동검·탁자식 고인돌·미송리형 토기 세 유물이 고조선 영역의 지표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념과 달리 세 유물의 분포지는 상당히 다르다. 무엇보다 문화는 국경을 넘어서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유물로 확인되는 문화적 분포권과 고대국가의 영역을 간단히 동일시해 버리는 태도는 위험하다.



우리 사회에서 광개토왕은 대륙으로 영토를 크게 넓힌 위인으로 추앙받는다. (출처: <역사스페셜 - 광개토대왕 제1부 동방의 알렉산더, 고담덕(高談德)> 유튜브 화면 캡처.)

2) 고구려와 광개토왕비를 둘러싼 ‘역사전쟁’

‘대륙으로 뻗어 나간 우리 역사’라는 점에서 고조선과 함께 주목받는 고대 국가가 고구려다. 고구려 전성기를 이끈 광개토왕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광개토왕은 어린이 위인전은 물론 각종 콘텐츠의 단골소재로 등장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추앙받는 ‘위인’이다. 심지어 방송사에서는 광개토왕을 우리 민족사의 영토를 넓힌 ‘동방의 알렉산더’라고 소개하기도 한다.⁵ 교과서에서도 여러 군데로 뻗어 나간 지도와 함께 광개토왕·장수왕이 치세한 5세기를 고구려의 전성기로 소개하기도 한다. 안정준은 「광개토왕비 발견과 한·중·일 역사전쟁」에서 광개토왕비를 둘러싼 논쟁을 다루며 그 통념의 저변에 있는 위험한 욕망을

5 ‘동방의 알렉산더, 고담덕’이라는 제목의 KBS 역사스페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기도 했다. <신역사스페셜 70회- 광개토대왕 2부작 제1부 동방의 알렉산더, 고담덕> (2011.06.02. 방송) 참고.

드러낸다.

광개토왕비는 5세기 초반까지 고구려 수도 국내성 지역이었던 중국 지린성 지안시에 있다. 이 지역은 고구려 멸망 후 오랜 기간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다가 청나라 황실이 봉금 조치를 해제한 이후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⁶ 1883년 일본군 중위 사코우 가게노부가 지안 지역 현지 조사 임무를 수행하다 우연히 광개토왕비를 발견, 비의 전체 탁본을 구하여 일본에 반입하면서 광개토왕비문을 둘러싼 한·중·일 역사전쟁이 개시되었다.

광개토왕비문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신묘년(391년)조'라고 불리는 문구다.⁷ 일본 측은 신묘년조를 “백잔(백제), 신라는 옛날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서 조공해 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391)에 바다를 건너 백잔, □□,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했다. 이는 4세기 이래 왜가 한반도 남부 가야를 비롯해 백제·신라를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두었다는, 소위 ‘임나일본부설’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었다.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당시 추진되던 일제의 한반도 진출이 역사적으로 정당화되는 정치적 근거로도 쓰였다. 1930년대 이래로 민족주의 사학자 정인보, 북한의 김석형 등이 이를 반박하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들은 문맥에 따라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될 수 있는 한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바다를 건너 백제 등을 격파한 주체를 고구려로 해석했다. 그러나 주어·목적어를 임의로 끼워넣은 정인보·김석형의 해석은

6 봉금 조치란 만주에 기반을 둔 청나라 사람들이 중원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며 많은 한족이 이 지역의 빈 경작지를 노리고 이주해오자, 1670년 청나라 황제 강희제가 자신들의 발상지이자 신성한 지역인 만주 지역으로 민간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한 조치를 말한다.

7 百殘·新羅, 舊是屬民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 來渡口破百殘□□ 新羅以爲臣民. 以六年丙申, 王躬率口軍, 討伐殘國. 「廣開土王碑文」

분명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다.

신묘년조 해석을 두고 벌어지던 논쟁은 1970년대 글자 판독과 탁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완전히 새롭게 전환됐다. 재일교포 학자 이진희는 비문의 여러 탁본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동일한 글자들이 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여 비면에 석회가 발려 있었다는 점을 폭로했다. 이어 일본 참모본부가 광개토왕비의 글자들을 변조했으며, 일본에 남아 있는 탁본들은 조작되었다는 ‘석회 조작설’을 주장했다. 이진희의 주장은 일본 측 광개토왕비문 탁본을 일단 신뢰하며 연구를 진행해 온 한일 양국 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석회 조작설’은 중국 학자 왕젠첸에게 반박된다. 그는 보름 이상 걸리는 탁본 작업 특성상 지나가던 군인인 사코우가 직접 탁본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군인이었던 그의 지식으로 난해한 비문의 글자 조작을 하긴 어려웠다고 봤다. 결정적으로 비면에 석회를 바른 것은 탁본을 업으로 하는 현지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980년대 일본 학계의 조사 과정에서 석회를 바르기 이전에 제작한 ‘원석탁본’이 확인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신묘년조’에 큰 차이가 없었다.

광개토왕비문 연구는 1990년대에 또다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재일교포 사학자 이성시는 신묘년조 앞의 “백제, 신라는 옛날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서 조공해 왔다”라는 내용에 주목하여, 최초 일본의 신묘년조 해석을 그대로 인정하되 고구려인에 의해 작성될 당시에 이미 내용 자체가 과장·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비문에서 백제·신라는 실제 역사와 달리 이미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는 ‘속민’으로 묘사되고, ‘왜’는 실제보다 크게 과장된 채로 무찔러져야 하는 악당 세력으로 나타난다. 이 서사에서 ‘영웅’인 광개토왕은 실제보다 강력한 악당인 ‘왜’

를 무찌르게 된다. 신묘년조 해석은 일본학자의 해석이 맞을 수 있지만, 광개토왕의 업적을 극대화하려는 고구려인들의 ‘욕망’으로 이미 비문을 제작한 당대에 내용을 과장·왜곡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성시는 비문 해석을 두고 벌어진 한·일 양국 연구자들의 논쟁이 역사적 사실 자체에 대한 탐구였다기보다는 일본의 욕망과 이를 부정하려는 한국의 욕망이 서로 대립해 온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왜의 실체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의견은 조금씩 갈리지만, 현재 연구자들은 광개토왕비문이 진실만을 전한다고 보지 않는다. 광개토왕비 연구는 한·일 양국의 정치적·외교적 가치관을 투영해 온 과거 연구를 반성하는 가운데, 현재는 실제 비문을 작성한 고대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그 이면의 객관적 진실을 추적하는 단계에 와있다. 자국 중심의 역사인식을 정당화해온 민족주의적 ‘욕망’을 드러내고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3) 백제 요서진출설의 ‘비밀’

백제가 한때 한반도 남부와 대륙에 걸쳐 거대한 해양제국을 건설했다는 ‘대륙백제설’은 욕망을 자극하는 또 다른 요소다. ‘대륙백제설’의 근거가 되는 백제의 요서 진출 기록은 많은 사람에게 무한한 영감을 불러일으켜왔다. 백제 요서 진출 기록은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했을 때 백제 역시 요서를 차지하고 진평군현, 백제군과 같은 군현을 설치했다는 내용이다.⁸ ‘대륙백제설’을 다룬 이문열의 소설 『대륙의 한』은 스테디셀

8 백제국은 본래 고려(高麗)와 더불어 요동(遼東)의 동쪽 1000여 리 밖에 있었다. 그 후 고려는 요동을, 백제는 요서(遼西)를 경략하여 차지하였다. 백제가 통치한 곳은 진평군(晋平郡)



백제 요서진출설을 넘어 '대륙백제설'도 미디어에서 사실처럼 다루어, 대중의 역사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KBS 대하드라마 <근초고왕>에서는 '대륙백제설'이 주장하는 근초고왕 시기 백제의 영역이 황금빛으로 물든 지도를 볼 수 있다. (출처: <KBS 대하드라마 근초고왕 티저 예고> 유튜브 화면 캡처.)

리가 됐고, 소설을 모태로 2010년 KBS 대하드라마 <근초고왕>이 나오기도 했다. 2007년 한국사 교과서까지 백제의 요서 진출은 '역사적 사실'로 지도와 함께 꼬박꼬박 서술됐다. 그런데 백길남의 '백제는 정말 요서로 진출했나'은 이 같은 통념에 의외의 사실을 알려준다.

백제의 요서 진출은 국내 역사서에는 없고 남조의 역사 자료에서만 전한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기록으로는 그 실체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백제의 '대륙 진출'에만 주목한 연구들은 백제 요서 진출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순환을 반복해왔다. 신채호와 정정보와 같은

진평현(晋平縣)이라 한다. (『송서』 권97, 「열전」 57, 백제전)

그 나라는 본래 구려(句麗)와 더불어 요동(遼東)의 동쪽에 있었다. 진(晉)나라 때에 이르러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경략하자, 백제 역시 요서(遼西)·진평(晋平) 두 군(郡)의 땅을 점거하여 스스로 백제군(百濟郡)을 설치하였다. (『양서』 권54, 「열전」 48, 백제전)

백제는 예로부터 왔던 오랑개로 마한의 족속이다. 진(晉)나라 말에 구려(句麗)가 요동을 침략해 점유하자 낙랑 또한 요서 진평현(晋平縣)을 가졌다. (『양직공도』 백제국사조)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백제의 왕성한 해양 활동 능력에 주목하여 근초고왕 전후에 백제가 요서에 진출했다고 보았다. 백제의 요서 진출을 인정하는 연구자들은 국내 기록의 불완전성과 백제의 해양 활동 능력을 고려할 때 백제가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했던 만큼 백제의 요서 진출 정보가 남조 역사서에 기록될 수 있었다고 본다. 반면, 백제의 요서 진출을 부정하는 연구자들은 당사자인 북조 역사서와 국내 역사서에는 관련 기록이 없고 고고학적 자료도 없는 점, 멀리 떨어진 요서 지역을 백제가 바다를 건너 진출할 이유가 없는 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북방민족을 상대로 고구려의 견제를 받으며 요서로 진출하기는 무리라는 점을 든다.

그런데 백제 요서 진출 정보의 유통과정과 최종적으로 남조의 역사서에만 기록된 이유를 탐구해보면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직공도』에서 요서 진평현을 차지한 주체로 나오는 ‘낙랑’에 주목하여 요서 지역으로 ‘교치’된 낙랑을 남조 역사가들이 혼동했거나, 이들과 백제의 낙랑·대방군 유민과의 교류가 지속되면서 백제가 요서에 진출한 것으로 잘못 기록됐다는 견해가 제기됐다.⁹ 백제가 자국의 군사 능력을 과시하고 동진·남조에게 선진 문물이나 관직을 받고자 한 과정에서 전달한 정보가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백제 스스로 국익을 고려하여 윤색된 상태로 요서 진출 정보를 동진·남조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편, 백제가 실시하지도 않은 중국식 군현인 진평군현·백제군을 중국 지리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9 본거지를 떠난 이들을 새로운 땅에 정착시키며 과거에 살던 지역명을 계승해 사용하게 하는 것을 교치라고 하며, 이렇게 설치된 군현을 교군·교현이라고 한다.

4세기 백제의 성장



과거와 달리 최근 역사교과서에서는 백제의 요서 진출 사실에 논란이 있다고 솔직하게 서술하고 있다. (출처: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업 자료-1단원)

때, 이 군현이 실제 중국 영역 안에 없었을 수 있다. 여기서 낙랑·대방 군 멸망 후 한인 유민을 백제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지역에 교군·교현이 설치되었고, 흥미를 느낀 남조 역사가들이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즉 백제가 실제로 대륙에 진출한 게 아니라, 백제가 과장한 정보가 그대로 남조 역사서에 수록됐거나, 인구 이동 및 지리 정보가 실제 요서 진출로 잘못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최근 교과서에서는 백제의 요서 진출에 논

란이 있음을 인정하고 동진과 왜의 관계를 ‘교류관계’로 표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4) 도식적인 ‘공식’보다는 풍부한 이해가 필요한 삼국시대

한국 고대국가의 전성기가 각각 언제인지는 역사 시험의 단골 문제다. 앞서 ‘4세기 백제(근초고왕), 5세기 고구려(광개토왕, 장수왕), 6세기 신라(진흥왕)’ 공식을 언급한 바 있다. 사전에서는 전성기를 ‘형세나 세력 따위가 한창 왕성한 시기’로 정의한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 대체로 해당 국가가 주변 지역 다른 공동체에 비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상대적 우위 현상이 나타난 시기를 전성기로 볼 수 있다. 강진원의 「고대국가의 전성기, 언제로 봐야 할까?」를 통해 삼국시대 전성기 문제를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고구려의 전성기는 비교적 명확하게 광개토왕·장수왕·문자명왕의 치세인 5세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고구려는 (남)만주와 한반도에서 일정한 세력권을 확립하고 중국 측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았다. 당시 고구려의 국제 위상은 중국 사료에도 나온다. 『자치통감』에는 고구려의 국력이 “바야흐로 강했기” 때문에, 북위에서 사신들이 머무는 관저를 둘 때 고구려 사신의 거처를 남제 사신 다음으로 두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중국 입장에서 동이(東夷), 즉 당시 기준으로 랴오허 강 이동 지역의 패권을 인정한 ‘동이중랑장’ 내지 ‘동이교위’라는 호칭도 나타난다. 이와 같은 고구려의 전성기는 선왕들의 체제 정비와 백제의 주춤한 성장세, 한 때 화북 동부를 장악했던 후연의 몰락이 전제되었기에 가능했다.

백제의 전성기와 관련하여 흔히 연상하는 인물은 근초고왕이다.

교과서에서는 근초고왕 시기 백제가 북쪽으로 황해도 일대까지 영유하며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 고국원왕을 전사케 했으며, 남쪽으로는 전라남도 일대에 잔존하던 마한 세력을 모두 통합하며 가야 소국들에게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나온다. 무엇보다 바다 건너 중국과 일본 열도로도 힘을 뻗었다. 그런데 근초고왕 시기 정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상당하다. 해외 진출이 특히 그렇다. 근초고왕 시기 백제가 요서에 식민지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긴 어려우며, 왜에 대한 백제의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칠지도는 오히려 양국의 우호적 관계 속에 오간 외교적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마한의 잔존 세력을 병합하고 가야 소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은 『일본서기』에 바탕을 두는데, 전라남도 일대는 그 뒤에도 상당 기간 독자 문화를 향유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다만 다른 시기와 비교할 때 분명 4세기 후반 백제는 한반도 중남부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고 외교적으로도 새로운 시기를 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교과서 ‘공식’대로라면 신라의 전성기는 6세기 진흥왕대다. 하지만 진흥왕 시기 신라가 한반도의 패권을 장악했다거나 백제와 고구려를 다방면으로 압도했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삼국의 본격 정립을 보여준 시기로 보는 게 타당하다. 신라의 ‘황금시대’는 바로 삼국통일 이후다. 삼국통일의 성격에 많은 견해가 있지만, 적어도 신라의 면모는 이전과 달라졌다. 신라의 영역이 두 배 가까이 늘었고, 큰 전쟁의 위협이 사라져 안정적으로 생산량을 증대시킬 조건이 마련됐다. 사실상 신라는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가 됐다.

사료의 부족으로 당대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고대 국가의 전성기를 뚜렷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역사는 원인과 결과

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정 시기를 잘라내어 이해하는 것보다는 거시적 시야에서 전체적 전개 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유구한 우리 민족'과는 좀 다른 한국 고대사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역사’라는 표현을 많이 접해왔을 것이다. 반만년 역사 속에 외세의 침략에도 꿋꿋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냈다는 인식은 매우 널리 통용된다. 고조선부터 현재 대한민국까지를 통틀어 ‘민족의 역사’라고 보는 관점은 특정한 정체성이나 의식이 형성되어 지금까지 유지된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수많은 정치체와 종족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였다. 이 과정에서 ‘순수한 단일민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러한 ‘민족의식’은 당대 인물과 사회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민족의식은 잠시 접어두고 관련된 한국 고대사의 주제들을 살펴보자.

1) ‘민족통합’인가 아닌가? 삼국통일과 발해

우리 사회의 삼국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가장 주류적인 관점은 신라의 삼국통일이 한민족 형성의 시작이며, ‘민족통합’을 이뤄냈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삼국통일을 주도한 김춘추를 민족배반자, 사대주의자로 비난하고, 삼국통일을 한국사의 영역을 대륙에서 한반도로 축소시킨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한편, 삼국통일의 한계를 지적하고 발해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남북국시

대로 보는 관점도 있다. 발해를 중국이 자국의 역사 일부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삼국통일과 발해사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이성호의 「생존을 위한 전쟁, 신라의 삼국통일」과 권순홍의 「발해사는 누구의 역사인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신라는 고립된 지리적 위치와 가야와 같은 경쟁 국가의 존재, 지속적인 왜구의 침략으로 발전 속도가 상당히 느렸다. 겨우 국가 형태를 갖춘 후에는 강력한 고구려의 영향력을 받았기에 백제와 동맹을 맺어 돌파구를 찾기도 했다.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교통로를 직접 확보하여 교류를 지속하는 게 필수적이었다. 신라의 고민이 해결된 것은 진흥왕대다. 나제동맹군이 고구려에게서 한강 유역을 빼앗은 상황에서, 553년 신라는 과감히 백제를 배반하고 한강 하류 지역을 공격해 차지했다. 신라는 독자적인 중국과의 교통로를 확보하였지만, 이를 계기로 거의 100여 년간 백제와의 전쟁이 이어졌다. 백제 의자왕(641~660년 재위)이 즉위한 이후 신라에 더욱 치명적인 상황이 전개된다. 신라 서쪽 변경 40여 성이 함락되고 대백제 전투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대야성(경상남도 함천)이 함락된 것이다. 심지어 대야성 전투 패배의 결정적 원인은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의 행실 문제로 발발한 내부 분란이었다. 이는 김춘추 개인은 물론 김춘추를 지지하던 선덕여왕과 김유신 세력에게도 큰 정치적 타격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김춘추가 충격에 빠져 하루를 멍하니 있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온다.¹⁰ 김춘추는 멍하니 서 있는 걸로 끝내진 않았

10 겨울, 임금이 장차 백제를 정벌하여 대야성의 패배를 보복하고자, 이찬 김춘추(金春秋)를

다. 당시 신라의 지배세력은 백제 멸망 없이 신라의 안위를 도모할 수 없다는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김춘추는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동맹을 맺기 위한 외교에 나선다. 그러나 첫 번째 후보인 고구려와 두 번째 후보인 왜와의 동맹을 수립하는 데 실패한다. 마지막 대안으로 남은 게 당이었다. 당은 신라 입장에서도 그렇게 선택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었다. 선덕여왕을 두고 당이 신라에 여왕이 있다는 점을 깔보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심지어 이 시기 신라가 건립한 황룡사 9층탑의 2층은 당을 상징하는 ‘중화’(中華)다. 9층탑의 각 층에 제압해야 할 외부 세력을 할당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신라는 당을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춘추는 많은 부분을 양보하면서 당 태종의 적극적 군사 개입을 약속받는 데 성공했고, 평양 이남 땅에 대한 소유권과 신라의 통치권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 이후는 우리가 아는 대로다. 당과의 연합을 통해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켰고, 마지막에는 그동안 연합해 온 당과도 전투를 벌이며 삼국통일을 달성한다. 이상의 과정을 살펴볼 때,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전혀 같은 ‘민족’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적 아니면 동지가 되었을 뿐이다. 당과 왜도 마찬가지다. 신라는 오로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보여준다. 백제를 멸망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고구려와 왜에도 손을 뻗었고, 당을 경계하는 가운데 동맹을 맺어 목표를 이루었다. 당이 물러나

고구려에 보내 군대를 청하였다. 앞서 대야성이 패배하였을 때 도독 품석의 아내도 죽었는데, 그녀는 춘추의 딸이었다. 춘추는 딸의 죽음을 듣고 하루 종일 기둥에 기대어 서서 눈도 깜박이지 않았고, 사람이나 물건이 자기 앞을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삼국사기』 제5권 신라본기 제5 선덕여왕)

지 않자 가차 없이 당을 공격해 몰아냈다. 통념과 달리 신라가 ‘민족’을 배반하고 ‘외세’를 끌어들었다고 볼 여지는 거의 없다.

발해는 어떨까. 중국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발해를 두고 당의 지방정권이었으며 말갈의 나라였다는 근거로 자국 역사에 편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매우 많기에, 쟁점은 발해의 지배층이 말갈인가 아닌가에 맞춰졌다. 한국과 북한 연구자들은 중국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발해의 지배층이 말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관련하여 『구당서』에서는 대조영을 ‘고려별종’으로 기록한 반면, 『신당서』에서는 대조영을 ‘속말말갈’로 기록하여 오래도록 논쟁의 빌미가 됐다.

실상은 어땠을까. 발해가 고구려 유민들의 반당투쟁 및 부흥운동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대조영 세력에 의해 건국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발해 건국 과정에서 고구려 유민과 말갈은 이항 대립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협력 관계였다. 당의 인식도 마찬가지로, 당은 고구려 부흥을 막기 위해 말갈까지도 강제 이주시켰고, 당 내부에서는 이탈하는 말갈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고구려 왕족을 활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후대에 편찬된 『신당서』에서 발해에 ‘미개한 말갈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부여한 것은 발해 건국 후 이를 애써 부정하기 위한 당의 노력이었다. 그것을 근거로 현재 중국이 발해를 자기 역사로 가져가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 현재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발해가 ‘누구의 역사인가’라는 양자택일보다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의 적극적인 협력과 그 이후 이어진 발해 역사의 실상을 폭넓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알고 보니 기마민족의 후손인 우리 민족?

한국 고대국가 왕조가 왕조가 ‘기마민족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단순히 기병을 잘 운용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신라 김씨 왕실이 흉노의 후예라는 주장이다. 2009년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출토된 ‘대당고김씨부인묘지명’에는 김씨 성의 유래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나온다. 이 묘지명에서는 재당 신라인 김씨 부인의 가계를 서술하면서 ‘소호 금천씨(少昊 金天氏)’를 김씨 시조로, 그리고 먼 선조로서 흉노의 조정에 몸담았던 김일제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비석 중 일부만 비편으로 남아있는 ‘문무왕릉비’에도 신라 김씨와 김일제와의 관계를 서술하는 듯 보이는 내용이 나온다. 황금 궤짝에서 태어난 김알지의 후손이 신라 김씨 왕실이라고 알고 있던 우리에게 충격적인 내용이다.

언론에서는 이에 주목하여 ‘신라 김씨는 흉노족 후손’이라는 자극적 제목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KBS 역사추적>에서 2008년 11월 22일, 29일에 2부작으로 <문무왕릉비의 비밀 제1편 신라 김씨 왕족은 흉노의 후손인가?>, <제2편 왜 흉노의 후예라고 밝혔나?>를 방송한 바 있다. ‘대당고김씨부인묘지명’이 발굴되자 <KBS 역사스페셜>이 2009년 7월 18일 <신라 왕족은 정말 흉노의 후예인가>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바도 있다. 어찌면 신라 김씨 왕족은 기마민족의 뜨거운 피를 이어받아 그 힘으로 삼국통일을 이룩했던 거 아닐까?

최경선의 ‘신라 김씨 왕실은 흉노의 후예였나’는 그 환상을 산산이 부숴준다. 먼저 소호 금천씨와 김일제에 대해 알아보자. 소호 금천씨는 중국 전설상의 성인인 삼황오제 가운데 한 명으로, 오행의 하나인 ‘금(金)’을 내세워 김씨의 시조로 일컬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일제는 흉노

한 부족의 태자였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그는 한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궁에서 말 기르는 노예로 있다가 무제의 눈에 띄어 출세하여 김 씨 성을 하사받았다. 그 이후 김일제는 이민족 묘지명에서 흔히 이민족 으로서 중국 왕조에 귀순해 충성한 인물을 비유할 때 등장한다.

다음으로 신라 김씨 왕실의 시조와 계보는 신라 왕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몇 차례씩이나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신라 김씨의 유래와 관련해 고려 시대에 두 종류 전승이 있다고 전한다. 여기서 김알지 설화와 함께 소호 금천씨의 후예라는 설이 함께 소개된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김유신비’와 ‘삼랑사비’에 소호 금천씨의 후예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알지의 후예라는 인식이 어느 시기부터 소호 금천씨의 후예라는 인식으로 바뀐 것이다. 당시 신라 왕실이 중국 전설상의 성인을 시조로 내세우는 것이 통치 정당성 확보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시조 인식은 해공왕대 들어 다시 미추이사금을 시조로 내세우면서 또 다시 변화한다. 이와 같이 어느 한 시기의 자료에서 보이는 계보를 절대적 사실로 보는 일은 위험하다.

대당고김씨부인묘지명에 나오는 계보와 인식은 재당 신라인으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한 결과일 수 있다. 이미 교포 4세였던 김씨 부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나라 사람이었을 것이다. 진짜 신라 김씨 왕실이 흥노의 후예가 아니라는 것이다. 신라 김씨 왕실의 선조에 대한 여러 기록 중 김일제가 선조였다는 이야기에 주목한 것은 우리 민족의 범위를 확장하고 싶은 욕망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김일제는 이민족으로서 중국 왕조에 충성을 바친 상징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4. 사이비역사학의 ‘낙시터’, 낙랑군 문제와 임나일본부

지금까지 민족주의적 한국 고대사 인식에 기여한 교과서 속 역사 서술과 우리 사회의 통념적인 역사인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봤다. 현재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전제한 민족주의 역사관은 사이비역사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기 쉽다. 사이비역사학이 위대한 역사와 거대한 영토에 집착한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한국 고대사의 영역을 더욱 크고 넓게 보고 싶고, 타국에 비해 우리 역사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욕망은 사이비역사학의 주장에 좋은 자양분이 되었다. 식민사관을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체계적 연구를 진행 중인 역사학계는 마치 ‘더 매운 맛’ 식민사관 비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이비역사학의 선동에 의해, 여전히 식민사관의 지배하에 놓인 것처럼 왜곡되었다.

그러나 사이비역사학은 역사학의 기초인 연구사 검토와 사료 비판은 외면하고 입맛에 맞는 자료만 취사선택하여 실제 역사상을 왜곡한다. 단순히 사료를 선별할 뿐만 아니라 주장에 어긋나는 자료는 아예 조작이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사이비역사학을 학문으로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낙랑군 위치 문제와 임나일본부 논쟁이다. 이제 사이비역사학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자.

1) 쏟아지는 증거도 부정하는 사이비역사학의 실체

기경량의 「낙랑군은 한반도에 없었다?」는 낙랑군 위치 비정(比定) 문제에서 역사연구의 기초도 지키지 않는 사이비역사학의 수준을 보여준다. 기원전 109년 한나라 무제의 침공으로, 1년에 걸친 전쟁 끝에 고조

선은 기원전 108년 멸망했다. 낙랑군은 고조선 멸망 후 한나라에 의해 설치된 네 군 중 하나다. 낙랑군은 오랜 기간 존속하다가 313년 고구려 미천왕에게 공격을 받아 고구려에 편입된다. 그 위치는 많은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를 근거로 평양 지역에 있었다고 보는 게 통설이다. 정약용, 안정복과 같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과 그 이전 우리 역사서들은 물론, 현대 역사학계 또한 당대 사료인 『삼국지』와 약간 뒤 시기의 『후한서』를 종합하여 낙랑군 위치를 평양 지역으로 보아왔다. 이는 고고학적 증거와도 일치한다. 평양 지역에서는 수많은 낙랑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대놓고 ‘낙랑’이라는 문자가 적혀 있는 것이 적지 않다. 북한 학계는 이미 1990년대 평양시 낙랑 구역 안에서 2600여 기에 달하는 무덤에서 1만 5000여 점에 달하는 유물을 수습하였으며, 낙랑군 소속 현의 인구를 기록한 행정 문서까지 출토되었다.

놀랍게도 사이비역사학에서는 이를 격렬히 부정하며 식민사학이라 매도한다. 그 대표주자가 이덕일이다. 그는 낙랑군 평양설이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 낸 왜곡이며, 식민사학을 계승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아무 의심 없이 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어떤 근거일까? 사이비역사가들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기에 작성된 가장 오래된 자료인 ‘1차 사료’를 통해 낙랑군이 요서 지역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들이 역사서의 본문과 후대인이 덧붙인 주석도 구별하지 못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2015년 11월 16일 국회 동북아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 상고사 대토론회 - 한군현 및 패수 위치 비정에 관한 논의”에서, 이덕일은 『한서』나 『후한서』 같은 ‘1차 사료’의 내용을 장황하게 열거하며 강변하다가, 그것이 당나라 때 덧붙여진 주석임을 다른 토론자에게 지적받고 창피를 당하는 대참사를

겪기도 했다.¹¹ 참고로 당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덕일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고대 영토를 더 크게 보자고 주장했다.

사실 313년 이후의 내용을 담은 중국 역사서에서 낙랑군과 조선현이라는 명칭이 요하 일대에 산발적으로 등장하긴 한다. 313년 낙랑군이 멸망하자 선비족의 수장 모용외는 자신들에게 망명한 유민들을 위해 영토 내에 새롭게 낙랑군을 설치해주었고, 이 내용이 중국 역사서인 『자치통감』에 전한다. 이처럼 본거지를 떠난 이들을 새로운 땅에 정착시키며 과거에 살던 지역명을 계승해 사용케 하는 것을 ‘교치’라고 하며, 이렇게 설치된 군현을 교군·교현이라고 부른다. 즉, 본래 낙랑군이 그 지역에 존재한 게 아니라, 아메리카에 이주한 유럽인들이 영국 지명에서 따와 ‘뉴욕’을 명명한 맥락과 비슷한 경우이다. 그러나 사이비 역사가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편적 기록들만을 보고 낙랑군이 처음부터 그 지역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분명한 물적 증거인 고고학 자료에 대한 사이비 역사가들의 태도는 어떨까? 이들은 이 자료들이 낙랑군과 상관없다고 애써 우기거나 위조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이덕일은 평양 지역에 존재하는 거대한 낙랑고분군이 고구려에서 잡아 온 중국인 포로들의 것이라고 강변한다. 무덤에서 출토된 칠기에는 아예 연대가 적혀있는 것만 수십 점에 달한다. 그 중 제작시기가 가장 이른 것은 기원전 85년이며, 다른 대부분도 기원 전후의 연대가 적혀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11 토론상대자인 윤용구는 이덕일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한서』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한서』에 주를 붙인 거예요. … 이걸 『후한서』의 기록이 아니에요. 여기 주가 달려 있는… 괄호 친 건 다 주예요.”라고 지적하였다. (2015년 11월 16일, “한국 상고사 대토론회” 녹취, 책 본문 45쪽에서 재인용.)

에 건국되었다. 이덕일의 주장에 따르면, 건국조차 하지 않은 고구려가, 이 시기에 이미 평양 일대를 편입하여 수만 명의 중국인 포로들을 잡아 정착시켰으며, 그 포로들은 주인인 고구려인보다 훨씬 호화로운 무덤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무조건 대륙에 우리 고대국가를 위치시키려는 욕망에 매몰된 사이비역사학의 연구 역량은 이렇게 천박하다.

2) 장관님까지 낚았던 임나일본부설 문제

일본이 고대에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이 양국 학자들에 의해 학문적으로 공식 폐기됐다. 본지가 22일 입수한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최종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양국 학자들은 서기 4~6세기 왜(倭)가 가야에 군대를 파견해 정치기관인 ‘임나일본부’를 세웠다는 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데 합의했다. (“日학계 ‘일본의 가야 지배설’(임나일본부설) 폐기”, 《조선일보》, 2010.03.23)

도 후보자는 이어 “일본이 임나일본부설에서 임나를 가야라고 주장했는데, 일본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 주장을 쓴 국내 역사학자들 논문이 많다.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관련 자료들을 찾아냈다”면서 “가야사에서 일본 쪽 주장이 일리 있다는 국내 학자들이 있어서 쟁점이 생긴 상황인데, 학문적 논쟁은 계속해나가면 된다. 일본 쪽 주장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 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역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종환, ‘역사관 비판’ 반박 ‘싸울 땐 싸우겠다’”, 《한겨레》, 2017.06.06.)

상반된 사실을 전해주는 두 기사를 보면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 역사학계는 정말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추종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2010년 한국과 일본 학자들이 임나일본부설 공식 폐기에 합의했다는 말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역사학자는 어디에도 없다. 해답을 얻기 위해 위가야의 「임나일본부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통해 임나일본부설을 둘러싼 논쟁을 자세히 알아보자.

임나일본부설을 요약하자면 4세기 중반에 왜의 야마토(大和) 정권이 가야 지역에 임나일본부라는 통치기구를 설치해 200여 년간 한반도 남부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했다는 주장이다. 임나일본부가 처음 등장하는 기록은 일본의 역사서 『일본서기』다.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는 학설로서 임나일본부설을 체계화하였다. 그는 『일본서기』의 진구기 49년조(369년) 가라 7국 평정 기사를 시작으로 야마토정권의 임나 경영이 시작됐다고 보았으며, 이를 앞에서 살펴본 ‘광개토왕비’ 신묘년조와 『송서』 왜국전에 나오는 왜국왕 ‘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육국제군사’ 벼슬 인정 기록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봤다. 스에마쓰는 4세기 이후 야마토정권이 임나를 직접 지배하고 백제와 신라를 간접 지배했다는 역사상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의 학설은 당시 정설로 인정받았다.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일본서기』 기사는 일본에 유리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한국과 중국 사료를 통해 어느 정도 검증은 갖춘 그의 주장을 일본 역사학계에서는 객관성·실증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백제가 일본에 칠지도를 바쳤다는 진구기 52년조(372년) 기록을 입증하는 칠지도가 발견되며 또 다른 근거가 되었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건 경성제국대학에서 스에마쓰의 제자였던 김석형이다. 김석형은 1963년 북한 학술지 『력사과학』에 「삼한·삼국의

일본 렬도 내 분국들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그는 『일본서기』에 한반도에서 있었다고 기록된 사건 대부분은 기원전 수세기부터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건너간 이주민들이 건설한 분국과 야마토 정권 사이에 일본열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기록들은 오히려 한반도 여러 세력이 일본열도를 경영한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또한 임나일본부는 야마토정권이 일본 열도의 가야계 분국에 설치한 기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석형의 논문은 세 번에 걸쳐 따로 번역될 만큼 일본 역사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의 주장은 고고학 자료를 언급하지 않은 스에마쓰와 달리 풍부한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¹² 무엇보다도 김석형이 스에마쓰와 같은 문헌 기록들을 이용해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았다는 사실은 일본 역사학자들을 큰 고민에 빠뜨렸다. 그들은 열심히 김석형의 주장을 비판했지만, 이는 스에마쓰의 『일본서기』 해석에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비록 이후 연구가 진행되며 그의 학설은 생명력을 거의 상실했지만, 본격적인 『일본서기』 사료 비판의 길을 열었다는 학설사적 의미가 크다.

한국 역사학계에서도 1970년대부터 『일본서기』 사료 비판을 통해 본격적인 임나일본부설 비판이 이루어졌다. 시작은 천관우의 연구였다. 그는 진구 49년조의 가라 7국 평정 기사에 주목하여 왜가 신라와 가라를 공격할 때 중요한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이 백제 장군이라는 점이 이상할뿐더러, 무엇보다 평정한 지역을 백제에 내려주는 것은 납득

12 한편, 식민지 시기 일본인 고고학자들은 임나일본부설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일본인 고고학자 하마다 고사쿠는 “지금 갑작스럽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 임나라는 것이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보는 선입견은 이제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책 본문 229쪽.)

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그같이 인심 좋은 국제 관계가 고금동서에 있을 수 있는 일일까.” 그는 백제가 멸망한 후 왜로 건너간 사람들이 『일본서기』 편찬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조상이 모국인 백제에서 활동한 일들을 마치 왜에서 백제로 건너가 활동한 일인 것처럼 바꿔 놓았거나, 그렇게 바뀌었던 기록들이 『일본서기』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임나 관계 기사들은 사건의 주체를 왜에서 백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임나일본부 또한 백제의 가야 진출 과정에서 설치한 파견군 사령부 같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김현구도 같은 관점에서 『일본서기』 사료 비판을 시도했다. 그 또한 『일본서기』에 기록된 야마토의 임나 경영이 사실은 백제의 임나 경영을 보여준다고 봤다. 백제 임나 경영의 담당자는 진구 49년조에 등장하는 목라근자인데, 그의 아들 목만치가 왜에 정착하면서 『일본서기』에서는 목씨가 중심이 된 임나 경영을 야마토 정권의 것으로 바꿔 기록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본서기』 임나 경영 기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시대별 전개상황을 정리했으며, 일본식 이름을 가진 인물들은 백제가 고용한 왜인 계통의 백제 관료로 파악하여 당시 백제와 왜의 관계를 선진 문물을 주고 군사원조를 제공받는, 일종의 용병관계로 보았다. 임나일본부는 지방장관이나 이주한 백성들, 그리고 주둔군을 관리하는 기구로 보았다.

천관우와 김현구의 연구는 『일본서기』 한반도 관계 기사가 백제와 야마토정권의 관계 중심 기록임을 증명했으며, 임나일본부를 백제가 가야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설치한 기구로 보았다. 그러나 가야사 입장에서 본다면 지배의 주체를 일본에서 백제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실제로 1980년대를 전후로 가야 지역 발굴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가야 지역이 5세기 후반까지 독자성을 유지했음이 증명

됐다. 일본은 물론 백제의 가야 지배 또한 주장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서기』 진구기 기록이 어디까지 사실인 걸까? 이를 규명하기 위해 역사학자들은 『일본서기』라는 사서의 성격 문제에 주목했다. 『일본서기』는 일본 역사서임에도 한반도, 특히 백제 관련 내용이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백제 멸망 후 일본에 정착한 백제계 도래인에 의해 편찬된 백제계 사서가 핵심 자료로 이용되어서다. 한편, 『일본서기』는 8세기 일본에서 천황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편찬된 것으로, 다분히 일본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따라서 『일본서기』에 기록된 임나, 즉 가야의 모습은 백제인의 시각과 일본인의 시각에서 이중적으로 굴절된 상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구기 기록을 통해 임나일본부의 실상을 이야기하기 어려우며, 『송서』 왜국전의 ‘○○국제군사’라는 칭호가 실제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더해, 앞서 살펴본 대로 광개토왕비 이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면서 스에마쓰의 임나일본부설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

잠시 임동민의 「칠지도가 들려주는 백제와 왜 이야기」를 통해 임나일본부설의 근거가 되었던 칠지도도 살펴보자. 칠지도는 일본 나라현 이소노카미 신궁에서 발견된 백제 시대 칼이다. 칠지도에 새겨진 명문을 해석하면 백제에서 이 칼을 만들어 후왕인 왜왕에게 주었다는 내용으로, 한국에서는 이를 백제가 왜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했다고 보아왔다.¹³ 반면, 일본에서는 『일본서기』 기록과 종합해 백제가 일본에 칠지도

13 (앞면) 泰△四年五月十六日丙午正陽造百練鑊七支刀出(生)辟百兵宜供侯王△△△△祥(作), (뒷면) 先世以來未有此刀百濟王世子奇生聖音故爲倭王旨造傳示後世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칠지도(七支刀))]

를 바꿨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칠지도 연구는 백제와 왜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칠지도와 『일본서기』 각각에 나타나는 백제와 일본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달리, 백제와 왜는 좋은 외교파트너였을 가능성이 높다. 백제는 후방의 안정과 외교적·군사적 지원을 위해, 왜는 선진 문물 도입과 국제무대 데뷔를 위해 서로를 원했던 것이다. 각각의 기록에 남아있는 엄격한 상하관계와 달리 칠지도는 외교적 선물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임나일본부는 완전한 허상이었을까. 일본이란 국호와 부라는 관청이 모두 7세기 후반에야 등장한다는 점에서 『일본서기』 6세기 기록에 나타나는 ‘임나일본부’라는 용어 자체는 조작이지만, 그 기록을 모두 부정하기엔 정황이 너무 구체적이었다. 이에 역사학자들은 안라국을 중심으로 외교사절의 성격을 보인 임나일본부의 활동을 볼 때, 긴메이 15년조(554년)의 ‘재안라제왜신등’(在安羅諸倭臣等, 안라에 있는 왜의 여러 사신)이라는 기록이 임나일본부라 기록된 존재의 원형을 가리킨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일본서기』에 남아있는, 임나일본부를 일본식 발음으로 ‘아마토노미코토모치’라고 읽으라는 표기에도 주목하였다. 이때의 ‘미코토모치’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돼 담당할 일이 끝나면 왕에게 돌아오는 사신을 가리킨다. 이 역시 임나일본부라 기록된 존재가 외교사절이었음을 알려 주는 근거가 되었다. 세부적으로 쟁점은 있지만, 현재 임나일본부설을 다루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자들 대부분은 이처럼 임나일본부라 기록된 존재의 실상을 외교사절이라는 성격에서 찾고 있다. 아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 지역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에 동의하는 역사학자는 한일 양국을 통틀어 어디에도 없다. 양국 학자가 임나일본부설 폐기에 합의했다

는 2010년 신문 기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시 최근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도종환 장관은 어째서 국내 역사학자들이 임나일본부설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을까. 실마리는 도종환 장관의 인터뷰에서 ‘임나=가야’라는 주장이 곧 임나일본부설 추종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는 부분이다. 『일본서기』의 임나가 한반도의 가야 지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주장은 김석형이 한 것이지만, 이는 김석형의 학설이 생명력을 잃으면서 자연스럽게 무대 뒤편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일부 사이버역사가들은 이 주장을 다시 무대 위로 올렸다. 그들은 『일본서기』 스진기 기록을 활용하여 임나의 위치를 쓰시마 섬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역사학자들은 스진기 기록의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기록은 심지어 스에마쓰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사이버역사가들은 가야가 멸망한 562년 이후에도 『일본서기』에서 임나의 존재가 확인되므로 임나는 가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서기』에는 임나의 멸망이 기록된 긴메이기 23년조(562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나의 존재를 기록하는데, 이는 무언가 사료가 잘못됐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일본서기』 편찬자의 임나 관념에 따른 실체 없는 허구라는 연구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 사이버역사가들의 주장은 기초적인 사료 비판 문제를 외면하고 자꾸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임나를 가야 지역의 한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이는 여러 기록을 교차 검증한 결과다. 광개토왕비의 내용을 통해 임나가라와 안라가 한반도 남부, 신라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야 출신 강수가 자신을 ‘임나가량인’이라고 한 『삼국사기』의 기록, 진경대사의 선조가 임나의 왕족이라는 창원 봉림사지 진경대사탑비의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송서』를 비롯한 여러 중국 측 기

록을 통해 임나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학자들이 임나를 한반도의 가야 세력 전체 혹은 그중 한 세력을 가리키는 말로 보는 것은 임나일본부설을 추종한 결과가 아니라 여러 사료를 종합한 결론이다.

최근 사이비역사가들은 학계 연구를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국내 기록인 『삼국사기』를 무시하고 『일본서기』만을 믿고 한국 고대사 연구에 이용하는 것도 식민사학이라며 비난한다. 그런데 가야 유적은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동부의 섬진강 유역은 물론 금강 상류 유역에서 발견되는데, 이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기록은 『일본서기』에만 있다. 『일본서기』가 『삼국사기』보다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적절한 사료 비판을 거치면 우리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나일본부설이 대중적으로 조선총독부와 같은 지배기관을 연상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 역사학자 대부분은 임나일본부에서 조선총독부를 떠올리지 않는다. 그 반면 사이비역사가들은 여전히 임나일본부를 조선총독부와 같은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그들에게 임나일본부설은 한반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에, 우선 임나일본부를 『일본서기』의 조작으로 치부한다. 그 근거로는 김석형의 분국설을 변용해 『일본서기』에 기록된 삼국과 임나는 쓰시마 섬에 있던 분국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때는 『일본서기』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인정한다. 임나일본부를 우리 역사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이들의 현실적 목적에, 역사학의 기본인 사료 비판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한편, 임나일본부에서 조선총독부를 연상시켜 현실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 집단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이 만들어 낸 논리가 식민사관이며 그 구체적인 결과물이 임나일본부설이다. 사이비역사가들은 열심히 임나일본부

설을 비판한다고 자부하지만, 결국 확인되는 것은 주어진 다른 식민사관의 동어 반복일 뿐이다. 사이비역사가들의 현주소는 바로 식민사학의 '슬픈 변종'이다.

5. 결론

이상을 종합해볼 때 한국 고대사 이해에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현대의 정치적·외교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 사관은 오히려 고대사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당대의 역사적 주체와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여러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고고학적 증거까지 종합하여 역사상을 파악해야 한다. 특정 사료를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할 경우 매우 큰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 셋째, 이미 다 결론이 났을 거라는 고대사에 대한 통념과 다르게, 연구는 계속 진전되고 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역사지식이 전부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사이비역사학은 왜곡된 역사상을 그려낼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 김대현의 「환단고기에 숨은 군부독재의 유산」을 보자. 1960년대 말 창간된 반공 잡지 《자유》가 1975년 '우리국사찾기협의회'가 발족한 이후 사이비역사학을 수용하여 반공주의와 소비니즘적 역사인식이 이어진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국사찾기협의회는 단군 조선은 실재의 상고시대이고, 그 강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연해주, 아무르강, 바이칼 호, 중원 대륙을 아울렀으며, 교과서는 단군신화설과 한반도 내 한사군설을 개정하여 대륙사관에 맞게 집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우리국사찾기협의회에는 출판사 '자유사'의 핵심인물인 박창암

을 포함하여 사이비역사학의 핵심 이데올로그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의 글이 《자유》의 대부분을 채웠다. 참고로, 박창암은 만주군 간도특설대에 복무하고 5.16쿠데타에도 참여했다가 소위 ‘반혁명사건’에 연루되어 구속과 석방된 전력을 가진 인물로, 그의 호는 무려 ‘만주(滿洲)’였다.

이들은 ‘국민정신혁명의 기본’으로 ‘민족사관’을 주장하며, 자유와 민족 개념을 상고사로부터 뿌리내린 하나의 가치관으로 묶어내려고 했다. ‘민족사관’의 반대편에 공산주의 유물사관을 놓고 이에 대한 사상적 대비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 9000년을 아우르는 유라시아 규모로 거대한 역사와 영토를 주장한 이들에게 ‘상고사’는 냉전 질서 속 사상과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민족의 자긍심을 위한 것이었다. 그 속에서 민족주의에서 핵심으로 강조된 것은 혈연의 통일성과 순수성이었다. 그들의 ‘9천 년 민족사관’은 혈연적 원리주의와 충성하는 국가주의 등 민족주의의 가장 어두운 부분만을 모아둔 집합체였다.

우리는 과거의 파시즘에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다. 합리주의에 반대하고 ‘민족공동체’를 부르짖으며 극단적인 인종주의를 내세웠던 파시즘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패망했다. 사이비역사학은 파시즘의 어떤 부분과 분명히 닮아있다. 반지성주의가 점점 확산되고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 ‘역사왜곡’ 문제가 언제나 뜨거운 현제 우리 사회는 사이비역사학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과학적·합리적 역사인식이 필요한 때다. 학창 시절에 배운 가물가물한 역사지식이 대부분인 우리에게 『욕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는 사이비역사학과 잘못된 민족주의적 욕망에 ‘면역’이 되는 ‘백신’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

